KINU 정책연구시리즈 21-03

한중 보건 협력과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활성화 방안

황태연

KINU 통일연구원

● KINU 정책연구시리즈 21-03

한중 보건 협력과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활성화 방안

연구책임자 : 황태연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KINU 통일연구원

한중 보건 협력과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활성화 방안

KINU 정책연구시리즈 21-03

발 행 일	2022년 2월 23일
저 자	황태연
발 행 인	고유환
발 행 처	통일연구원
편 집 인	평화연구실장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6
홈 페 이 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세일포커스 (02-2275-6894)
인 쇄 처	명문인쇄공사 (02-2079-9200)
I S B N	979-11-6589-089-6 93340
가 격	비매품

ⓒ 통일연구원, 2021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한중 보건 협력과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활성화 방안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차례

요약 ····· 9

Ⅰ. 서론 ····· 1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3
2. 연구 방법 및 구성 ····· 17

Ⅱ.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추진 경과 및 평가 ····· 23

1.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추진 경과 ····· 25
2.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특징 및 한계 ····· 32

Ⅲ. 동북아 주요 6개국의 코로나19 대응 및 협력 ····· 39

1. 한국 ····· 41
2. 중국 ····· 46
3. 미국 ····· 54
4. 일본 ····· 61
5. 러시아 ····· 66
6. 몽골 ····· 71
7. 소결 ····· 80

Ⅳ. 한중 방역·보건 협력 및 특징 ····· 83

1. 한중 방역·보건 협력 현황 ····· 85
2. 한중 방역·보건 협력 제약요인 ····· 90
3. 한중 방역·보건 협력 의미 ····· 92

Ⅴ.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활성화 방안 ····· 99
1. 한중 보건 협력 개선과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강화 ····· 101
2. 북한의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참여 및 협력 ····· 103
3.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활성화 ····· 117
4. 소결 ····· 121

참고문헌 ····· 124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29

표 차례

〈표 Ⅱ-1〉 동북아 역내 코로나19 관련 통계(2021년 12월 3일 기준) …… 25
〈표 Ⅱ-2〉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관련 참가국 회의 …… 28
〈표 Ⅱ-3〉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관련 국내 각종 회의 …… 29
〈표 Ⅲ-1〉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종류 및 국내 확진자 수 …… 43
〈표 Ⅲ-2〉 미국 보건위기 대처 현황 …… 56
〈표 Ⅲ-3〉 일본의 백신 직접 공여 실적(2021년 11월 1일 기준) …… 65
〈표 Ⅲ-4〉 일본의 코백스 퍼실리티 백신 공여 실적(2021년 11월 1일 기준) · 66
〈표 Ⅲ-5〉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참여국 간 비교평가(상/중/하) …… 82
〈표 Ⅳ-1〉 한중 코로나19 대응 관련 주요 협력 현황 …… 85
〈표 Ⅳ-2〉 해외 기부물품 접수 및 배분 현황(2020년 6월 5일 기준) …… 86
〈표 Ⅳ-3〉 중국의 대한국 기부물품 접수 및 배분 현황(2020년 6월 5일 기준) · 87
〈표 Ⅳ-4〉 중국의 코로나19 관련 상위 단어 빈도표 …… 95
〈표 Ⅴ-1〉 코백스의 북한 배정 백신 현황 …… 111
〈표 Ⅴ-2〉 코로나19 관련 중국과 북한의 관계 상위 단어 빈도표 …… 113

그림 차례

〈그림 Ⅱ-1〉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관련 주요 키워드 네트워크 ····· 35
〈그림 Ⅲ-1〉 K-방역 3T (Test-Trace-Treat) 국제표준화 분야(18종) ····· 42
〈그림 Ⅲ-2〉 중국의 코로나19 관련 주요 키워드 네트워크 ····· 48
〈그림 Ⅲ-3〉 전 세계 중국 백신 분포도(2021년 7월 28일 기준) ····· 52
〈그림 Ⅲ-4〉 미국의 코로나19 관련 주요 키워드 네트워크 ····· 58
〈그림 Ⅲ-5〉 일본의 코로나19 관련 주요 키워드 네트워크 ····· 63
〈그림 Ⅲ-6〉 러시아의 코로나19 관련 주요 키워드 네트워크 ····· 68
〈그림 Ⅲ-7〉 몽골의 코로나19 관련 주요 키워드 네트워크 ····· 75
〈그림 Ⅳ-1〉 중국의 코로나19 관련 단일 단어 비교분석 ····· 94
〈그림 Ⅳ-2〉 중국의 코로나19 관련 물적 교류 상호 단어 비교분석 ····· 98
〈그림 Ⅴ-1〉 북한의 코로나19 관련 주요 키워드 네트워크 ····· 107
〈그림 Ⅴ-2〉 코로나19 관련 중국과 북한의 관계 단일 단어 비교분석 ··· 112
〈그림 Ⅴ-3〉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 활성화 ····· 121

요 약

코로나19의 기원부터 K-방역이라는 성공적 방역모델에 이르기까지 그 중심에 있는 동북아 지역은 유난히 미중 갈등이라는 '강대국 정치(power politics)'가 강하게 투영되는 곳이다. 한국은 이러한 환경에 자유롭지 못하며 협력을 더욱 필요로 하는 비전통 안보 영역까지 제한받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 선포 이후 감염병의 초국경적 확산에 대한 세계적 경험을 통해 보건안보 위협에 대한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상호 이해관계의 고리는 풀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감염병 대응은 국가, 지역을 넘어서는 전 세계적 문제로 국가 간 상호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 특히 동북아 지역은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오래전부터 월경성 대기오염이나 공유수역 오염 등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동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한 경험이 있다. 동시에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비전통 안보 분야에 대한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이다. 동북아의 주요 국가인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는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 증가를 심화하여, 지역적 차원에서 이에 대한 예방 및 사후 대책 메커니즘 확립을 통한 환경오염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과 인적·경제적 교류가 가장 활발한 국가는 중국이며, 중국의 북한과의 교류 상황을 감안한다면 중국과의 보건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시점에 동북아 역내 공동대응을 위한 지역 협력체 구상으로 2020년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하였고, 코로나19와 같은 보건안보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 협력체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6개국이 참여하여 출범하였다.

요 약

한국은 감염병 대응과 관련하여 성공적 방역모델로서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으며, 많은 국가가 한국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협력체계 구축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이 제안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는 이러한 노력을 보여주는 지역 차원의 다자협력체로서 신종 감염병에 대한 공동의 도전과제 대응 과정에서 협력 관행을 축적해 역내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 제도화 진전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감염병 대응을 시작으로 점진적·단계적으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가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 능동적·선제적 외교 추진 사례로 활용이 가능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 미중 경쟁의 심화 구도 속에 신종 감염병, 기후변화 등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본적인 양자협력 및 한국 주도의 소그룹 다자협력을 통해 역내 지정학적 갈등 요인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역내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통해 북한의 참여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해 역내 국가들과 대화·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코로나19, 비전통 안보, 보건 협력, 다자협력, 한중 협력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발생한 지 어느덧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전 세계의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오미크론(Omikron)과 같이 새로운 변이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며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의 종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제는 코로나바이러스가 다른 질환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사회적인 수준에 따라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단순한 전염병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논리로 팬데믹이 아니라 '신데믹(syndemic)'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처럼 생물학적 접근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 세계보건기구(WHO)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의 확진자 수는 이미 2억 6,356만 명 이상을 넘어섰고 그중 사망자 수는 523만 명(2021년 12월 3일 기준)을 초과한 가운데, 한편으로는 백신이 개발되어 전체 인구의 42.13%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등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2]

코로나19의 기원에서부터 K-방역이라는 성공적 방역모델에 이르기까지 그 중심에 있는 동북아 지역은 유난히 미중 갈등이라는 '강대국 정치(power politics)'가 강하게 투영되는 곳이다. 한국은 이러한 환

1) 1990년대 의료인류학자 메릴 싱어(Merrill Singer)가 처음 '신데믹(syndemic)'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생물학적 접근은 물론 사회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으로 병의 예후나 경과가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함. 권준수, "코로나는 팬데믹(pandemic)이 아니라 신데믹(syndemic)이다," SNU Responds to COVID-19, 2021.5.28, 〈https://www.snu.ac.kr/coronavirus/research?md=v&bbsidx=132185〉 (검색일: 2021.12.5.).

2) WHO, "WHO Coronavirus(COVID-19) Dashboard," 〈https://covid19.who.int/〉 (검색일: 2021.12.5.).

경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상호 협력을 더욱 필요로 하는 비전통 안보 영역에까지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세계적 팬데믹(pandemic) 선포 이후 감염병 확산에 대한 세계적 경험을 통해 보건안보 위협에 대한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상호 이해관계의 고리는 풀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팬데믹 상황이 보여주듯 감염병은 일개 국가, 지역을 넘어서는 세계적 차원의 문제이자 정치·경제와 연관된 주요 이슈로 국가 간 상호 협력을 통한 해결이 더욱 필요하다. 특히 동북아 지역은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오래전부터 월경성 대기오염이나 공유수역 오염 등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동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한 경험이 있다. 동시에 코로나19 대유행과 함께 비전통 안보 분야에 대한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동북아의 주요 국가인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는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 증가를 심화하여 지역적 차원에서 이에 대한 예방 및 사후 대책 메커니즘 확립을 통한 환경오염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첫 확진자 역시 중국 우한(武漢)시에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여성으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한국에 상륙한 것이다. 인적·경제적 교류가 가장 활발한 중국과의 보건안보 협력은 더욱 중요하며, 이를 통해 동북아 역내 다자협력을 강화·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점에 동북아 역내 공동대응을 위한 지역 협력체 구상으로 2020년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이하 동방협)'을 제안하였고, 이것은 코로나19와 같은 보건안보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협력체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6개국이 참여하여 출범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팬데믹 하에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북아 역내 보건안보 위협의 확대로 역내 국가 간 양자·다자협력 등 상호 공동대

응 강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중 양자 간 보건 협력은 동북아 역내 보건안보 위협을 해소하는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며, '동방협' 활성화를 통해 동북아 역내 국가들과 대화·협력을 촉진하고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과 인접한 역내 국가들과 보건안보 위협에 맞서 양자협력을 바탕으로 다자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고 상호 보완하며 확대·발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신종 감염병에 대한 공동의 도전과제 대응 과정에서 협력 관행을 축적해 역내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모델로서 양자·다자협력 제도화 진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다자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동방협'을 통한 보건 협력이 동북아 역내 평화·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방협'의 협력 강화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선언 이후에도 새로운 변이바이러스의 지속적인 출현과 함께 팬데믹 상황의 장기화는 인간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만 하더라도 2차 대전의 사망자 수와 비교될 정도로 전염병으로 인한 안보위협은 전쟁과도 같이 인류에 가장 큰 위협 중 하나가 되었다. 또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와 같은 비전통 안보 영역이 이제는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자리 잡으며 일개 국가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국제적 차원의 협력을 통해서만이 해결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동방협'은 바로 인간안보의 문제를 국제적 협력을 통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대안으로 인류의 위협인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방역 등의 문제를 양자 간의 일회성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자적 틀 속에서 지속 가능한 의료보건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따라서 '동방협'의 활성화 방안 및 역내 보건안보 다자협력 제도화 및 활성화 마련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안정

적으로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동방협'에 참여하는 동북아 역내 국가들의 코로나19 방역 및 대응에 대해 살펴보고, 국제적 협력이 강조되는 만큼 각각의 국가가 추진하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국제협력 상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인적·경제적 교류가 가장 활발한 중국과의 보건안보 협력 현황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한중 협력 방안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한중 협력 강화 및 북한의 참여를 견인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여 역내 다자협력을 통해 남북 간 대화·협력과 동북아 평화·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동북아 보건안보 공동대응 역량 강화 방안 및 비전통 안보 영역의 다자협력의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협력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새로운 변이의 출현에 따른 장기화 속에 감염병과 같은 초국경적 비전통 안보 이슈는 이제 한 국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동북아 역내 방역 및 보건 문제 해결을 위해 '동방협'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가? 한국은 K-방역이라는 국가 역량을 기반으로 '동방협'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역내 주요 국가인 중국과의 협력 제약 요소들을 제거하며 '동방협'이라는 소다자주의협력체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 나아가 '동방협'에 북한의 참여를 견인하여 동북아 역내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을 저지하고, 한반도 평화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까?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다음과 같이 연구를 추진한다.

2. 연구 방법 및 구성

가.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국내외 인터넷 자료 및 학술논문, 단행본, DB 자료, 신문, 유관 정부 부처 보도자료 및 정책보고서 등에 대한 문헌 조사 및 1차 기초 자료 분석과 함께 연구 성과물인 2차 자료를 통한 문헌연구를 활용하였다. 문헌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 자문 및 인터뷰를 통한 관련 자료 발굴 및 전문 연구 분야의 성과를 활용하였으며, 외교부 등 유관 정부 부처 및 관련 부문 전문가의 인터뷰 및 자문을 통한 실질적 협력 사례 분석을 진행하고, 한중 방역·보건 협력 및 '동방협' 참여국을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 및 중국의 언론보도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한 개별 국가들의 특징 및 국제협력 상황을 살펴보고 '동방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병행하였다.

먼저 한국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발병 이후 언론보도에서 '코로나19' 키워드를 중심으로 나타난 주요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키워드 간의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동방협' 참여국가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의 코로나19 대응 및 협력 상황을 검토한다. 북한도 추가하여 코로나19 관련 현안과 '동방협' 등을 통한 보건 협력 가능성도 살펴본다. 또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3] 키워드를 중심으로 나타난 주요 키워드 및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동방협'의 문제점 및 대안을 찾고자 한다. 이와 함께 중국의 언론보도에서 '코로나19' 키워드를 중심으로 나타난 주요 키워드 및 키워드 간의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및 국제협력 현

3) 키워드 분석에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는 '동방협'을 대표 유사어로 선정하여 분석함.

황뿐만 아니라 한중 방역·보건 협력 발전 및 '동방협'의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를 통한 '동방협' 참여 견인 가능성 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다만, 각국에 대한 뉴스 빅데이터 분석에서 한국 언론보도 및 중국 언론보도 내용을 위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국가 간 이해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향후 참여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모두 반영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1) 한국의 언론보도 빅데이터 분석[4)]

분석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현재 연구 시점인 2021년 10월 27일까지로 설정하였으며, 분석 대상은 2021년 10월 27일 기준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BIGKinds)에 뉴스를 제공하는 중앙지, 지역신문 및 방송사 등 모든 언론매체로 총 54개를 선정하였다.

동북아 역내 국가들의 코로나19 관련 뉴스를 수집하기 위하여, 주요 6개국(한국을 제외하고 북한을 포함) 관련 뉴스는 "(코로나 OR 코로나19) AND (미국 OR 중국 OR 일본 OR 러시아 OR 몽골 OR 북한)"과 같이 검색식을 사용하였고,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동방협)' 관련 뉴스는 "(코로나 OR 코로나19) AND (동북아) AND (방역 OR 보건) AND (협력체)"와 같이 검색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뉴스 건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시스템 빅카인즈를 활용해 최초 수집 뉴스는 17,199건이었으며 그중에서 중복, 인물 동정, 단순공지 등을 제외한 후 최종 16,618건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하였다.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은 텍스트로부터 의미를 나타낼 만한 개념을 단어(키워드) 형태로

4) 한국 언론보도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은 김태종 박사로부터 자문받아 함께 진행하였음. 김태종, "한국·중국의 코로나19 보건 협력 관련 뉴스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자료, 2021.11.5.~2021.12.1.).

추출하고, 그들 간의 동시 출현과 같은 연관 관계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네트워크를 구성한 후, 텍스트의 의미적 내용을 분석하는 네트워크 기반의 내용분석 방법이다. 이것은 텍스트를 해체한 후 이를 다시 조합하여 텍스트가 전달하고자 하는 행간의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주요 의미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언어구조를 공간적으로 표시함에 따라 텍스트에 나타난 주요 개념과 다른 개념들과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며,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여러 종류의 네트워크 중심성(centrality)이 높게 나타난 키워드를 찾아냄으로써 전체 텍스트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 및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단순히 특정 키워드가 얼마나 많이 등장했는지를 보는데 그치지 않고, 그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는 키워드들이 어떤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는가에 대한 구조적 분석을 통해 특정한 의미의 순환구조, 특정 개념들 간의 공동의미 구성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분석 방법은 질적 분석 방법과 양적 분석 방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여기에서 분석의 결과로 나타나는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이 높다는 것은, 해당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들과의 연결 정도가 높아 전체 텍스트 구조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키워드라는 의미를 보여 준다.

분석 프로그램은 국내 소셜 네트워크 분석 소프트웨어로 한글의 형태소 추출 및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에 유용한 'NetMiner 4.4.3.g'를 사용하였다. 이와 함께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국외 텍스트 네트워크 시각화 소프트웨어로서, 키워드 간의 구조적 관계 시각화에 유용한 'Vos viewer 1.6.17'를 사용하였다.

(2) 중국의 언론보도 빅데이터 분석[5)]

분석 대상 기간은 코로나19 발발 초기에 관련 내용의 기사가 처음 언론에 등장한 시기인 2020년 2월부터 현재 연구 시점인 2021년 11월까지로 설정하였으며, 중국의 현 코로나19 관련 전반적인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해당 내용을 다룬 기사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대상은 중국 내 인지도가 높은 포털사이트 두 곳 '바이두(百度)'와 '신랑왕(新浪网)'을 선정하여 여기에 노출된 관련 기사들을 수집하였다.

중국의 현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안, 특히 코로나19와 관련된 외교 및 국제협력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내용의 기사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고,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및 외교와 관련해서 검색어로 '코로나(疫情), 방역(防控), 외교(外交)'와 '코로나(疫情), 방역(防控), 협력(合作)'을 사용하였으며, 중국과 북한 간 코로나19 방역 및 외교와 관련해서는 '북한(朝鲜), 코로나(疫情), 방역(防控), 외교(外交)'와 '북한(朝鲜), 코로나(疫情), 방역(防控), 협력(合作)'을 사용하여 관련 기사를 수집·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뉴스는 중국 포털사이트 '바이두'와 '신랑왕'에 노출된 해당 기간 내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고, 중복, 유사, 출처 불분명 등 분석에 방해가 되는 기사는 모두 삭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한국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과 마찬가지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하였고, 분석 프로그램은 중국 소셜 네트워크 분석 소프트웨어로 'ROST ContentMining 6'을 사용하였다.

---

5) 중국 언론보도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은 주민욱 박사로부터 자문받아 함께 진행하였음. 주민욱, "한중 코로나19 방역보건 협력 관련 뉴스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자료, 2021.11.5.~12.7.).

나. 보고서 구성

본 연구의 Ⅰ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 방법 및 본 보고서의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Ⅱ장에서는 동북아 지역 다자협력체인 '동방협'의 구상 및 추진 경과, 지금까지의 운영 성과 및 '동방협' 추진과 관련하여 각종 회의에서 논의된 향후 계획 및 정책에 대해 분석한다. 이와 함께 비전통 안보 분야의 다자협력체인 '동방협'의 특징 및 한계점에 대해 분석한다.

Ⅲ장에서는 '동방협'에 참여하는 한국,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및 몽골 등 총 6개 국가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방역·보건 현황 및 개별 국가 간의 협력 등 그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고 '동방협' 활성화를 위한 개별 국가의 이해관계, 즉 '동방협'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참여 가능성 및 협력을 위한 요건 등에 대해 살펴본다.

Ⅳ장에서는 주요 참여 국가 중 하나인 중국과의 방역·보건 협력의 필요성 및 '동방협' 발전을 위한 활용 가능성을 분석한다. 먼저 한중 방역·보건 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그동안의 양자 간 협력 현황을 파악하고, 중국을 활용한 북한의 '동방협' 참여 견인 및 협력 가능성 등 한중 방역·보건 협력의 의미를 살펴본다. 이와 함께 한중 협력의 구조적 제약 요인 및 한계점에 대하여 분석하고 다음 장에서 이에 대한 극복 방안을 모색한다.

앞에서 '동방협'의 특징 및 한계점에 대해 이해하고, '동방협'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코로나19와 관련한 국가별 대응 현황 및 국제협력 사항을 분석해 국가별로 협력에 필요한 요소 및 조건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마지막으로 Ⅴ장에서 '동방협' 강화 및 활성화 방안을 구상한다. 한중 보건 협력 개선 및 '동방협'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북한과의 보건 협력과 '동방협' 참여를 견인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동방협'이 동북아 역내 평화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구상한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 정부에서 구상한 ‘동방협’의 시대적 의미와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동방협’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및 발전 방안을 정리한다. 이를 통해 ‘동방협’의 동북아 역내 비전통 안보 분야의 대표적 다자협력체로서의 발전 가능성과 다양한 비전통 안보 분야 및 협력체들과 연계한 주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가능성에 대해 전망해본다.

Ⅱ.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추진 경과 및 평가

1.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추진 경과

가.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구상

동아시아는 전 세계 인구의 약 40% 이상이 살고 있으며, 이러한 밀집도는 전염병 확산 위험이 매우 큰 지역으로 초국경적 보건안보 위기에 대한 관리 메커니즘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표 Ⅱ-1〉에 따르면 동북아 역내 6개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전 세계의 24.08%에 달하고, 이는 전 세계 약 78억 인구에서 6개국의 약 20억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6%인 것을 고려하면 비슷한 비율이다. 따라서 적은 수의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인구 100명당 백신 완전 접종자 수에서는 전 세계 평균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전 세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동북아 역내 국가들의 통계 수치는 그만큼 지역적 차원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보건 협력 측면에서 성과를 기대할 때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 다자협력의 모범적 사례로서의 영향력이 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Ⅱ-1> 동북아 역내 코로나19 관련 통계(2021년 12월 3일 기준)

	확진자 누적 합계	최근 7일 동안 새로 보고된 확진자	사망자 누적 합계	최근 7일 동안 새로 보고된 사망자	인구 100명당 투여된 총 백신 도스	인구 100명당 백신 완전 접종자
세계	263,563,622	3,973,600	5,232,562	47,864	100.89	42.13
	462,555	29,654	3,739	299	158.45	78.98
	128,141	510	5,697	-	165.37	68.98
	48,413,265	605,870	778,336	6,388	136.88	58.35

	확진자 누적 합계	최근 7일 동안 새로 보고된 확진자	사망자 누적 합계	최근 7일 동안 새로 보고된 사망자	인구 100명당 투여된 총 백신 도스	인구 100명당 백신 완전 접종자
	1,727,560	737	18,363	10	154.57	75.95
	9,736,037	233,158	278,857	8,565	86.1	38.45
	383,093	2,768	1,938	30	151.29	65.49
6개국 소계	60,850,651	872,697	1,086,930	15,292	852.66	386.2
6개국 비율/평균	24.08%	21.96%	20.77%	31.95%	142.11 (평균)	64.37 (평균)

출처: WHO, "WHO Coronavirus(COVID-19) Dashboard"를 참고하여 저자 분석 및 작성.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인류의 안전을 위해 국경을 넘어 공동대응하고 상호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20년 9월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의 한반도 문제 역시 포용성을 강화한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생각해주길 기대하며,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여러 나라가 함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협력체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다자적 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6] 이는 인류의 위협인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방역 등의 문제를 양자 간 일회성 차원의 지원이나 협력이 아니라 다자적 틀 속에서 동북아 역내 국가들간의 지속가능한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6) "[UN일반]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외교부, 2020.9.22., 〈https://www.mofa.go.kr/www/brd/m_3874/view.do?seq=367507〉 (검색일: 2021.12.5.).

'동방협'은 이와 같은 배경 아래 탄생한 것으로,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 감염병 등 초국경적 보건안보 이슈 관련 동북아 역내 국가 간 공동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자 간 지역 협력체 구상이다. 이후 미국과 러시아가 참여하고 북한은 참여하지 않은 채 코로나19와 같은 보건안보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협력체로 외교·보건 당국 및 민간 전문가 간 트랙1.5 형식으로 출범하게 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으로 진행된 2020년 12월 29일 실무 화상회의에 동북아 역내 한국을 포함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6개국이 참석하여 출범한 이후 2021년 2차(2021년 3월 30일), 3차(2021년 5월 27일) 화상회의가 트랙1 과장급으로 개최되었고, 4차 화상회의(2021년 8월 31일)에서는 국장급으로 격상되어 진행하였다. 이상의 외교·보건 당국 간 트랙1 화상회의 개최를 통해 '동방협' 추진 동력 강화 및 협력 방향을 구체화하고, 회의 정례화, 시그니처 사업, 운영세칙(Terms of Reference: ToR) 등 '동방협'의 제도화 및 내실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실질적 협력사업 가동 및 이행세칙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표 Ⅱ-2〉 참조).

실제로 초국경적 보건안보 이슈 관련 다자협력을 통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몽골과 '의료방역 물품 공동 비축제'를 시범 가동하는 등[7] 실질적 성과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동방협'의 추진은 외교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특성상 유관 부처 및 관련 전문가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국내 각종 회의를 통해 '동방협'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표 Ⅱ-3〉 참조).

7) 외교부,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이하 협력체)」 협력사업 시범 가동," 보도자료 21-588, 2021.8.17.,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1441〉 (검색일: 2021.11.9.).

<표 Ⅱ-2>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관련 참가국 회의

일시	행사명	참가국	내용
'20.12.28.	제1차 트랙2 화상회의	• 참여국 전문가	• 민간 전문가 방역 정보 공유 및 협력 방안
'20.12.29.	트랙1.5 실무 화상회의	• 6개국 정부 외교·보건 과장급 및 주한대사관 관계자 • 보건·방역 및 국제관계 분야 민간 전문가	• 첫 실무 화상회의 • 코로나19 대응 경험 공유 • 방역·보건 협력 방안 • 협력체 발전 방향 등 논의
'21.3.30.	2차 트랙1 실무 화상회의(과장급)	• 6개국 정부 외교·보건 과장급 및 주한대사관 관계자	• 실질 협력사업 발굴·이행 • 회의 정례화 (분기별 1회 이상) • 운영세칙(ToR) 논의
'21.5.27.	3차 트랙1 실무 화상회의(과장급)	• 6개국 정부 외교·보건 과장급 및 주한대사관 관계자	• 상동
'21.6.4.	제2차 트랙2 화상회의	• 참여국 전문가	• 민간 전문가 방역 정보 공유 및 협력 방안
'21.8.30.	제3차 트랙2 화상회의	• 참여국 전문가	• 상동
'21.8.31.	4차 트랙1 실무 화상회의(국장급)	• 6개국 정부 외교·보건 과장급 및 주한대사관 관계자	• 협력사업 가동 가속화 • 운영세칙(ToR) 연내 채택 • 향후 추진계획 등 논의
'21.10.19.	코로나19 공동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화상 토론회	• 외교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한국보건복지인력 개발원 등 관련 기관 • 중국, 몽골, 미국, 러시아 • 보건의료 민간 전문가, 글로벌보건안보대사	• '코로나19 대응인력 공동 교육·훈련' 사업 추진 전 협력 방향 모색

출처: 외교부,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출범 민관합동[트랙1.5] 화상회의 개최," 보도자료 20-900, 2020.12.30.; 외교부,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2차 화상회의 개최," 보도자료 21-207, 2021.3.30.; 외교부,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3차 화상회의 개최," 보도자료 21-363, 2021.5.27.; 외교부,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4차 화상회의 개최," 보도자료 21-630, 2021.9.1.; 외교부, "코로나19 공동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화상 토론회(웨비나 회의) 개최," 보도자료 21-807, 2021.10.19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Ⅱ-3>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관련 국내 각종 회의

일시	행사명	참가	내용
'21.3.11.	1차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범정부 TF 발족 회의	• 청와대, 국무조정실, 외교부, 복지부, 질병청, 농림부, 환경부, 통일부, 기재부 등 국장급 인사	• 외교부 2차관 주재 • 각 기관 소관 분야별 실질 성과사업 발굴·이행 방안 • 시그니처 사업 발굴 시행을 위한 협업 방안 • 협력체 중장기 발전 방향 • TF 운영방안 등 논의
'21.4.22.	2차 범정부 국장급 실무 TF	• 외교부, 복지부, 질병청, 식약처, 통일부, 기재부, 국정원, 농림부, 환경부 등	• 시그니처 사업 이행방안 • 북한 참여 견인 방안
'21.6.21.	3차 범정부 국장급 실무 TF	• 외교부, 복지부, 질병청, 식약처, 통일부, 기재부, 국정원, 농림부, 환경부 등	• 시그니처 사업 이행방안 • 북한 참여 견인 방안
'21.11.19.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민관 합동 세미나 개최	• 외교부, 통일부, 복지부, 질병 관리청 등 정부 관계자 • 통일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등 전문가	•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추진 성과 및 향후 발전 방안 논의

출처: 외교부,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범정부 TF 발족," 보도자료 21-151, 2021.3.11.; 외교부,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민관 합동 세미나 개최," 보도자료 21-942, 2021.11.19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나.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추진 성과

'동방협' 출범 이후 2차 회의에서 한국 측은 코로나19 대응 협력의 시급성 및 실행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첫째, '의료방역 물품 공동 비축제'를 제안하고 둘째, 코로나19 대응인력 공동 교육·훈련 등을 실질 협력사업 후보로 우선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8] 이와 관련하여 중국,

8)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2차 화상회의 개최," 외교부 보도자료 21-207, 2021. 3.30.,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105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검색일: 2021.11.3.).

러시아, 몽골은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했으며, 미국과 일본은 옵저버로 참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3차 회의에서 한국 측은 긴급 방역물품 수요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의료방역 물품 공동 비축제'를 조기에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감염병 대응 관련 공동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현재 '동방협'은 다양한 협력사업 중에서 실질 협력사업으로 3가지 핵심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첫째, '의료방역 물품 공동 비축제'이다. 이 사업은 신종 감염병 발생 시 긴급 수요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동방협' 틀 내에서 한국 정부 측 제안에 따라 참여국 간 협의 중인 사업이다. 참여국들이 일정량의 의료방역 물품(치료제, 백신, 진단키트,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등을 사전에 약정·공유하고, 동북아 역내 보건안보 위기 상황 발생 시 어느 일국이 요청할 때 해당 물품을 약정한 국가가 요청국과의 양자 협의를 거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신속 공급하는 제도이다. 한국 외교부는 사업의 일환으로 몽골에 신속 항원 진단키트(30만 달러 규모)를 지원하였다.[9]

둘째는 '코로나19 대응인력의 공동 교육·훈련'이다. 감염병 대응 실무자 교육(Field Epidemiology Training Program: FETP)과 관련하여 중국은 이미 2001년 미국의 도움으로 FETP를 도입하여 사스(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에 대응하였고 이제는 타국에 교육 인력을 파견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현재 몽골과 5명의 인력교류가 있으며, 몽골은 2009년 중국으로부터 FETP를 도입하여 현재 70명 이상이 연수를 받아 현장 근무를 하고 있다.[10] 코로나 대응인력 교육·훈련은 참여국 방역보건 전문가

9) 외교부,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이하 협력체)」 협력사업 시범 가동," 보도자료 21-588.

회의를 통해 수요 조사를 하고 2022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실질 협력사업 중 '코로나19 대응인력 공동 교육·훈련' 사업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출현과 같은 초국경적 보건안보 이슈에 대비해, 역내 국가 간의 공동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감염병 대응인력의 공동 교육·훈련 분야의 협력을 추진한다. 한국은 이를 통해 소위 K-방역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다.

셋째는 국가 간 필수 인력·물자 이동을 지원하는 '신속통로 절차 표준화'를 마련하는 것이다. 신속통로 표준화는 감염병 출현 등 보건안보 위기상황에서 동북아 역내 인적·물적 교류가 신속하게 재개될 수 있도록 하여 감염병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감염병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안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다. 신속통로 표준화를 위해서는 일반원칙, 입국승인 절차, 출국 전 방역 사항, 입국 후 방역 사항 등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이 명시된 문서에 참여국 모두가 동의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한중 간에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신속통로 제도는 양국 기업인의 상호 간 신속한 예외입국을 인정하는 제도로 상호 간 격리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초청장 발급 등 신속통로 신청 및 이용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혼란이 나타나기도 했다.[11] 그만큼 혼란한 상황 속에서 신속통로 절차 표준화를 통한 정확한 매뉴얼과 운영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10) 외교부, "코로나19 공동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화상 토론회(웨비나 회의)," 보도자료 21-807, 2021.10.19.,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166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검색일: 2021.11.9.).

11)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한중 신속통로 제도 종료?...외교부 "사실 아니다"," 『아주경제』, 〈http://www.ajunews.com/view/20201113085341227#PL2〉 (검색일: 2021.11.9.).

2.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특징 및 한계

가. 비전통 안보 분야의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특징

현재의 동북아 지역질서는 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로, 세계의 다른 어떤 지역 안보질서와 비교하더라도, 가장 오랫동안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핵심적인 지역 안보 균형자(balancer)의 역할을 해왔다. 동북아 지역에서 발견되는 가장 두드러진 지역 안보 질서 특징으로 미중 갈등이 미치는 영향은 기본적으로 지역마다 다르지만, 유난히 미중 갈등이라는 '강대국정치(power politics)'가 동북아 지역에 강하게 투영된다는 것이다.[12] 즉 미중 갈등의 상황이 한반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동방협' 또한 이러한 국면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동북아 보건안보 협력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분명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동아시아 국가 간 보건 협력에 대해서 원칙론적인 찬성에 머무는 것으로 판단된다.[13] 과거 오랫동안 동아시아 혹은 동북아 국가들 간 지역협력에 대해서 미국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었고, 최근 들어 대략 2010년을 전후로 동아시아 국가 간 지역협력에 긍정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입장 변화에는 무엇보다도 동아시아 역내 국가 간 제도적 협력이, 궁극적으로 미국이 추진하는 국가 간 관계의 제도화(투명성 및 상호의존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동북아 보건 협력을 한·중·일 혹은 한·미·중·일 협력으로 제한하기보다, APEC(Asia-Pacific Economic

12) 박인휘, "미국의 비전통 안보 전략과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강화 방안,"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자료, 2021.11.15.).

13) 대표적인 사례로 참고, "East Asia Summit Leaders' Statement of 2020," November 14, 2020., 〈https://www.mofa.go.jp/files/100115535.pdf〉 (Accessed November 18, 2021).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EAS(East-Asia Summit, 동아시아정상회의), ARF(ASEAN Regional Forum, 아세안지역포럼) 등과 같이 보다 광의의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의지가 훨씬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이러한 접근이 자국의 영향력 확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대중국 관리에도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다소 예외적인데, 미일 양자협력을 통한 보건안보 강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14] 이러한 태도는 '동방협' 참여와 연결되어 미국은 '동방협' 참여를 통해 동북아 지역의 보건안보 협력 현황을 관찰하면서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지역 안보 균형자로서 관찰자의 역할에 충실한 것 같다. 일본은 이러한 미국의 태도와 결정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동방협'은 비전통 안보 영역에 대한 협력체임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및 출구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추진 성과 및 향후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 민관 합동 세미나에서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는 축사를 통해, 협력체가 보건안보 분야에서 우리 주도로 주변국이 참여하는 역내 다자협력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예방외교(preventive diplomacy) △능동외교(proactive diplomacy) △평화외교(peace diplomacy) 차원(3P)의 외교 전략적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동북아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협력체로 계속 발전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예방외교는 초국경적 비전통 안보위협에 선제 대응하는 것을 말하며, 능동외교는 중견국가로서 코로나 이후 시대에 협력을 선도하는 외교, 마지막으로 평화외교는 북한의 참여를 통해 한반도·동북아의 평화·안정

14) James Gannon, "Global Health Needs U.S.-Japan Partnership,"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December 18, 2020., 〈https://www.cfr.org/blog/global-health-needs-us-japan-partnership〉 (Accessed November 18, 2021).

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교를 말한다.[15] 미중 갈등의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외교 전략은 반드시 필요하며, '동방협' 추진 또한 감염병을 예방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보건 협력을 통해, 평화를 위한 협력체가 되도록 접근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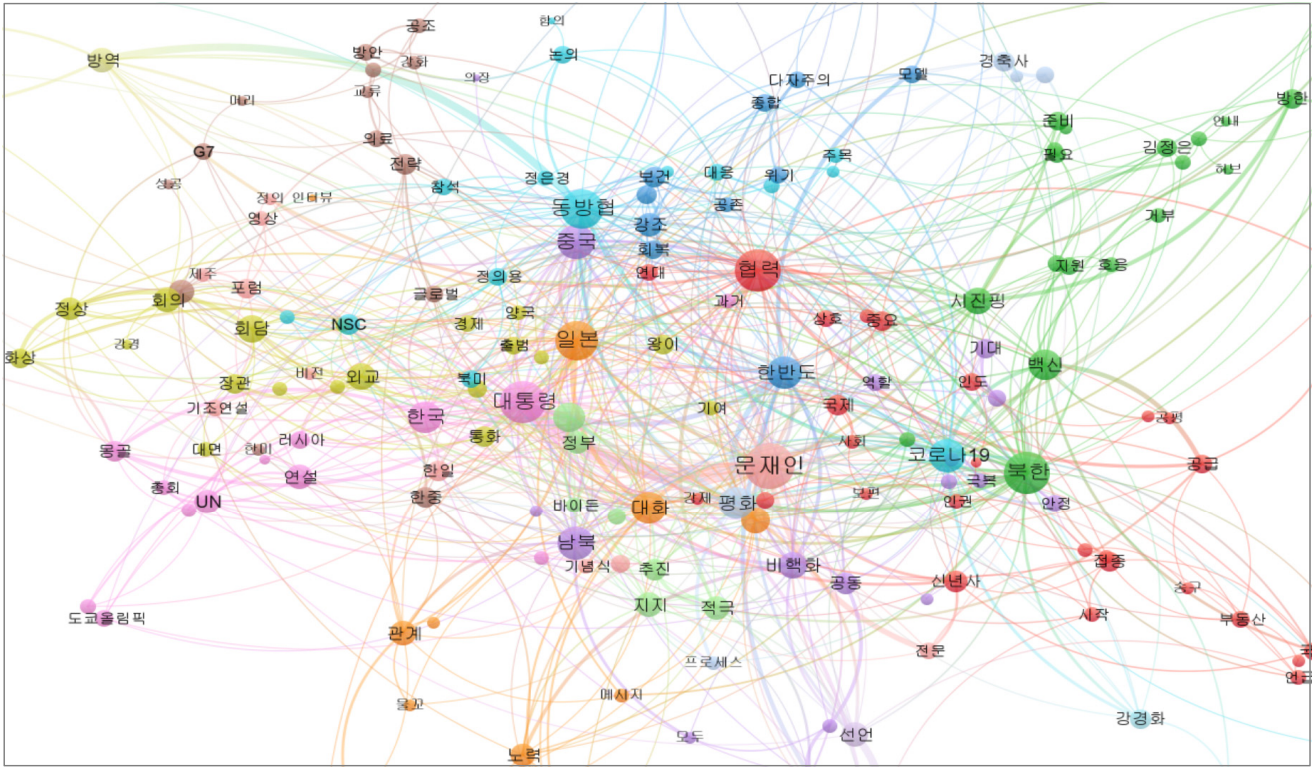
〈그림 Ⅱ-1〉과 같이 '동방협' 관련 기사의 주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16]에 따르면 '동방협'은 한국 정부가 제안하고 주도하는 사업으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키워드 '동방협', 파란색 범위)'는 지역 다자주의 협력체로서 보건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필요성과 동시에 실질적 실천의 중요성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동방협'을 기반으로 북한의 참여와 보건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위협을 해소하고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자고 하였다.[17] 이처럼 '동방협'이 그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림 Ⅱ-1〉과 같이 '동방협'의 코로나19 관련 보도에 대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각 데이터 간 연결 중심성을 분석한 결과 연결 중심성은 '문재인'과 '협력', '북한', '대통령', '동방협', '코로나19', '일본', '중국', '한반도', '평화', '남북', '한국'의 순서로 높은 연결 중심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결 중심성의 관점에서 보면 중심적인 핵심어는 앞에서부터 나열한 순서대로 높은 연결 중심성을 보여준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동방협'은 '북한'의 참여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협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5) 외교부,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합동 세미나 개최," 보도자료 21-942, 2021. 11.19.,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1804〉 (검색일: 2021.11.23.).

16) '동방협'과 관련된 분석 대상 뉴스는 전체 16,618건 중에서 587건에 해당한다.

17) "[UN일반]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외교부, 2020.9.22., 〈https://www.mofa.go.kr/www/brd/m_3874/view.do?seq=367507〉 (검색일: 2021.12.5.).

<그림 Ⅱ-1>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관련 주요 키워드 네트워크



나.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한계

'동방협'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이 참여하고, 방역 보건에 특화된 역내 소다자 협의체이긴 하지만 정치안보경제 분야의 미중 전략 경쟁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백신, 방역 관련 기술정보, 사이버 안보 등과 사실상 연계가 될 가능성이 높아 진일보한 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특히 코로나19 기원과 관련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의문, 즉, 중국산 백신에 대한 신뢰의 문제, 그리고 중국이 제안한 건강 코드 정보 공유처럼 기술 분야와 관련된 협력은 개인정보 관리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건강 코드 정보 공유의 문제는 현재 미국 의회에서 중국의 미국인에 대한 개인정보 취득을 추가로 규제하는 내용의 초당적 법안이 논의 중인 상황을 감안하면 성급하게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미국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중국의 미국인에 대한 개인정보 취득을 규제하는 내용의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법안 2021(The Protecting Sensitive Personal Data Act of 2021)'을 미 상원에 제출하였다. 또한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인류보건건강공동체(人类卫生健康共同体)' 구축에 책임 대국으로서의 의지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지난 2020년 5월 18일 세계보건총회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은 글로벌 방역 협력을 위해 각국이 협력하여 '인류보건건강공동체'를 구축할 것을 호소하였다.[18]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중국이 축적한 방대한 임상데이터와 방역 경험을 공유할 의지가 있는지 또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19]

---

18) "全文丨习近平：共同构建人类卫生健康共同体," 『人民日报』, 〈https://baijiahao.baidu.com/s?id=1667030487133069775&wfr=spider&for=pc〉 (검색일: 2021.12.20.).

19) 이기현, "중국의 방역보건 특징과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강화 방안,"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자료, 2021.11.16.).

감염병은 초국경 이슈이지만 개별 국가의 '주권' 영역과 정치체제의 특성 및 코로나 방역보건 수준과 여건의 차이로 협력체 운영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동방협'의 구성원 중 글로벌 수준을 지향하는 미국은 형식적인 참여자이며, 일본도 적극적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러시아는 동북아 역내 행위자로서의 지위가 약화된 상황이며, 몽골은 코로나 방역에서 취약한 상태다. 결국 한국을 제외하고는 중국이 가장 중요한 행위자이다. 중국은 적극적으로 '동방협'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은 어려운 상황이다. 미중 경쟁 구도에 기인하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미중 갈등 관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중국은 한국에게 '현상유지'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한국이 역내 변화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이라 할 수 있다. 중국으로부터 한국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하는 '동방협'에 대한 실질적인 전폭적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중국의 '백신외교'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중국 백신의 효용성과 중국 정부의 '백신외교'의 의도에 대해 의문을 품는 상황, 또한 미국을 위시한 서구가 중국 백신외교를 격하하고 자체적인 글로벌 백신외교를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방역보건의 모범국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한국이 이러한 외교정책을 선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중국에게 한국의 공식적인 지지와 협력은 큰 가치가 있을 것이다.

한편 미중 갈등은 동북아 지역의 역내 정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에 틀림없고, '동방협' 추진의 제약은 미중 갈등이라는 큰 틀 속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미중 갈등은 과거 미소 대결과 같은 강대국 정치와 비교해 보면 그 핵심적 특징이 '협조와 대결의 극단적인 공존'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서 '보건 협력' 분야의 경우 협조의 대상으로 볼 수 있으며, 다소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동북아 보건 협력에 미중 갈등은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도 한다.[20] 즉, 여러 가지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보건안보 분야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충분히 협력 가능하며, 이를 위해 '동방협'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력을 이끄는 데에 있어서 '동방협'을 제안한 한국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0) 박인휘, "미국의 비전통 안보 전략과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강화 방안."

Ⅲ. 동북아 주요 6개국의 코로나19 대응 및 협력

1. 한국

가. 한국의 방역 현황 및 특징

한국은 2021년 12월 3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누적 합계 462,555명을 기록하였고, 그중 누적 사망자 수는 3,739명에 이르며, 인구 100명당 백신 접종자 수(백신 종류에 따라 1회 또는 2회로 접종 완료한 경우)는 78.98명으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21)]

한국은 감염병 대응의 성공적 방역모델로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감염병의 대응과 관련한 분야에서 한국의 지식과 경험을 함께 공유하고 전수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많은 국가와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감염병의 대응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코로나19의 검사, 확진, 역학조사와 추적관찰, 격리와 치료 등 방역 관련 각 단계를 표준화하고 'K-방역 3T(Test-Trace-Treat) 국제표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K-방역 3T'는 검사·확진(Test) ⇒ 역학·추적(Trace) ⇒ 격리·치료(Treat)로 이어지는 3T를 'K-방역모델'로 체계화한 것으로, 검사·확진 부분에서 6종, 역학·추적 4종, 격리·치료 8종, 총 18종의 국제표준안을 국제표준화 기구에 제안할 방침으로 단계별로 체계화하여 추진할 방침이다.[22)]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시행한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운영 표준모형' 등 국제표준으로서 인정받기 위해 표준안을 작성하고 신규작업표준안(NP)을 제안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한국은 K-방역모델의 첫 번째 국제표준화 성공 사례로

21) WHO, "WHO Coronavirus(COVID-19) Dashboard."

22) 산업통상자원부, "(참고자료)'K-방역모델'을 세계의 표준으로 만들 길잡이 나왔다," 2020.6.11.,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3017&bbs_cd_n=81〉 (검색일: 2021.11.23.).

감염병 진단검사기법 관련 국제표준으로 '체외진단 시험 시스템(in vitro diagnostic test system)'이 제정되었다.[23] 이것은 코로나19 진단키트에 적용된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법 등 다양한 감염병 진단검사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으로, 이를 통해 한국의 감염병 진단 제품에 대한 국제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

<그림 Ⅲ-1> K-방역 3T (Test-Trace-Treat) 국제표준화 분야(18종)

① 검사·확진(Test) : 6종	
감염병 진단기법 : 2종	선별진료소 운영시스템 : 4종
- 유전자 증폭기반 진단기법(RT-PCR) - 진단기법 관련 시약장비 및 테스트 방법 등	-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소 운영 절차 - 도보 이동형(Walk Thru) 선별진료소 운영 절차 등

② 역학·추적(Trace) : 4종	③ 격리·치료(Treat) : 8종
- 모바일 자가진단·격리관리 앱(App) 요구사항 -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기능 및 개인정보 보호 - 자가진단·문진 결과와 전자의무기록(EMR) 연동 방법 등	- 감염병 생활치료센터 운영 표준모형 - 개인위생 관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 지침 - 취약계층 필수 사회복지서비스 및 의료 지원 - 감염병 교차감염 차단을 위한 지침 등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참고자료)'K-방역모델'을 세계의 표준으로 만들 길잡이 나왔다," 2020.6.11.,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3017&bbs_cd_n=81〉 (검색일: 2021.11.23.).

이처럼 국제적 표준으로의 'K-방역모델'의 구축, 감염병의 대응을 포함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다양한 국가의 협력체계 구축 요청,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등 지역적 협력을 구체화한 외교적 정책 방향성 등에 따라 2020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의 기조연설에

23) 산업통상자원부,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첫 번째 성공사례 탄생: 코로나19 등 감염병 진단기법 ISO 국제표준 제정," 2020.12.4., 〈https://www.korea.kr/special/policyFocusView.do?newsId=148880512&pkgId=49500742〉 (검색일: 2021.11.23.).

서 '동방협'의 구상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신종 감염병 등 초국경적 보건 의료 안보의 쟁점과 관련하여 국가 간 공동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제시된 것으로 다양한 보건 의료적 문제에 대하여 아시아지역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대처를 진행하자는 것이 주요한 방향성이다.[24] 'K-방역모델'로 표현되는 한국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능력은 '동방협'과 같은 지역협력체를 통해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나. 한국의 방역·보건 협력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표 Ⅲ-1〉과 같이 새로운 변이바이러스의 끊임없는 등장은 자연스럽게 '위드 코로나' 시대를 받아들이도록 한다. 가장 최근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발견된 오미크론은 발생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한국에도 12월 1일 기준 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처럼 감염병은 어느 한 국가에서 완치율과 백신 접종률이 높더라도 다른 한 국가에서 감염병에 대한 방역과 치료, 예방 수준이 낮다면 국경을 넘어 삽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된 것이다.

<표 Ⅲ-1>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종류 및 국내 확진자 수

구분	명칭	최초 확인	특성	국내 확진자 ('21.11.29. 기준)
VOC	알파형	영국 '20.9.	• 전파력 1.5배 증가 • 입원 증가, 중증도·사망 위험도 증가 가능 • 백신효과 유지	3,296명

24) 전병율, "동아시아 보건 협력의 성과와 과제,"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자료, 2021.11.12.).

구분	명칭	최초 확인	특성	국내 확진자 ('21.11.29. 기준)
	베타형	남아공 '20.5.	• 전파력 1.5배 증가 • 입원 증가, 병원 내 사망 위험도 증가 가능 • 백신효과 감소 가능, 중증 감염에 대한 보호 효과 유지(제한적 근거)	153명
	감마형	브라질 '20.11.	• 전파력 약 2배 증가 • 입원 증가 중증도 증가 가능 • 백신효과 불분명(제한적 근거)	27명
	델타형	인도 '20.10.	• 알파형 변이 대비 1.6배 높은 전파력 • 입원 증가 • 백신효과 감소 가능, 중증 감염에 대한 보호 효과 유지(제한적 근거)	56,660명
	오미크론형	남아공 '21.11.	• 현재 위험도 분석 중(전파력 및 재감염 가능성 증가, 백신효과 영향 등 추정)	('21.12.1. 기준) 5명
VOI	람다	페루 '20.12.		유입 없음
	뮤	콜롬비아 '21.		3명

주: 1) 주요 변이바이러스(Variant of Concern: VOC) 정의: ①전파력 증가 혹은 역학적으로 부정적 변화가 확인되고, ②병원성 증가 혹은 임상적으로 질환 중증도 변화가 확인되거나, ③진단, 백신, 치료제 등의 유효성 저하가 확인된 변이바이러스.

2) 기타 변이바이러스(Variant of Interest: VOI) 정의: ①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 대비 다른 형질을 보이거나 다른 형질을 유도할 수 있는 아미노산 변이를 가진 경우이고 ②지역사회 전파/다수 감염사례/집단발생 또는 다수 국가에서 검출되었을 경우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https://www.kdca.go.kr/contents.es?mid=a20107020000〉; 질병관리청, "국내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분석률 및 검출률," 〈https://www.kdca.go.kr/contents.es?mid=a20107040000〉; "델타, 람다, 뮤 ...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9종 대해부," 『조선일보』, 2021.9.8.,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9/08/2021090801054.html〉 (검색일: 2021.11.20.)를 참고하여 저자 재정리.

한국이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른 방역대책의 수립과 정책적 수행, 방향성 측면에 있어 매우 성공적이라는 것은 많은 국가와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다. 또한 여전히 중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아시아지역의 대다수 국가는 코로나19의 상황에 대한 방역 대책, 검사 시행, 진료소의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 역내 국가들은 한국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 및 축적된 경험

을 배우고,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협력 방향에 따라 협력체계 구축에 협력할 가능성이 크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19의 문제가 촉발한 신종 감염병의 쟁점은 단순히 감염병의 대응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실 한국이 감염병의 대응과 관련하여 선제적 예방과 거리두기 정책, 음압병상 확보 등을 통한 중증환자의 처치와 치료센터의 운영, 선별진료소의 운영,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의 추적 및 관찰 등을 매우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필요한 법률의 제·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의 뒷받침과 함께 국가 위기관리체계의 확립, 국민건강보험체계와 출·입국 관리, 검역 관리를 포함한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중심으로 감염병의 대응체계 구축과 그에 따른 경험과 지식공유를 우선으로 진행하고는 있지만, 한국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야 할 보건의료 협력의 방향성은 협력국가 대상의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협력체계의 구축에 있다. 향후 코로나19와 유사한 혹은 더욱 치명적일 수 있는 신종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의료보장제도나 보건의료 재정 확보, 필수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등 적정한 보건의료체계의 운영과 확립 없이는 감염병의 적정 대응체계를 완비할 수 없다.[25]

따라서 '동방협'과 같은 다자협력체의 구축은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시험하고 완성할 수 있는 시험의 장이 될 수 있다. '동방협'을 통해 한국 정부는 국제적 보건 협력에서 백신의 공여뿐만 아니라 소위 K-방역이라는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를 다른 국가들과 함께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이미 2020년 11월 세계백신면역연합(Global Alliance

25) 위의 자료.

for Vaccines and Immunization: Gavi)이 개발도상국 백신 공급 지원을 위해 출범한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Advance Market Commitment: COVAX AMC)'에 1천만 달러 기여를 결정했다.[26] 또한 한국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대응 ODA 추진전략'을 통해 120여 개국을 대상으로 6억 달러 상당의 지원을 제공하는 등 국제 보건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27] 2021년 6월 개최된 G7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 역할을 강조하고, 한미 양국 정상이 만나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하였다.[28]

2. 중국

가. 중국의 방역 현황 및 특징

중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2만 8천여 명을 넘어서고 그중 누적 사망자 수는 5,697명에 달하며, 인구 100명당 백신 접종자 수(백신 종류에 따라 1회 또는 2회로 접종 완료한 경우)는 68.98명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7일 동안 새로 보고된 사례는 510건(2021년 12월 3일 기준)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감염병을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9] 중국은 코로나19 발생 진원지로 늦장 대응 및 불확실한 데이터 제공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 속에서 국내적으로는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지역의 완전한 봉쇄를 통해 확산을 차단하고, 외교적으로

26) 외교부, "정부, 코로나19 백신 개도국 지원에 1,000만불 공약," 보도자료 20-648, 2020.10.28.

27)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김부겸 국무총리, 「COVAX AMC 정상회의」참석," 보도자료, 2021.6.2.

28) "문대통령, "코백스 AMC에 올해 1억 달러·내년 1억 달러 지원"," 『연합뉴스』 2021.6.13., 〈https://www.yna.co.kr/view/AKR20210612056000001〉 (검색일: 2021.10.30.).

29) WHO, "WHO Coronavirus(COVID-19) Dashbo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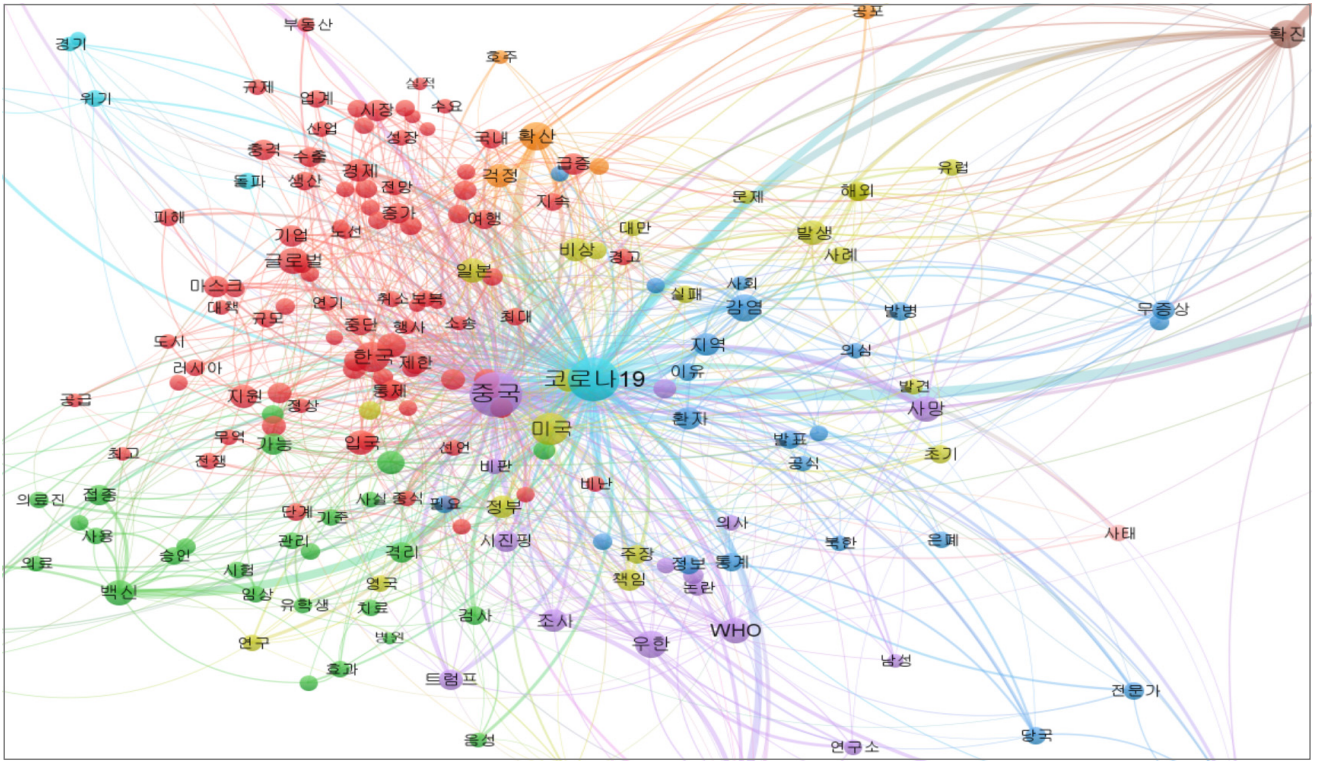
는 공세적 대응과 동시에 국내 확산이 어느 정도 차단된 이후에는 보건의료 협력 측면에서 광범위한 지원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왔다. 미국과 서방이 자국민 중심의 방역과 백신 접종에 집중했다면, 중국은 국내 코로나19 환자 발생 지역에 대한 봉쇄를 통해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의료용품과 백신을 적극적으로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적극적인 '백신외교'를 실행함으로써 팬데믹 국면에서 개도국의 유일한 백신 공급기지의 역할을 맡아 외교적 성과를 이루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30]

이를 뒷받침하듯 〈그림 Ⅲ-2〉와 같이 중국의 코로나19 관련 보도에 대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31]을 통해 각 데이터 간 연결중심성을 분석한 결과 연결중심성은 '중국'과 '코로나19'를 중심으로 '미국', '한국', '확산', '백신', '글로벌', '확진', '우한', 'WHO', '일본', '사망', '경제'의 순서로 높은 연결중심성을 보였다. 이러한 연결중심성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중심적인 핵심어는 '미국'이며 '우한', 'WHO' 단어 등이 보여주듯 코로나 기원설에 대한 논쟁과 책임론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끊임없이 충돌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백신'이 높은 순위에 놓이면서 중국의 '백신외교'의 '글로벌' 무대를 상대로 한 적극적 노력을 분석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협력'이라는 단어의 연결중심성에서는 61번째로 미국과 다른 전략적 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적극적으로 광범위한 지원과 협력을 통해 '백신외교'를 실천한 것이다.

30) 김태환, "미중가치경쟁과 백신외교," 주요국제문제분석. 2021-22호, 2021.10.13., p. 20,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sn=13852&boardSe=pbl&pblctDtaSn=13852&clCode=P01&menuCl=P01&searchKeyword=%EB%B0%B1%EC%8B%A0%EC%99%B8%EA%B5%90&pageIndex=1〉 (검색일: 2021.12.5.).

31) 중국과 관련된 분석 대상 뉴스는 전체 16,618건 중에서 가장 많은 5,931건에 해당한다.

<그림 Ⅲ-2> 중국의 코로나19 관련 주요 키워드 네트워크



나. 중국의 방역·보건 협력[32]

중국은 먼저 '마스크 외교(mask diplomacy)'를 통해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대국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나섰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4개월 만인 2020년 3월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 신체적인 건강을 보호하며, 세계 공중위생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33] 그러면서 중국 정부와 중국의 글로벌 대기업들이 총동원되어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남미 등 이른바 '마스크 외교'라고 하는 대대적인 보건의료 물자를 지원하였는데, 대체로 세계 83개국에 마스크와 코로나19 확진 검사키트를 제공했으며, 이탈리아, 이란, 이라크, 세르비아 등 7개국에는 의료 인력까지 파견하였다. 마스크 외교는 중국 정부와 함께 화웨이와 알리바바 등 대기업이 중심이 되어 전개하였는데, 중국의 마스크 외교를 통하여 코로나19 기원과 화웨이 5G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려 했던 중국의 외교적 의도가 있었다. 그러나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의 마스크 외교는 실패했다고 보고, 그 원인을 중국의 '지나친 생색내기'로 중국 정부가 마스크 지원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세계가 중국의 노력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서방 세계의 반중 정서를 더욱 높이는데 일조했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34]

---

32) 서상민,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 방안,"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자료, 2021.12.2.)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33) 王政淇·王潇潇·于子青, "习近平战"疫"时期的外交：中国的承诺与践诺," 『人民网』, 〈http://politics.people.com.cn/n1/2020/0319/c1001-31638896.html〉 (검색일: 2021.12.1.).

34) Lilian Cheng, "Coronavirus: hamster research shows effectiveness of masks 'huge' in Covid-19 battle, Hong Kong scientists say," *SCMP*, 〈https://www.scmp.com/news/hong-kong/health-environment/article/3084779/coronavirus-hamster-research-proof-effectiveness〉 (Accessed December 19, 2021).

또한 중국이 제공한 마스크 등 의료물자가 불량품이었던 것도 실패를 자초한 요인 중 하나였다. 얼굴에 제대로 밀착되지 않고 필터 기능이 불량인 마스크, 정확도가 30%에 못미치는 진단키트 등을 중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캐나다, 스페인, 네덜란드, 핀란드, 인도, 필리핀, 파라과이 등의 국가에서 중국산 의료물자에 대한 리콜이 이뤄지기도 하였다.[35]

마스크 외교를 통해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중국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 리더십이 약화되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자국 백신을 활용한 '백신외교'를 전개하였다. 중국 백신외교의 목표는 첫째, 백신외교를 통한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라는 전략적 의도로 보는 거시적 목표보다는, 중국 내 코로나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중국 주변의 저개발국가들에게 백신을 공급함으로써 중국으로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유입의 방지를 목표로 하였다. 2020년 8월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중국의 주변국인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의 동남아 국가들에 코로나 백신 우선 접근권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했고,[36] 백신이 개발된 이후 곧장 파키스탄, 브루나이, 네팔,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 등 동아시아 국가들에 우선 공급하였다.

둘째, 전 세계 저개발국가들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하였다. 중국은 저개발국가들과 백신 개발단계에서부터 협력을 시작하였는데 시노팜(Sinopharm), 시노백(Sinovac), 칸시노(Cansino)는 아랍에미리트, 브라질, 인도네시아, 멕시코, 칠레, 바레인, 요르단, 이집트, 터

35) 김향미, "중국 '마스크 외교' 효과는 글쎄," 『경향신문』, 2020.5.18., 〈https://www.khan.co.kr/world/china/article/202005181721001#csidxd2dfb0262490d8ca68d9e688036f486〉 (검색일: 2021.12.19.).

36) "李克强出席澜沧江－湄公河合作第三次领导人会议时强调推动次区域合作拓展深化打造水资源合作新亮点," 『中华人民共和国驻新西兰大使馆』, 2020.8.24., 〈http://www.chinaembassy.org.nz/zgxw/202008/t20200824_830288.htm〉 (검색일: 2021.12.19.).

키, 필리핀, 모로코, 페루, 러시아,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등에서 자원자를 대상으로 하여 임상시험을 실시한 바 있다.[37] 저개발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의 백신외교는 중국 백신이 개발되기 전 2020년 6월부터 진행되었는데, 전통적으로 중국의 우방국들이 많은 아프리카 정상들과 시진핑 주석이 진행한 화상 정상회담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에 백신을 우선 공급할 것이라 약속했고, 개발이 완료된 이후 약속을 이행했다. 2021년 2월에는 멕시코, 볼리비아, 아제르바이잔, 세르비아, 헝가리 등 남미와 유럽의 저개발국가에 백신을 수출함으로써, 중국은 의료보건 기술 수준이 높지 않아 백신 수급이 어려운 국가들을 대상으로 대외적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중국은 80여 개 국가와 3개 국제기구에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했고, 50여 개국에 백신을 수출했다. 한편 이집트와 아랍에미리트 등 10여 개 개도국에서 기술 이전과 협력 생산을 전개하면서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의 영향력을 급속도로 확대했다.[38] 〈그림 Ⅲ-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이 생산하고 있는 백신은 아프리카, 남미, 중앙아시아와 중동에 많이 공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백신외교의 특징은 '일대일로(一带一路)' 이니셔티브 연선국가들과의 백신 협력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6월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일대일로 아태지역 국제협력 고위급 회의에서 일대일로 연선국가 28개국과 함께 일대일로 백신 협력 관계를 제안하고 백신 지원과 수출, 공동 생산 등의 협력 강화를 제안한 바 있다.[39] 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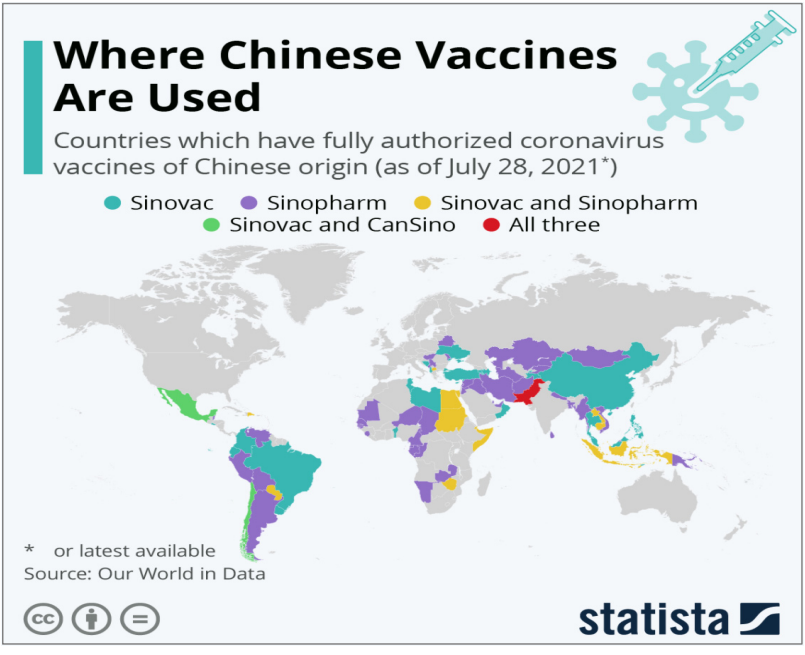
37) "China's COVID vaccines are going global — but questions remain," *Nature*, 2021.5.11.,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1-01146-0〉 (검색일: 2021.12.19.)

38) "2021年5月17日外交部发言人赵立坚主持例行记者会,"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21.5.17., 〈https://www.fmprc.gov.cn/fyrbt_673021/jzhsl_673025/202105/t20210517_9171266.shtml〉 (검색일: 2021.11.20.).

39) "王毅主持"一带一路"亚太区域国际合作高级别视频会议,"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http://www.gov.cn/guowuyuan/2021-06/24/content_5620459.htm〉 (검색일: 2021.12.20.).

고 중국은 7억 7,500만 회분의 백신 협력에 합의하고 “일대일로 협력 관계국과 함께 백신의 전 세계 공평 분배를 촉진하고 일대일로 국가와 다른 개도국의 백신 보급 및 부담에 일조하겠다”라고 말했다.[40] 이렇듯 중국의 백신외교는 자국의 경제적·외교적 이해관계와 밀접한 국가들과의 협력을 기본으로 하고, 이를 포장하는 담론으로써 ‘보건실크로드 구상’, ‘인류보건건강공동체 구축’, ‘인류운명공동체(人类命运共同体) 건설’, ‘백신불균등 해소’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특징이 있다.

<그림 Ⅲ-3> 전 세계 중국 백신 분포도(2021년 7월 28일 기준)



출처: Katharina Buchholz, “Where Chinese Vaccines Are Used,” *Statista*, 2021.7.30., 〈https://www.statista.com/chart/25446/countries-authorizing-coronavirus-vaccines-of-chinese-origin/〉 (검색일: 2021.12.4.).

40) “外交部：中方愿继续努力提高新冠疫苗在“一带一路”国家可及性和可负担性,”『新华网』, 〈http://www.xinhuanet.com/silkroad/2021-08/02/c_1127722816.htm〉 (검색일: 2021.12.20.).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제로 중국은 아세안에 1.5억 도스의 백신 무상원조 및 방역기금으로 500만 달러를 추가 제공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41] 2021년 11월 22일 외교부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전 세계 110개국 및 국제기구에 17억 도스가 넘는 백신을 제공하였고, 올해 20억 도스가 넘도록 할 예정이며, 코백스(COVAX)에 7천만 도스를 제공하고, 1억 달러를 기증했다. 30여 개 국가와 '일대일로' 백신 협력 동반자 관계를 제안하였고, 19개의 개발도상국과 백신 연합 생산을 전개하였다.[42] 시간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중국은 꾸준히 '백신외교'를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021년 8월 13일 코로나19 기원 문제에 대한 주중 사절 기자회견에서, 중국 외교부 부부장 마차오쉬(马朝旭)는 중국이 이미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 약 8억 도스의 백신을 제공했다고 밝혔다.[43] 또한 5월 17일 기자회견에서 자오리젠(赵立坚)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이미 전 세계 80여 개 국가와 국제기구 3곳에 백신을 원조하고, 50여 개 국가에 수출하였으며,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등 10여 개 개발도상국에는 기술이전 및 생산 협력을 추진하여 대규모 백신 생산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44] 3월 30일 외교부 기자회견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 코백스에 가입한 중국은 1천만 도스의 백신을 개발도상국을

41) "2021年11月24日外交部发言人赵立坚主持例行记者会,"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21.11.24., 〈https://www.fmprc.gov.cn/fyrbt_673021/jzhsl_673025/202111/t20211124_10452621.shtml〉 (검색일: 2021.11.20.).

42) "2021年11月12日外交部发言人汪文斌主持例行记者会,"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21.11.12., 〈https://www.fmprc.gov.cn/fyrbt_673021/jzhsl_673025/202111/t20211112_10447449.shtml〉 (검색일: 2021.11.20.).

43) "外交部举行新冠病毒溯源问题驻华使节吹风会,"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2021.8.13. , 〈http://www.gov.cn/xinwen/2021-08/13/content_5631246.htm〉 (검색일: 2021.11.10.).

44) "2021年5月17日外交部发言人赵立坚主持例行记者会,"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21.5.17., 〈https://www.fmprc.gov.cn/fyrbt_673021/jzhsl_673025/202105/t20210517_9171266.shtml〉 (검색일: 2021.11.20.).

위해 원조하였고, 전 세계 80여 개 국가와 국제조직 3곳에 백신을 원조하였으며, 40여 개 국가에 백신을 수출하고 10여 개 개발도상국에 백신 연구개발과 생산을 협력하고 있다.[45] 3월 3일에 개최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13기 4차 회의 기자회견에서 궈웨이민(郭卫民) 대변인은 중국은 코백스를 통해 2월 말까지 전 세계 69개국, 2곳의 국제기구에 백신 원조를 하였고, 28개국에 수출을 진행하였다고 하였다.[46] 2월 26에도 53개 국가에 백신을 지원하고 27개 국가에 수출한다고 하였다.[47] 이처럼 중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백신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으며, 특히 중국 정부는 알리바바, 텅쉰(腾讯), 헝다(恒大) 등 민간 대기업과 함께 우호적인 저개발국가에 대해 의료용품 및 방역물품, 백신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3. 미국

가. 미국의 방역 현황 및 특징

미국은 2021년 12월 3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누적 합계 48,413,265명을 기록하였고, 그중 누적 사망자 수는 778,336명에 이르며, 인구 100명당 백신 접종자 수(백신 종류에 따라 1회 또는 2회로 접종 완료한 경우)는 58.35명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7일 동안 새로 보고된 확진 사례는 605,870건으로 안정적 방역 관리가

45) "2021年3月30日外交部发言人华春莹主持例行记者会,"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21.3.30. , 〈https://www.fmprc.gov.cn/fyrbt_673021/jzhsl_673025/202103/t20210330_9171237.shtml〉 (검색일: 2021.11.20.).

46) "郭卫民 : 中国已向69国提供疫苗援助," 『北京日报客户端』, 2021.3.3., 〈https://baijiahao.baidu.com/s?id=1693196020595615658&wfr=spider&for=pc〉 (검색일: 2021.11.20.).

47) "2021年2月26日外交部发言人汪文斌主持例行记者会,"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21.2.26., 〈https://www.fmprc.gov.cn/fyrbt_673021/jzhsl_673025/202102/t20210226_9604771.shtml〉 (검색일: 2021.11.20.).

필요한 상황이다.[48]

코로나19 위기는 세계화 이후 30년 만에 미국이 처음으로 '비전통 안보'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한 사례로 볼 수 있다.[49] '코로나'로 대표되는 비전통 안보, 특히 '보건안보'는 진원지 논란을 포함하여 다양한 논쟁적 이슈를 안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위협의 등장 과정, 위협의 확산 과정, 위협에 대한 대처방안 등에 있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어서, 미국 역시 매우 곤란한 경험을 치르는 상황이다. 게다가 기존의 보건안보 정책이 대거 폐지되거나 축소되었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에 미국은 혼란을 거듭하였다.[50] 특히 '코로나19'라는 보건안보에 직면하여, 미중 갈등 상황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강대국 정치 및 대외전략 차원에서 '보건안보' 문제가 다뤄지는 특징도 발견된다.

현재 미국의 보건안보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안 대응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 제도적 완결성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보건안보 대응방식을 정리하면 행위(정책) 주체에 있어서 대체로 '6가지 축'으로 진행되는 정책적 접근 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51] 6가지 축은 구체적으로, 백악관, 행정부, 의회, 민간 영역, 국제협력모델, 전통적 안보정책과의 결합이다. 이러한 각각의 정책 접근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표 Ⅲ-2〉와 같다.

48) WHO, "WHO Coronavirus(COVID-19) Dashboard."

49) 미국은 2000년대 초 '글로벌 테러'라는 비전통 안보에 직면한 바 있지만, 당시 미국은 이러한 위협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두 개의 대규모 전쟁(아프간전쟁 및 이라크전쟁)을 선택함으로써 '비전통 안보'를 철저하게 '전통안보'로 전환하는 작업을 시도한 바 있음. 따라서 비전통 안보를 있는 그대로 국가안보 차원에서 수용한 것은 현재의 코로나 사태가 최초라고 할 수 있음: 박인휘, "미국의 비전통 안보 전략과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강화 방안" 자문자료 참고.

50) 조한승, "코로나19와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그리고 미국," 『민족연구』, 76호 (2020), p. 19.

51) 박인휘, "미국의 비전통 안보 전략과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강화 방안."

<표 Ⅲ-2> 미국 보건위기 대처 현황[52]

행위(정책) 주체	구체적인 추진 기구(방법)	핵심 특징
백악관	NAC 산하의 '국제보건안보 특별보좌관'[53]	여러 부처 간 정책 조율
행정부	보건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한국의 질병관리청에 해당
의회	Global Health Security Act of 2021	입법 조치를 통한 정책 기반 제공
민간 부문	대표 사례: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보건안보지수(Global Health Security Index)' 발표	싱크탱크, 대학, 시민사회 등에서 적극 참여
국제협력	대표 사례: 국제보건안보구상(GHSA,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s)	'미국 리더십' 회복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의도
전통안보와 결합	국방부, 국토안보부 등에서 정책 발표 예, 국토안보부 'Biological warfare strategy'	군사작전 등에 적용

출처: 박인휘, "미국의 비전통 안보 전략과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강화 방안."

한편 〈그림 Ⅲ-4〉과 같이 미국의 코로나19 관련 보도에 대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54]을 통해 각 데이터 간 연결중심성을 분석한 결과, '미국'과 '코로나19'를 중심으로 '중국', '한국', '백신', '확진', '확산', '사망', '유럽', '트럼프', '글로벌', '감염', '입국'이라는 키워드 순서로 높은 연결중심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결중심성의 관점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어로 '중국'이나 '한국'이 높은 연결중심성을 보이고, 다음으로 '백신', '트럼프'가 높은 순위에 위치하면서 코로나19를 둘러싸고 상당히 정치적 쟁점이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감염병 대처는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반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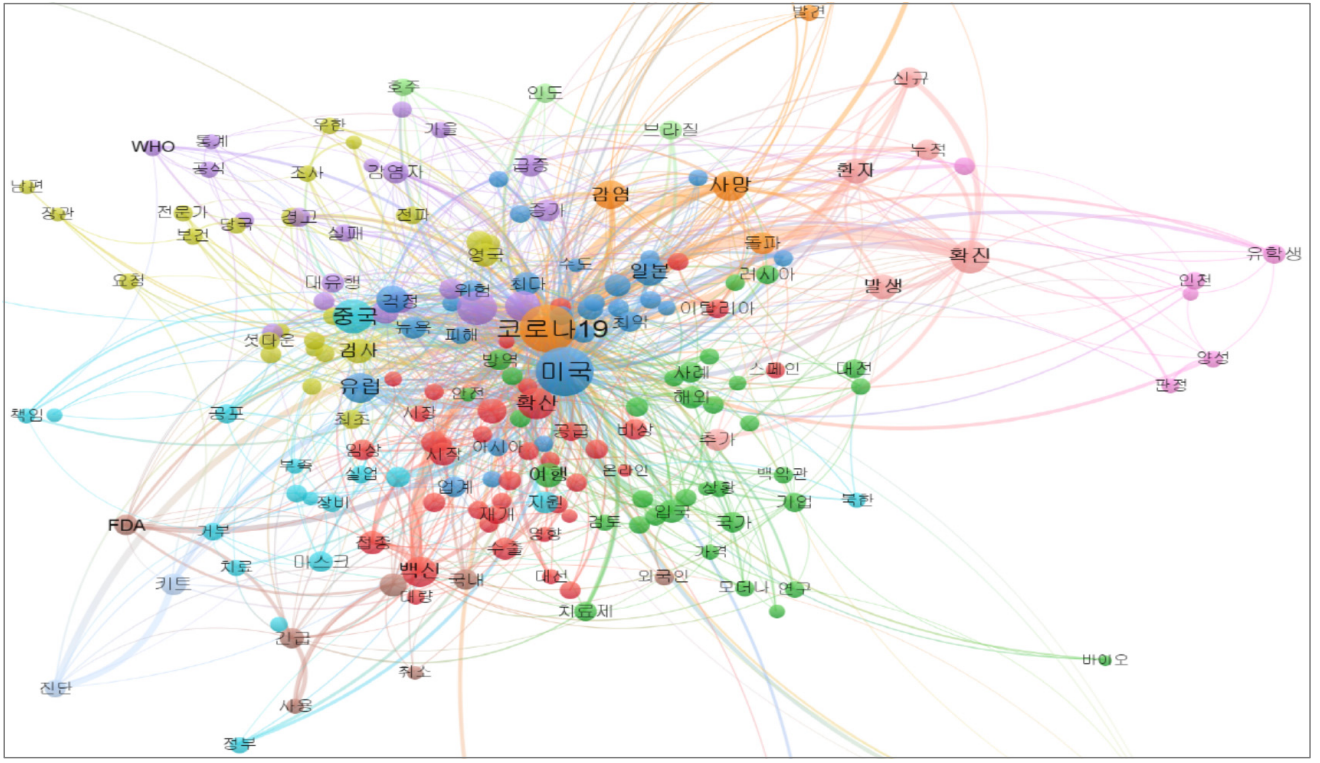
52) 미국의 여러 국가기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다뤄지는 보건안보 이슈의 행위자를 몇 개의 정책 주도 기관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불가능함. 따라서 본 표에서는 백악관, 행정부, 민간 영역 등과 같이 미국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 행위자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음: 박인휘, "미국의 비전통 안보 전략과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강화 방안."

53) 2018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 폐지되었던 팀을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월 취임과 동시에 복원시킨 바 있음.

54) 미국과 관련된 분석 대상 뉴스는 전체 16,618건 중에서 4,488건에 해당한다.

‘협력’이라는 단어의 연결중심성을 살펴보면 가장 순위가 낮은 일본 다음으로 165번째로 출현해 매우 낮은 연결중심성을 보여준다. 즉 글로벌 무대에서 감염병 예방, 처치, 치료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수준을 갖추고 있는 미국은 ‘협력’보다는 미국 주도적 관리라는 측면이 더욱 강하다. 다만 가장 많은 확진자가 보여주듯이 이로 인해 미국의 보건 선진국으로서의 위상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거리를 제공하였다.

<그림 Ⅲ-4> 미국의 코로나19 관련 주요 키워드 네트워크



나. 미국의 방역·보건 협력[55]

미국의 보건안보 국제협력의 경우 현재 대체로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첫째는 기존 보건안보 국제협력체제의 수정을 시도한다. 대표적으로 유엔과 WHO를 통해 시도하는 협력을 살펴보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2018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국은 WHO 탈퇴를 선언했다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다시 복귀한 바 있다. WHO의 경우 20%의 국가 의무 분담금과 80%의 자율분담금으로 재정을 유지하고 있는데, 2010년대 이후부터는 오랜 관행이던 미국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중국이 경제성장으로 인해 자국의 자율분담금을 늘려갔고, 그로 인해 미국은 점점 WHO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상태였다.[56]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이 보건안보와 관련한 WHO와의 관계 설정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WHO가 유엔 산하의 전문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유엔과 WHO 사이에 국제 보건안보에 관한 의미있는 분업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의 비판이 있었다.[57]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WHO 내부에서의 재정 및 조직 개혁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보건안보 국제협력 플랫폼을 제안하고 추진하는

55) 박인휘, "미국의 비전통 안보 전략과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강화 방안" 자문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56) Charles Clift, "The Role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in the International System," *Chatham House*, February 2013, 〈http://www.chathamhouse.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s/research/2013-02-01-role-world-health-organization-international-system-clift.pdf〉 (Accessed December 9, 2021).

57) KFF, "The U.S. Government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January 25, 2021, 〈https://www.kff.org/coronavirus-covid-19/fact-sheet/the-u-s-government-and-the-world-health-organization/〉 (Accessed December 4, 2021).

것이다. 대표적으로 GHSA(Global Health Security Agendas)를 들 수 있는데, GHSA는 지난 2014년 2월 출범한 일종의 정부 간 국제협의체로 초기에는 네덜란드, 호주, 한국 등과 같이 소위 중견국가(middle-power)들을 중심으로 한 리더십이 형성되었다가,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미국이 적극적인 리더십 행사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보건안보 국제협력'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정책 대응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볼 수 있다. 첫째, 바이든 리더십과 보건안보 국제협력이다.[58] 물론 2020년 10월 말 미국 내 확진자가 9백만 명, 사망자는 23만 명에 육박하고, 높은 확산 추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미국이 국제적 협력을 위한 리더쉽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평가도 있다.[59]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외교 리더십에 강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바, 외교정책에서의 성과를 국내정치 에너지로 전환하려는 의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건안보와 관련한 국제협력 분야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둘째, 미국의 국제 리더십 복원과 국제공공재 제공이다. 보건안보를 통한 국제협력을 계기로 미국의 국제 리더십을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추락하는 과정에서 보건안보 분야를 일종의 새로운 대안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60] 마지막으로 미중경쟁 국면과의 연계, 군사안

58) Stephen M. Walt, "Is Biden's Foreign Policy Failing?" *Foreign Policy*, September 30, 2021. 〈https://foreignpolicy.com/2021/09/30/is-bidens-foreign-policy-failing/〉 (Accessed December 2, 2021).

59) 김영수, "범유행병과 국제협력: 에이즈의 사례를 통해서 본 코비드-19의 함의와 국제협력의 전망," 『평화연구』, 제28권 2호 (2020), p. 178.

60) Jonathan Cohen, "U.S. Global Health Leadership Must Go Beyond Command and Control," *Foreign Affairs*, May 21, 2021,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united-states/2021-05-21/us-global-health-leadership-must-go-beyond-command-and-control〉 (Accessed December 3, 2021).

보와의 연계 등의 특징이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위협(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 대상을 군사안보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 '코로나 위기' 역시 마찬가지인데, 특히 중국을 상대로 '코로나19 진원지 논쟁'을 경험한 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연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위기를 활용한 군사안보와 연계하려는 노력을 구체화하고 있다.[61]

4. 일본

가. 일본의 방역 현황 및 특징

현재 일본은 2021년 12월 3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누적 합계 1,727,560명을 기록하였으며, 그중 누적 사망자 수는 18,363명에 이른다. 다만, 최근 7일 동안 새로 보고된 확진 사례가 737건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인구 100명당 백신 접종자 수(백신 종류에 따라 1회 또는 2회로 접종 완료한 경우)는 75.95명으로 비교적 접종 완료 비율이 높은 편이다.[62]

일본은 보험제도 등 현재까지 구축한 보건시스템 경험을 살려, 인간의 안전보장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와의 전 세계적인 투쟁에 있어서, "어떤 누구의 건강도 뒤처지게 하지 않는다"라는 이념 하에 '유니버설 헬스 커버리지(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념을 토대로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국가 간 직접지원 및 국제기관을 통한 지원을 활용해

61) Thomas Cullison, J. Stephen Morrison, "What has Covid-19 taught us about strengthening the DOD's global health security capacities?" *CSIS,* May 21, 2021, 〈https://www.csis.org/analysis/what-has-covid-19-taught-us-about-strengthening-dods-global-health-security-capacities〉 (Accessed December 2, 2021).

62) WHO, "WHO Coronavirus(COVID-19) Dashboard."

약 3,400억 엔(약 31억 달러)을 지원하였고, 2021년 6월에 열린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에 대한 8억 달러 추가 지원을 약속하여 총 약 4,300억 엔(약 39억 달러)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보건시스템을 강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년간 최대 7천억 엔의 긴급지원 차관을 설립하였다.[63] 이러한 지원은 현재의 감염병 위기 극복과, 향후 보건 위기 대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보건시스템을 강화하고 보다 폭넓은 분야에서의 안전보장을 확실히 하기 위한 국제적인 환경 정비를 목표로 한다.[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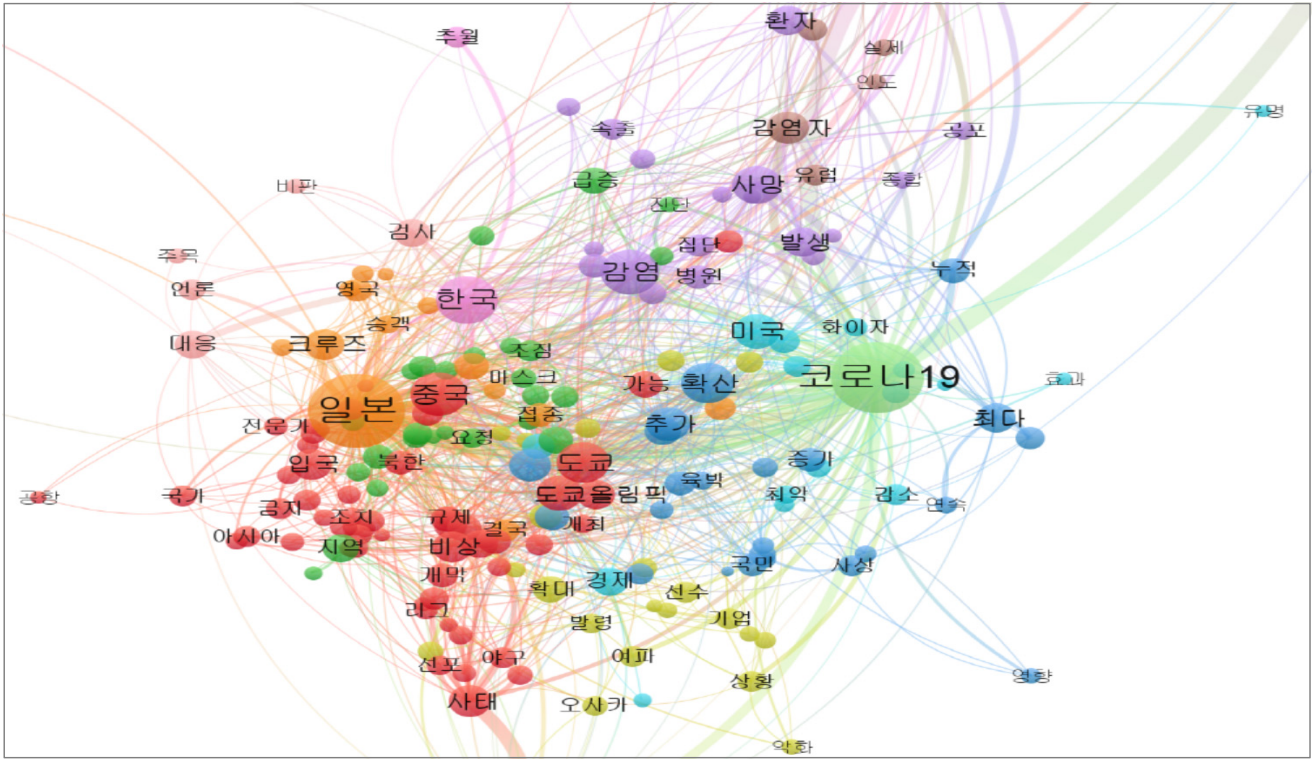
〈그림 Ⅲ-5〉와 같이 일본의 코로나19 관련 보도에 대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65]을 통해 각 데이터 간 연결중심성을 분석한 결과, '일본'과 '코로나19'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국', '중국', '감염', '확산', '확진', '올림픽', '도쿄', '대응', '사망', '사태', '미국'의 순서로 연결중심성이 높았다.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의 연결중심성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어는 앞에서부터 나열된 순서대로 높은 연결중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은 '올림픽' 개최 여부에서부터 올림픽 경기 기간 내내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급격하게 발생한 확진자 수나, 반대로 급격하게 줄어든 확진자 수 등이 문제가 되었고, 이는 일본의 방역체계에 대한 의구심으로 연결되고 있다. '협력'이라는 단어의 연결중심성을 살펴보면 일본은 백신 공여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단어의 순서가 301번째로 나타나, 다른 국가와 비교해 가장 순위가 낮아 '협력'과 관련된 논의가 적다고 할 수 있다.

63) "日本の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の支援 －世界のUHC達成に向けて," 『外務省』, 〈https://www.mofa.go.jp/mofaj/ic/ap_m/page23_003186.html〉 (검색일: 2021.12.5.).

64) 안주영, "일본의 방역·보건 특징과 동북아 협력 방안,"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자료, 2021.11.1.).

65) 일본과 관련된 분석 대상 뉴스는 전체 16,618건 중에서 3,270건에 해당한다.

<그림 Ⅲ-5> 일본의 코로나19 관련 주요 키워드 네트워크



나. 일본의 방역·보건 협력[66]

일본은 외교적으로 전 세계의 코로나19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 및 지역에서 안전성, 유효성, 품질이 보증된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코백스 등 국제적 기구와 협조하여, 개별 국가 및 지역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백신 관련 지원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6월에 열린 코백스 백신 서밋에서 3천만 회분을 목표로 코백스 퍼실리티 등을 통해 각국 및 지역에 제공한다는 뜻을 표명하였고, 지난 9월에 열린 유엔총회 일반 토론 연설 등에서 추가적으로 도합 6천만 회분을 목표로 공여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67] 이와 함께 일본 국내의 백신 생산·사용 상황과 국제사회로부터의 요청, 각국 및 지역에서의 감염 상황 및 백신 요구 등을 근거로 하여 순차적으로 공여를 진행하고 있으며, 백신을 접종 현장까지 전달하기 위한 '라스트 원 마일(Last One Mile)[68]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도 코백스 퍼실리티의 개도국 백신 공급 지원을 위한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COVAX AMC)'에 2억 달러 출자를 완료했으며 2021년 6월 2일 일본은 '코백스 백신 서밋(COVAX AMC Summit)'을 세계백신면역연합(Gavi)과 함께 개최하고, 향후 8억 달러를 추가 거출하여 합계 10억 달러의 공헌을 할 것으로 표명하였다. 이와 함께 공동개최자로서 각국에 자금 동원을 촉구하여 2021년 말까지 18억 회분, 개발

66) 안주영, "일본의 방역·보건 특징과 동북아 협력 방안" 자문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67) "스가 일본 총리 "코로나 백신 총 6천만 회분 국제사회 공여," 『연합뉴스』, 2021.9.23., 〈https://www.yna.co.kr/view/AKR20210923018400073〉 (검색일: 2021.12.5.).

68) 물류 업체가 개인 소비자에게 상품을 전달하기 위한 마지막 1마일 내외 최종 배송 구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첨단 기술을 이용해 배송 형태와 배송지 인구 밀도 등을 고려해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소형 로봇, 자전거 택배, 무인 배송 로봇 등을 배송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도상국의 인구 30%분의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조달 목표(83억 달러)를 크게 넘어서는 총 약 96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할 것으로 공헌하였다.

〈표 Ⅲ-3〉과 같이 일본은 국제사회에 비교적 백신을 많이 지원하는 편으로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였다. 대만(420만 회분), 베트남(408만 회분), 인도네시아(415만 회분), 말레이시아(100만 회분) 등 7개국에 직접 공여한 약 1,865만 회분이 있다.[69]

<표 Ⅲ-3> 일본의 백신 직접 공여 실적(2021년 11월 1일 기준)

공여 대상국 · 지역	누적 공여수 (단위: 만 회분)	공여 대상국 · 지역	누적 공여수 (단위: 만 회분)
대만	420	필리핀	308
베트남	408	태국	204
인도네시아	415	브루나이	10
말레이시아	100	합계	약 1,865만 회분

단위: 만 회분, 수치는 어림수.
출처: "日本によるワクチン関連支援(일본의 백신 관련 지원)," 『外務省』, 〈https://www.mofa.go.jp/mofaj/ic/ap_m/page23_003186.html〉 (검색일: 2021.12.5.)를 바탕으로 저자 재정리.

이외에도 일본은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캄보디아(101만 회분), 라오스(62만 회분), 동티모르(17만 회분), 방글라데시(306만 회분), 몰디브(11만 회분), 네팔(161만 회분) 등의 국가에 약 1,126만 회분을 제공하였다.[70]

69) 스가 일본 총리는 일본이 지금까지 국제사회에 약 2천 300만 회분의 백신을 공여하여 세계 3위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음; "스가 일본 총리, "코로나 백신 총 6천만 회분 국제사회 공여"," 『연합뉴스』, 2021.9.23.

70) "日本によるワクチン関連支援(일본의 백신 관련 지원)," 『外務省』.

<표 Ⅲ-4> 일본의 코백스 퍼실리티 백신 공여 실적(2021년 11월 1일 기준)

공여대상국		공여수 (단위: 만 회분)	공여대상국		공여수 (단위: 만 회분)
동남 아시아	캄보디아	101	오세 아니아	솔로몬	6
	라오스	62		피지	6
	동티모르	17		통가	4
서남 아시아	방글라데시	306		키리바시	6
	네팔	161		사모아	11
	스리랑카	146	중동	이란	291
	몰디브	11	합계		약 1,126만

단위: 만 회분, 수치는 어림수.
출처: 위의 자료.

5. 러시아

가. 러시아의 방역 현황 및 특징[71]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코로나19 방역정책도 기본적으로는 해외 입국 차단, 원격수업, 다중이용시설 이용 금지 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국가적 상황에 따라 규정을 강화하기도, 완화하기도 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 발생 초기 러시아 정부는 푸틴 대통령 주재 하의 각료회의(20.1.28.)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코로나 발생 및 확산 속도가 더딘 편이라 자평하였으나, 얼마 후 1월 31일 러시아 최초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각종 대책을 발표·시행하였다. 러시아의 코로나19 방지 대책은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항공 및 그에 따른 입국의 일시적 제한(외교적 목적, 우크라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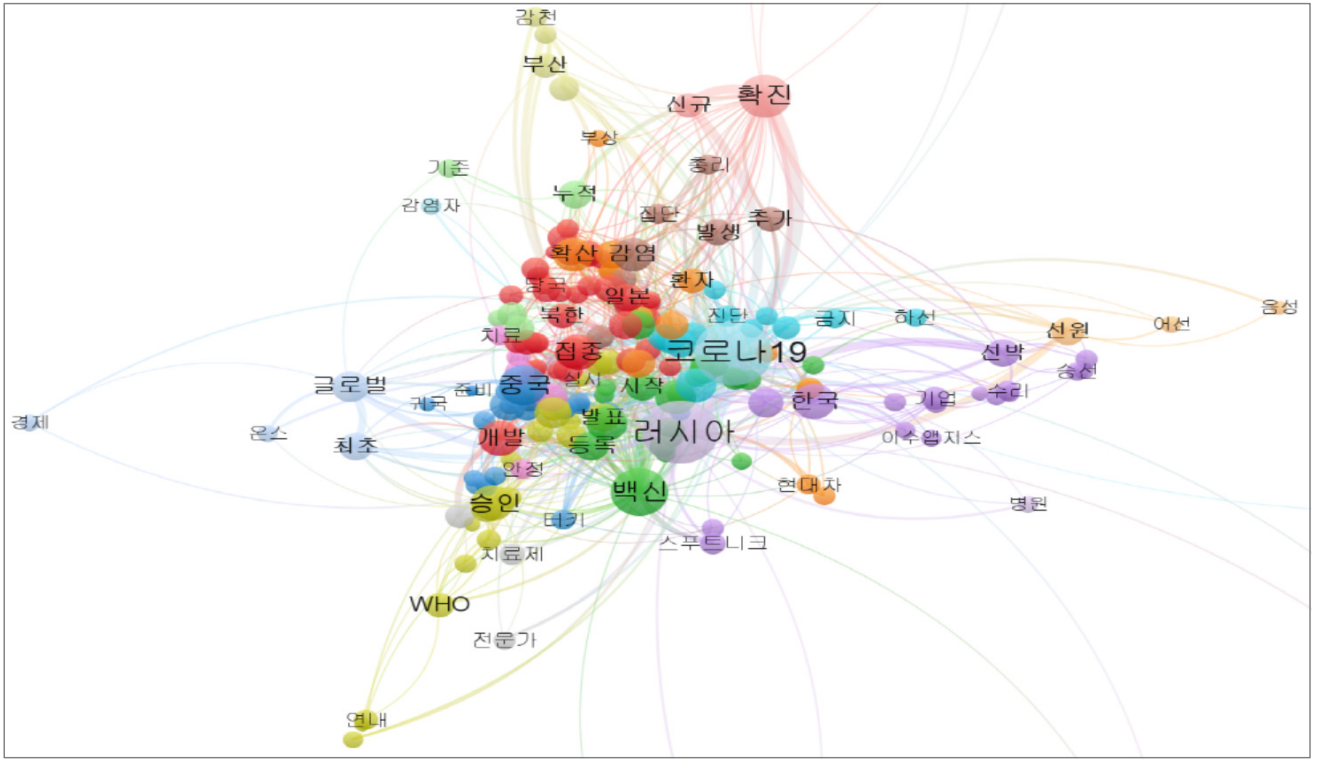
71) "Меры борьбы с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COVID-19 в России," 2021.10.20., 〈https://ria.ru/20211020/koronavirus-1755410591.html〉 (Accessed December 7, 2021); 김태경, "러시아의 방역·보건 특징과 동북아 협력 방안,"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자료, 2021.11.1.)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거주 환승객 등은 제외), 둘째, 검역 강화, 셋째, 초·중·고 및 대학교의 원격수업 전환, 넷째, 다중이용시설 이용 금지, 다섯째, QR 코드 적용 등이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바이러스 등의 등장으로 러시아의 코로나19 감염자는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2021년 12월 3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누적 합계 9,736,037명을 기록하였고, 그중 누적 사망자 수는 278,857명이며, 최근 7일 동안 새로 보고된 확진 사례는 233,158건으로 안정적 방역이 필요하다. 러시아 정부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진단, 검사, 치료 등으로 러시아에서 하루 평균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사용되는 예산은 36억 루블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나, 인구 100명당 백신 접종자 수(백신 종류에 따라 1회 또는 2회로 접종 완료한 경우)는 38.45명으로 자국의 백신 접종 비율을 빠르게 상승시킬 필요가 있다.[72]

〈그림 Ⅲ-6〉에서 나타나는 러시아의 코로나19 관련 보도에 대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73]을 통해 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결중심성은 '러시아'와 '코로나19' 키워드를 중심으로 '백신', '확진', '중국', '한국', '확산', '푸틴', '생산', '접종', '승인', '개발', '글로벌'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의 연결중심성 관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어에 '러시아'와 '코로나19'를 제외하면 '백신'이 높은 연결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러시아는 '스푸트니크 V(Sputnik V)' 백신을 개발하였는데, 자체 백신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는 성공적이었으나 방역에서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한편 한국에서 러시아의 백신을 생산하면서 이와 관련된 키워드가 자주 등장하였다. '동방협'과 관련하여 '협력'이라는 단어의 연결중심성을 살펴보면 가장 순위가 낮은 일본이나 미국과 달리 43번째로 비교적 높은 연결중심성을 보여주며 백신의 개발 및 생산 협력의 측면에서 '협력'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2) WHO, "WHO Coronavirus(COVID-19) Dashboard."
73) 러시아와 관련된 분석 대상 뉴스는 전체 16,618건 중에서 1,288건에 해당한다.

<그림 Ⅲ-6> 러시아의 코로나19 관련 주요 키워드 네트워크



나. 러시아의 방역·보건 협력[74]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전염병에 대한 국제적 협력 강화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자국의 전염병 퇴치 경험 및 학문적 성과, 기술 등의 공유에 적극적이다. 2016년 라오스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매년 참석 중이며, 러시아는 동 회의에서 동아시아정상회의 차원의 '전염병 퇴치 매커니즘' 창설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매년 열리는 동 회의에서는 전염병 퇴치를 위한 실질적 다자협력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참석국 모두 전염병 방지를 위한 상호호혜적인 협력 강화에 공통의 의견을 피력한다. 푸틴 대통령도 '2019 러시아-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전염병 퇴치를 위한 협력 강화를 제안함에 따라, 러시아 연방 소비자권리보호감독청은 2019년 12월 20여 명의 동아시아정상회의 회원국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블라디보스토크 생물안전·위생 전염병 국제과학기술센터 주최 아래 각종 교육 및 학문교류 등을 진행하였다.[75] 2021년 10월 개최된 '러-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양측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2021-2025 러-아세안 전략적 파트너십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도 발표하였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양측은 전염병의 예방, 진단, 치료 및 관련 연구 개발 등을 위한 협력 강화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76]

---

74) 김태경, "러시아 방역·보건 특징과 동북아 협력 방안" 자문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75)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 укрепляет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о странами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для борьбы с эпидемиями,"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 2019.4.11.〈https://www.rospotrebnadzor.ru/about/info/news/news_details.php?ELEMENT_ID=12980〉(검색일: 2021.10.28.).

76) 종합행동계획은 2018년 채택된 제3차 러시아-아세안 전략적 파트너십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따라 2021년~2025년 러시아와 아세안간 호혜적 협력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정치, 안보, 경제, 사회문화, 공중 보건, 전염병 대응,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이익과 번영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Комплексный план действий по реализаци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артнёрства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Ассоциацией государств Юго-Восточной

러시아는 한국과 전염병 퇴치 및 대응의 다자협력체 안에서 한국('동방협')과 러시아(동아시아정상회의)가 각각 제안한 협력 강화 이니셔티브와 다자협력틀 안에서의 양국의 역할도 높게 평가하고 있어[77] 향후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러시아는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ce States: CIS) 안에서 전염병 예방 등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해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인 2020년 12월에는 CIS 회원국 간 정기회의를 통해 코로나19, 결핵, HIV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비전염성 질환의 예방 및 통제 등에 관한 전략('2020-2021년 CIS 회원국 국민의 건강') 이행을 위한 각종 계획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하기도 하였다.[78]

방역·보건 국제협력에 대한 러시아의 기본적인 입장은 언제나 국제적 협력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동방협' 제안에도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지난해 12월 '동방협' 출범 이후 꾸준히 실무회의, 토론회 등에 참여하고 있다. 2020년 UN 총회에 참석한 푸틴 대통령이 스푸트니크 V 백신의 무료 공급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

Азии (2021–2025 годы),"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2021.10.28., 〈http://kremlin.ru/supplement/5726〉 (검색일: 2021.11.20.).

77) "Выступление и ответы на вопросы СМИ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В.Лаврова в ходе совместной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с Министром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Чон Ый Ёном по итогам переговоров, Москва, 27 октября 2021 года,"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21.10.27., 〈https://mid.ru/cn/foreign_policy/news/1784554/〉 (검색일: 2021.11.20.).

78) "Вопросы развит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област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 рамках Содружества обсуждены в режиме видеоконференцсвязи,"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комитет Содружества Независимых Государств, 〈https://cis.minsk.by/news/17461/voprosy_razvitija_sotrudnichestva_v_oblasti_zdravoohranenija_v_ramkah_sodruzhestva_obsuzhdeny_v_rezhime_videokonferencsvjazi〉 (검색일: 2021.11.20.).

기도 한 만큼, 방역·보건 협력체의 틀 안에서 비교적 백신 공급이 열악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에 무료 백신을 공급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다만, 러시아는 미국보다는 중국과의 관계 발전에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방역·보건 협력체에서의 미중 갈등이 있을 경우, 중국의 입장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6. 몽골

가. 몽골의 방역 현황 및 특징

몽골은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이후 중국을 통한 외국인 입국 금지 및 몽골 국민의 중국으로의 출국 금지 조치 등을 실시하였다. 2020년 3월 7일 몽골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입국 외국인)가 발생하였고, 몽골 정부는 즉각 접촉자 추적 격리조치 및 이동 통제를 실시하였다.[79] 그동안 중국을 포함하여 한국, 이탈리아, 일본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하던 몽골 정부는 국내 확진자 발생 이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 울란바토르를 포함한 지방거점 도시에 대한 봉쇄 조치를 시행하는 등 방역조치를 더욱 강화하였다. 3월 16일 임시 항공편으로 귀국한 몽골인 3명이 확진자로 확인되면서 총 확진자가 4명이 되자 몽골 정부는 방역을 위한 대외 제한조치를 순차적으로 강화하고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였다.[80] 이러한 방역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79) 주몽골 대한민국대사관, "(공지)몽골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주몽골 대한민국대사관』, 2020.3.10., 〈https://overseas.mofa.go.kr/mn-ko/brd/m_388/view.do?seq=1317686&page=7〉 (검색일: 2021.11.15.).

80) 주몽골 대한민국대사관, "(공지)몽골 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3명) 발생 및 외국인 몽골 입국 전면 금지," 『주몽골 대한민국대사관』, 2020.3.17., 〈https://overseas.mofa.go.kr/mn-ko/brd/m_388/view.do?seq=1317692&page=6〉 (검색일: 2021.11.15.).

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3월 7일부터 2021년 2월까지는 봉쇄령, 이동제한 조치, 사업장 영업 제한, 온라인 수업, 재택근무 의무화 등으로 국내 확진자의 발생 억제 및 확산 방지에 중점을 두었다. 동시에 다양한 대국민 재난지원 대책 시행과 기존 사회복지제도의 확대로 국민의 생계유지를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몽골은 국내에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즉각적으로 국경을 폐쇄하고 국내 이동을 제한 등 과감하고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렇게 과감하고 강력한 방역 조치는 지체 없는 행정조치 시행과 강력한 공권력 행사가 용인되는 사회문화 속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으며, 델타 변이바이러스 대유행 이전인 2021년 초까지는 방역 상황이 크게 악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1년 12월 3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누적 합계 383,093명을 기록하였으며, 그중 누적 사망자 수는 1,978명에 달하고, 최근 7일 동안 새로 보고된 확진 사례는 2,768건으로 적은 인구수에 비해 많은 편이다. 한편 몽골 정부는 백신 물량 확보 및 접종률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었는데 2021년 상반기에 이미 백신 접종 대상자(만 12세 이상)의 8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였고, 인구 100명당 백신 접종자 수(백신 종류에 따라 1회 또는 2회로 접종 완료한 경우)는 65.49명(12월 3일 기준)으로 세계 평균 42.13명보다 높고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참여국들의 평균 수준이다.[81]

처음 백신 접종은 중국 시노팜 백신을 시작으로,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러시아 스푸트니크 V, 화이자(Pfizer) 백신 등을 충분히 확보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백신 확보 초기에는 세계적으로 상대적 선호도가 낮은 중국의 시노팜과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 백신이 다수를 차지하였지만, 저개발국가는 물론, 인근 국가들과 비교해도 백신 물량 확보 및 접종률에 있어 뛰어난 외교적 수완을 발휘했다고

81) WHO, "WHO Coronavirus(COVID-19) Dashboard."

평가된다. 몽골은 중국이 코로나19에 의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2020년 1월 말 중국에 코로나19 확산 통제를 명분으로 2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82] 2월에는 바툴가(Khaltmaa Battulga) 대통령이 양 3만 마리와 함께 중국을 방문하였다.[83] 또한 2020년 3월 13일에는 '영원한 이웃-하트 서포트' 캠패인을 통해 모금된 3억 9,160만 투그릭(약 98만 위안)을 중국에 전달하였다.[84] 러시아에도 인도적 차원에서 2020년 5월 26일 6천 7백만 루블(1백만 달러) 상당의 육류 및 육가공 제품을 제공하였다.[85] 이러한 정부 지원 노력이 이후 몽골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중국과 러시아 등으로부터 백신 및 각종 지원에 대한 협상에서 이롭게 작용하였다.

한편 〈그림 Ⅲ-7〉 그림과 같이 몽골의 코로나19 관련 보도에 대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86]을 통해 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결중심성은 '몽골'과 '코로나19'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아기', '회담', '협력', '한국', '중국', '산모', '대응', '확진', '화상', '우즈베키스탄', '브리핑'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에서 연결중심성의 관점에서 보

82) "蒙古国将向中国提供20万美元的无偿援助," Монцамэ, 2020.1.31., 〈https://www.montsame.mn/cn/read/214702〉 (검색일: 2021.11.15.).

83) "蒙古国向中国赠送30000只羊," Монцамэ, 2020.2.27., 〈https://montsame.mn/cn/read/217209〉 (검색일: 2021.1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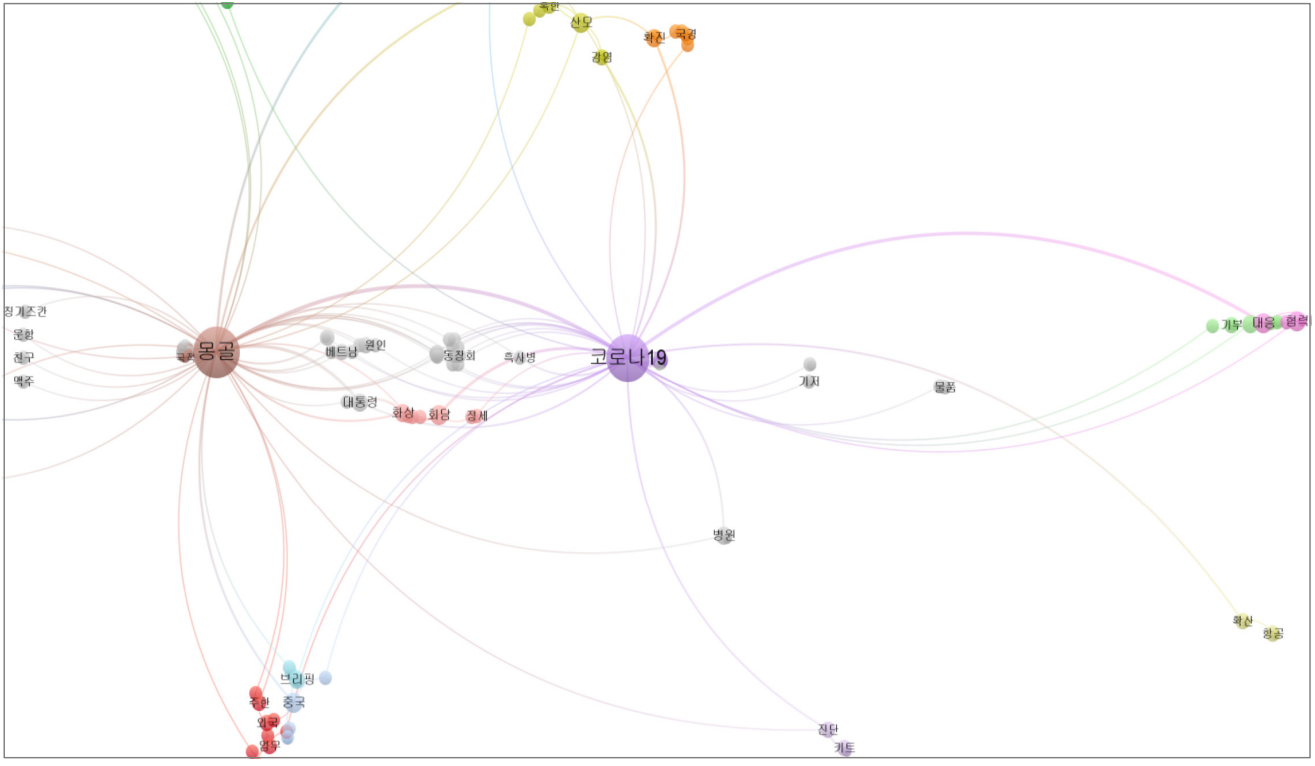
84) "蒙古国"永久的邻居·暖心支持"人道之旅首批善款移交中方," 『人民网』, 2020.3.3., 〈http://world.people.com.cn/n1/2020/0313/c1002-31631413.html〉 (검색일: 2021.11.15.).

85) "(몽골)러시아에 1백만 달러 상당 육류 및 육류 제품 지원," 『하이몽골리아뉴스』, 2020.5.26., 〈https://himongolianews.net/%eb%aa%bd%ea%b3%a8%eb%9f%ac%ec%8b%9c%ec%95%84%ec%97%90-1%eb%b0%b1%eb%a7%8c-%eb%8b%ac%eb%9f%ac-%ec%83%81%eb%8b%b9-%ec%9c%a1%eb%a5%98-%eb%b0%8f-%ec%9c%a1%eb%a5%98-%ec%a0%9c%ed%92%88-%ec%a7%80%ec%9b%90/〉 (검색일: 2021.11.15.).

86) 몽골과 관련된 분석 대상 뉴스는 전체 16,618건 중에서 54건으로 뉴스 건수가 적어 통계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키워드 네트워크는 유의미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면 가장 중요한 핵심어는 앞에서부터 나열된 순서대로 높은 연결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몽골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주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며, 주변 국가들, 특히 중국과 방역·보건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역·보건 협력과 관계된 '협력'이라는 단어는 5번째로 매우 높은 연결중심성을 보여주며, 한국이 몽골에게 지원한 내용을 중심으로 많이 나타나 있다. '협력'이라는 단어가 높은 연결중심성을 보여준 북한과 마찬가지로 주로 도움을 받게 되는 상황이 많아, '협력'이 절실함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Ⅲ-7> 몽골의 코로나19 관련 주요 키워드 네트워크



나. 몽골의 방역·보건 협력[87]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개발도상국가 중 하나인 몽골은 주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다. 몽골은 이웃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었을 때 식료품 및 지원금 등을 지원하였으나, 이후 몽골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백신 및 각종 지원을 받기도 하였다. 2000년 4월 몽골에 16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중국은 49만 개의 마스크를 긴급 지원하고,[88] 후베이성과 내몽골을 통해 400만 위안(6억 8천만 원) 상당의 의료장비를 기증하였다.[89]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은 개발도상국에 공평한 백신 예방 접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으며, 몽골이 안전한 백신을 구입해 국민들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도록 1,900만 달러의 소프트 론 패키지를 승인했다. 유엔아동기금(United Children's Fund: UNICEF)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장비 및 의료기기 구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할인된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였다. 몽골은 유엔아동기금을 통해 한국으로부터 구매한 36만 도즈의 독감 백신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미 대상인 어린이들에게 접종하였다.[90]

---

87) 박정후, "몽골의 방역·보건 특징과 동북아 협력 방안,"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자료, 2021.11.1.)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88) "中国向蒙古国紧急援助49万只口罩," 『中国新闻网』, 2020.4.11., 〈https://www.chinanews.com.cn/sh/2020/04-11/9154005.shtml〉 (검색일: 2021.11.15.).

89) "중국, 몽골에 6억 8천만원 상당의 장비와 도구 기부," 『하이몽골리아뉴스』, 2020.11.23., 〈https://himongolianews.net/%ec%a4%91%ea%b5%ad-%eb%aa%bd%ea%b3%a8%ec%97%90-6%ec%96%b5-8%ec%b2%9c%eb%a7%8c%ec%9b%90-%ec%83%81%eb%8b%b9%ec%9d%98-%ec%9e%a5%eb%b9%84%ec%99%80-%eb%8f%84%ea%b5%ac-%ea%b8%b0%eb%b6%80/〉 (검색일: 2021.11.15.).

90) "(단신) 한국에서 구매한 독감 백신 36만 도즈 몽골에 9월 8일 공급," 『하이몽골리아뉴스』, 2021.9.9., 〈https://himongolianews.net/%ec%95%84%ec%8b%9c%ec%95%84%ea%b0%9c%eb%b0%9c%ec%9d%80%ed%96%89adb-%eb%aa%

한국은 정부 및 민간 기업 등이 나서서 몽골을 지원하였는데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코로나19 구호 활동을 위해 150만 달러 규모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 5월에는 3만 개의 신속 검사키트와 6,432개의 PCR 진단키트를 지원하였고, 10월에는 10개의 워크 스루 부스를 제공했다. 2021년 2월에는 15대의 이동식 음압 운반기를 제공하여 의료 종사자의 감염 위험을 줄이도록 하였고, 6월에는 의료인을 위한 개인 보호구, 소독 용품, 위생용품을 기증하였으며, 학생들을 위한 위생 및 소독 용품과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이 이뤄졌다.[91] 민간 기업의 지원도 이뤄져 2021년 5월에 ㈜씨젠이 14억 투그릭 상당의 코로나19 PCR 검사기를 몽골 보건부에 기증하였다.[92]

중요한 점은 2021년 8월 17일, 한국 외교부가 '동방협' 사업의 일환으로 한몽 '의료방역 물품 공동 비축제' 시범사업을 통해 신속 항원 진단키트를 30만 달러 규모로 지원함으로써 '동방협'의 실질적 협력사업의 출발을 알렸다.[93]

---

bd%ea%b3%a8%ec%97%90-%eb%b0%b1%ec%8b%a0-%ec%a0%91%ec%a2%85%ec%9d%84-%ec%9c%84%ed%95%b4-1900%eb%a7%8c-%eb%8b%ac%eb%9f%ac/〉(검색일: 2021.11.15.).

91) "KOICA(한국 국제 협력단) 코로나19 구호 활동을 위해 몽골에 150만 달러 상당 보조금 지원," 『하이몽골리아뉴스』, 2021.3.27., 〈https://himongolianews.net/koica%ed%95%9c%ea%b5%ad-%ea%b5%ad%ec%a0%9c-%ed%98%91%eb%a0%a5%eb%8b%a8-%ec%bd%94%eb%a1%9c%eb%82%9819-%ea%b5%ac%ed%98%b8-%ed%99%9c%eb%8f%99%ec%9d%84-%ec%9c%84%ed%95%b4-%eb%aa%bd%ea%b3%a8%ec%97%90-150/〉(검색일: 2021.11.15.); ЭРҮҮЛ МЭНДИЙН ЯАМ, "Аж ахуй нэгж байгууллага, ард иргэдээс өгсан хандив, тусламжийн жагсаалт," 〈https://covid19.mohs.mn./p/cat/post/50/〉(검색일: 2021.11.15.).

92) "한국 씨젠, 14억 MNT 상당의 PCR 검사기를 몽골 보건부에 기증," 『하이몽골리아뉴스』, 2021.5.18., 〈https://himongolianews.net/%ed%95%9c%ea%b5%ad-%ec%94%a8%ec%a0%a0-14%ec%96%b5-mnt-%ec%83%81%eb%8b%b9%ec%9d%98-pcr-%ea%b2%80%ec%82%ac%ea%b8%b0%eb%a5%bc-%eb%aa%bd%ea%b3%a8-%eb%b3%b4%ea%b1%b4%eb%b6%80%ec%97%90-%ea%b8%b0%ec%a6%9d/〉(검색일: 2021.11.15.).

미국은 2021년 3월 10일, 주몽골 미국대사관을 통해 코로나19 진단 테스트기 3만 회분, 마스크 2만 개, N95 마스크 5만 5천 개, 장갑 142,500개 등을 지원하였다.[94] 사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미국은 약 800만 달러를 지원하였고, 화이자 백신 100만 회분을 제공할 예정으로 2021년 10월 6일 지난 9월 도착한 화이자 백신 188,370회분에 이어 899,730회분이 추가로 도착하였다.[95] 일본 또한 몽골 정부가 화이자 백신 235만 회분을 구입하도록 자금을 지원했다.[96]

일본은 2021년 2월 10일, 일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e: JICA)를 통해 N95 마스크 3,700개, 작업복 3,700벌 및 가운, 장갑, 시신 보관 가방, 물티슈, 소독제 등 방역·의료 물품을 지원하고,[97] 코로나19 위기 대응 긴급 지원을 위한 8억 8,300만 엔(800만 달러)의 보조금을 무상지원하기로 하였다.[98] 그 밖에도

93) 외교부,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이하 협력체)」 협력사업 시범 가동," 보도자료 21-588.

94) ЭРҮҮЛ МЭНДИЙН ЯАМ, "Аж ахуй нэгж байгууллага, ард иргэдээс өгсан хандив, тусламжийн жагсаалт," 〈https://covid19.mohs.mn./p/cat/post/50/〉 (검색일: 2021.11.15.).

95) 2021년 4월 16일 미국 상원에서 몽골과 미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결의안이 승인을 받으면서 미몽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원에서 몽골-미국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결의안을 승인," 『하이몽골리아뉴스』, 2021.4.21., 〈https://himongolianews.net/%eb%af%b8%ea%b5%ad-%ec%83%81%ec%9b%90%ec%97%90%ec%84%9c-%eb%aa%bd%ea%b3%a8-%eb%af%b8%ea%b5%ad-%ec%a0%84%eb%9e%b5%ec%a0%81-%ed%8c%8c%ed%8a%b8%eb%84%88%ec%8b%ad%ec%9d%84-%ea%b0%95%ed%99%94%ed%95%98/〉 (검색일: 2021.11.15.).

96) "미국에서 화이자 백신 899,730회가 추가로 몽골에 도착," 『하이몽골리아뉴스』, 2021.10.7., 〈https://himongolianews.net/%eb%af%b8%ea%b5%ad%ec%97%90%ec%84%9c-%ed%99%94%ec%9d%b4%ec%9e%90-%eb%b0%b1%ec%8b%a0-899730%ed%9a%8c%ea%b0%80-%ec%b6%94%ea%b0%80%eb%a1%9c-%eb%aa%bd%ea%b3%a8%ec%97%90-%eb%8f%84%ec%b0%a9/〉 (검색일: 2021.11.15.).

97) ЭРҮҮЛ МЭНДИЙН ЯАМ, "Аж ахуй нэгж байгууллага, ард иргэдээс өгсан хандив, тусламжийн жагсаалт."

98) "일본, 몽골에 800만 달러 자금 지급 승인," 『하이몽골리아뉴스』, 2021.8.4., 〈https:

2021년 10월 19일 베트남 정부 및 국민들은 지원금 5만 달러를 몽골 정부에 기부하였고,[99] 스위스도 산소 공급기, X선 기계 등 의료장비를 제공한 바 있다.

이처럼 몽골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 이후 방역·보건 분야의 국제협력은 대부분 원조를 받아야 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현재 몽골은 방역 상황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동방협'과 같은 공동체에 직접적인 기여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 몽골은 현재 총 2,790여 종에 이르는 대부분의 의료장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100] 그중에서 중국산 40% 이상, 미국산 16%, 한국산 12%, 독일산 7% 등 12개 이상의 국가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2021년 보건 부문 구매 예산이 1,100억 투그릭에 달한다.[101]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국과 접경한 최대 교역 루트로 양국 무역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몽골 자밍 우드

//himongolianews.net/%ec%9d%bc%eb%b3%b8-%eb%aa%bd%ea%b3%a8%ec%97%90-800%eb%a7%8c-%eb%8b%ac%eb%9f%ac-%ec%9e%90%ea%b8%88-%ec%a7%80%ea%b8%89-%ec%8a%b9%ec%9d%b8/〉(검색일: 2021.11.15.).

99) "베트남 정부와 국민들이 몽골 비상대책위원회에 5만 달러 기부," 『하이몽골리아뉴스』, 2021.10.19., 〈https://himongolianews.net/%eb%b2%a0%ed%8a%b8%eb%82%a8-%ec%a0%95%eb%b6%80%ec%99%80-%ea%b5%ad%eb%af%bc%eb%93%a4%ec%9d%b4-%eb%aa%bd%ea%b3%a8-%eb%b9%84%ec%83%81%eb%8c%80%ec%b1%85%ec%9c%84%ec%9b%90%ed%9a%8c%ec%97%90-5%eb%a7%8c/〉(검색일: 2021.11.15.).

100) "자밍 우드 국경 검문소 폐쇄로 의약품 공급 중단," 『하이몽골리아뉴스』, 2021.10.30., 〈https://himongolianews.net/%ec%9e%90%eb%b0%8d-%ec%9a%b0%eb%93%9c-%ea%b5%ad%ea%b2%bd-%ea%b2%80%eb%ac%b8%ec%868c-%ed%8f%90%ec%87%84%eb%a1%9c-%ec%9d%98%ec%95%bd%ed%9288-%ea%b3%b5%ea%b8%89-%ec%a4%91%eb%8b%a8/〉(검색일: 2021.11.15.).

101) "몽골에서 사용되는 모든 의료 방비의 40%가 중국에서 수입된다," 『하이몽골리아뉴스』, 2021.10.21., 〈https://himongolianews.net/%eb%aa%bd%ea%b3%a8%ec%97%90%ec%84%9c-%ec%82%ac%ec%9a%a9%eb%90%98%eb%8a%94-%eb%aa%a8%eb%93%a0-%ec%9d%98%eb%a3%8c-%ec%9e%a5%eb%b9%84%ec%9d%98-40%ea%b0%80-%ec%a4%91%ea%b5%ad%ec%97%90%ec%84%9c-%ec%88%98/〉(검색일: 2021.11.15.).

(Dzamin Uud)와 중국 얼롄하오터(二连浩特) 구간이 양국 정부에 의해 번갈아 폐쇄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소비재 수입뿐만 아니라, 의료 및 방역 장비 등의 수입에도 어려움을 겪었다.[102)]

따라서 '동방협' 활성화와 관련하여 감염병 창궐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동방협' 참여국 간 의료기기 및 방역 물품에 대해 수출입 관세의 한시적 폐지 및 통관절차 간소화, 참여국 간 한정적 통관 승인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7. 소결

감염병을 비롯한 비전통 안보 영역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 간 협력이라고 할 수 있으나,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개별 국가별로 나타난 결과는 상이하다. '협력'이라는 키워드의 연결중심성을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가장 순위가 낮은 301번째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미국은 다른 키워드와 비교해 165번째로 매우 낮은 연결중심성을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지원'이라는 키워드가 미국에서는 25번째, 일본에서는 58번째로 나타나, 미국과 일본은 개발도상국 및 코로나19 관련 지원이 필요한 국가에 방역·의료 물품 및 백신 등을 지원한 것처럼 '지원'과 관련한 사항이 많아 상대적으로 협력보다는 지원이 더욱 비중 있게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협력'이라는 키워드가 중국에서는 61번째, 러시아에서

102) 2021년 10월 13일, 중국의 얼롄하오터시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자 중국 정부는 이 구간의 국경을 무기한 폐쇄 조치함: "중국 옐렌 물류센터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자밍 우드 국경검문소를 통한 운송 폐쇄," 『하이몽골리아뉴스』, 2021.10.15., 〈https://himongolianews.net/%ec%a4%91%ea%b5%ad-%ec%98%90%eb%a0%8c-%eb%ac%bc%eb%a5%98%ec%84%bc%ed%84%b0%ec%97%90-%ec%bd%94%eb%a1%9c%eb%82%9819-%ed%99%95%ec%a7%84%ec%9e%90%ea%b0%80-%eb%b0%9c%ec%83%9d%ed%95%98%ec%97%ac-%ec%9e%90/〉 (검색일: 2021.11.15.).

43번째로 나타나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연결중심성이 나타난다.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지원'이라는 키워드가 각각 22번째, 33번째로 나타나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해 큰 차이는 없지만 '협력'과 '지원'이 모두 비중 있게 나타난다. 특히 몽골에서는 '몽골', '코로나19' 등에 이어 5번째 순서로 연결중심성을 보이며 가장 주요한 핵심어 중 하나로 몽골에 대한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한국의 몽골과의 협력과 관련한 사항이 비중 있게 다뤄진 결과이기도 하다.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협력'이라는 키워드가 보여주는 의미는 자국의 입장에서 협력해줘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받아야 하는 것인지 그 필요성에 따라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어 '협력'과 '지원'이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지만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방역, 치료, 예방 등의 모든 측면에서 자체 해결이 가능하여 비록 협력에 대해 논하고 있지만, 실제로 미국이 행하는 국제적 '지원'에 대해 강조한다. 중국은 '백신외교' 차원에서 국제적 '협력'을 강조하면서 명분론을 내세워 자국의 입지를 확대하기 위해 백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이 나타난다. 이와 달리 몽골은 한국이나 중국 등이 몽골과 코로나19 관련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지원받는 상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백신외교는 자국의 경제적·외교적 이해관계와 밀접한 국가들과의 협력을 기본으로, '보건실크로드 구상', '인류보건건강공동체 구축', '인류운명공동체 건설', '백신불균등 해소' 등의 명분을 내세워 담론을 형성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논리는 중국이 '동방협'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명분과 실리를 제공한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적 리더십에 강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바, 보건안보와 관련한 국제협력 분야 역시 외교적 성과로 연결하려고 할 것이며, 세계적 보건안보 위기 속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지원과 협력을 계기로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복원하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코로나

19 위기를 활용해 군사안보와 연결하여 중국과의 경쟁 속에서 미국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구체화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보험제도 등 지금까지 구축한 보건시스템 경험을 살려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적극적으로 백신 및 보건시스템을 개발도상국 및 아시아지역 국가에 지원하여 그들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한편으로는 위기에 대비한 보건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방역·보건 국제협력에 대한 러시아의 기본적인 입장은 언제나 국제적 협력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동방협'에도 적극적 지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스푸트니크 V' 백신을 활용하여 독립국가연합 국가와 동남아시아 국가에 적극적인 보건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러시아는 미중 간의 갈등 시 '동방협' 활성화와 관련하여 중국의 입장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몽골은 방역·보건 분야에서 대부분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므로 '동방협'과 같은 공동체에 직접적인 기여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표 Ⅲ-5〉 참고). 따라서 '동방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에서 열거한 참여국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고 반영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표 Ⅲ-5>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참여국 간 비교평가(상/중/하)

'동방협' 관심 및 참여도		상	중	중	중	상
북한 참여 기여 가능성		상	상	하	중	중
방역·보건 역량	의료·보건체계	중	상	상	중	하
	백신	유(有)	유(有)	무(無)	유(有)	무(無)
국제적 보건 협력		상	상	중	상	하
'협력' 연결중심성		중	하	하	중	상
'지원' 연결중심성		상	상	중	상	하

출처: 저자 작성.

Ⅳ. 한중 방역·보건 협력 및 특징

1. 한중 방역·보건 협력 현황

한국과 중국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감염병 대응을 위해 여러 차례 면담과 통화, 화상회의 등을 통해서 협력해왔다(〈표 Ⅳ-1〉 참고). 중국에서 코로나19 발병 이후 2020년 3월 13일 제1차 한중 코로나19 대응 방역 협력을 위해 국장급 대화를 시작으로 한중 외교장관 회담, 한중 정상 통화 등을 통해 양국 간 방역물자를 지원하기도 했으며,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동방협' 지지를 이끌고, 2020년 5월부터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기업인 간의 '신속통로(Fast Track, 기업인 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를 상호 합의 하에 시행하는 등 보건 협력을 진행하면서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했다고 평가된다.[103]

<표 Ⅳ-1> 한중 코로나19 대응 관련 주요 협력 현황

일시	구분	주요 내용
2021. 10.19.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코로나19 공동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화상 토론회	
9.15.	한중 외교장관 회담	• 신속통로 제도,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출범 등 모범 협력 사례
5.27.	한중 코로나19 대응 방역 협력(국장급)대화 (제3차 화상회의)	• '의료 방역물품 공동비축제' 조기 구축 방안 제안 • 감염병 대응 관련 공동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 강조 • 참여국 방역·보건 전문가 간 화상회의 개최 제안
4.3.	한중 외교장관 회담	• '건강코드 상호 인증체제(健康码互認機制)' 구축, 백신 협력, 신속통로(Fast Track) 적용 범위 확대 논의

103) 그러나 한편으로는 보건 협력이 잘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 코로나19라는 인류 초유의 감염병 사태가 국가 간 협력을 일깨워주기도 하였지만, 반대로 빗장을 걸어 잠그는 봉쇄와 차단, 자국 중심의 행위를 더욱 부추기기도 하였다.

일시	구분	주요 내용
2.16.	한중 외교장관 통화	•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발전을 위한 소통, 협력
1.27.	한중 정상 통화	• 중국측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지지 • 백신 관련 국제 협력체제 강화
2020. 11.26.	한중 외교장관 회담	•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회담 • 왕이 중국 외교부장: 수망상조(守望相助: 어려울 때 서로 협조하며 대응한다)
5.15.	한·중·일 보건장관 특별영상회의	
4.29.	한중 코로나19 대응 방역 협력(국장급)대화 (제2차 화상회의)	
3.14	시진핑 국가주석 위로 전문	• 한국 어려움 공감, 한국 지원 힘닿는 대로
3.13.	한·중 코로나19 대응 방역 협력(국장급)대화 (제1차 화상회의)	
1.28.	시주석 생일 축하 서한에 대한 문대통령 답신	• 조속한 수습 기원, 한국 정부 지원과 협력

출처: 저자 작성.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과의 보건 협력 및 교류에 있어서, 실제로 해외로부터 기부 물품을 지원받은 한국의 각 지역 적십자사 및 지방자치단체(배분처)는 총 222곳인데, 그중에서 중국이 가장 많은 지원을 했으며 총 208곳에 마스크, 방호복 등 약 1,200만 점의 물품을 지원하였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략 136억 원에 달하였다(〈표 Ⅳ-2〉 참고). 한국 또한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국에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하였다.

<표 Ⅳ-2> 해외 기부물품 접수 및 배분 현황(2020년 6월 5일 기준)

	기부국가	배분처	수량	환산가액
1	중국	208	11,913,802	13,625,911,792
2	기타(미국, 일본 등)	14	621,844	833,864,070
합계		222	12,535,646	14,457,975,862

주: 물품금액은 1RMB=170원, 1USD=1,200원 기준으로 산정.
출처: 대한적십자사, "해외 기부물품 접수 및 배분 현황," 〈https://www.redcross.or.kr/donation_campaign/202003/popup_v2.htm〉 (검색일: 2021.12.10.)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중국의 대(對)한국 기부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표 Ⅳ-3〉처럼 중국 지방정부의 참여가 가장 많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우호결연을 맺고 국제교류를 진행해온 중국의 성(省)정부, 시(市)정부 등의 기부 및 지원 활동이 활발하다. 실제로 중국과 한국의 지방정부 간에는 총 676건의 자매·우호결연(2021년 1월 기준)[104]을 맺고 교류협력을 진행하고 있어 우호 교류를 오랫동안 추진해온 미국과 일본보다도 훨씬 많은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가 이뤄지고 있다.[105]

<표 Ⅳ-3> 중국의 대한국 기부물품 접수 및 배분 현황(2020년 6월 5일 기준)

	기부처	배분처	수량	환산가액
1	중국 중앙정부	2 (대한적십자사 1, 2차)	2,110,000	1,914,600,000
2	중국 지방정부	120	4,217,950	4,753,426,096
3	기타 (기업, 단체, 개인 등)	86	5,585,852	6,957,885,696
합계		208	11,913,802	13,625,911,792

주: 물품금액은 1RMB=170원, 1USD=1,200원 기준으로 산정.
출처: 위의 자료.

한국 또한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국에 많은 인도적 지원을 하였다. 한국 정부는 중국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 2020년 1월 500만 달러(60억 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우선 중국 우한(武汉)시 교민들의 귀국을 지원하는 임시 항공편을 이용해 중국 우한 지역에 민관 협력을 통해 마스크 200만 장, 의료용 마스크 100만 장, 방호복·보호경 각 10만 개 등 의료구호 물품을 전달하기로 하였다.[106] 한국 기업의 기부

104)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종합현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https://www.gaok.or.kr/gaok/exchange/ list.do?menuNo=200079〉 (검색일: 2021.11.20.).
105) 황태연,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대(對)중국 지방정부 국제교류 연구: 현황, 특징 그리고 국제정치적 함의," 『현대중국연구』, 제19권 3호 (2017), p. 169.
106) "[속보] 정부 "중국에 총 500만달러 규모 인도적 지원 검토," 『중앙일보』, 2020.1.30.,

및 지원 활동도 활발하게 이뤄져, 중국 사회과학원의 통계조사에 의하면 중국 삼성, 현대자동차, SK차이나, 한미약품, LG, 포스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신한은행, 두산, 만도차이나, 애터미(Atomy), SPC 중국, 오리온, 아시아나항공 등 15곳의 기업이 참여(2020년 2월 1일 기준)하여, 총 기부액은 8,926만 위안(약 153억 원)으로 그 중 기부액은 6,350만 위안이고, 기부 물품은 금액으로 환산 시 2,576만 위안(약 44억 원)에 달하였다.[107]

한중 보건 협력에서 제도적 차원에서 보면, '신속통로' 신설이 핵심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신속통로는 '동방협'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 중 하나이다. 2020년 4월 한중 정부는 「한중 코로나19 대응 방역 협력 대화(국장급)」 제2차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간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신속통로 신설에 합의한 후, 2020년 5월 1일부로 시행했다. 신속통로는 중국 방문 외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이 제도화된 첫 번째 사례이며, 한국 기업인의 외국 방문 시 간소화된 입국절차 제도화의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하다. 신속통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는데 중국 지방정부에 기업인 '신속통로'를 신청하면, ➜ 초청장이 발급되고, ➜ 주한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 비자(사증)을 발급 받아, ➜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여 중국 입국 시 간소화된 입국절차를 적용하는 것이다.

신속통로는 성과가 나타나고 제도개선 및 확대에 대한 요구가 이뤄지면서, 2021년 4월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백신 협력, 신속통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동방협' 발전을 위한 지속적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측은 '건강코드 상호 인증체제(健康吗互认机

〈https://www.joongang.co.kr/ article/23693374#home〉 (검색일: 2021.11.3.).

107) "与中国"战"在一起!这些韩企向中国捐赠8926万抗击疫情," 『观察者』, 2020.2.28., 〈https://www.guancha.cn/ politics/2020_02_28_539017.shtml〉 (검색일: 2021.11.3.).

制)' 구축에 대해 제안하였는데 건강코드 상호 인증체제는 양국이 자국의 예방접종 계획에 상대국 국민을 포함하여 건강 코드를 이용한 방역 제도로 제안하였으나,[108] 개인정보 관리의 문제로 인해 논의를 지속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미국 상원의원들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중국의 미국인에 대한 개인정보 취득을 규제하는 내용의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법안 2021(The Protecting Sensitive Personal Data Act of 2021)'을 초당적으로 미 의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법안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 건강 상태, 보험 신청, 위치 정보, 사적 이메일, 신분 증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법안 발의 이유로 개인정보와 데이터가 유해한 행위자에게 노출되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109]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웃 국가인 한국과 중국은 방역·보건 협력 분야에서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상호 신속한 지원을 하였고, 크고 작은 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 협력을 위한 제도화의 장이 될 수 있는 '동방협'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비교적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표 Ⅲ-5〉 참고). 중국이 '동방협'의 제도화와 역내 참여국 확대 노력에도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와 같이,[110] 이러한 태도는 한중 간의 협력을 확장하여, 양국 간의 관계를 넘어서는 이니셔티브 구성에 양국이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108) "'한중 건강코드' 재촉하는 중국…올림픽 때문?" 『연합뉴스』, 2021.4.7., 〈https://m.yonhapnewstv.co.kr/news/ MYH20210407012100038〉 (2021.11.3.).

109) "美 상원의원들, '민감 개인정보 보호법안' 발의…"중국 겨냥"," 『연합뉴스』, 2021.11.3., 〈https://www.yna.co.kr/view/AKR20211103068800009〉 (검색일: 2021.11.3.).

110) 외교부, "한중 외교장관회담 개최 결과," 2021.9.15.,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152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검색일: 2021.12.14.).

2. 한중 방역·보건 협력 제약요인

한중 보건 협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가장 먼저 동북아 역내 정치, 경제, 안보 정세의 영향을 받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 동남아 국가들이 가성비가 좋은 중국 백신에 매력을 느끼나, 한편으로 중국에 의한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한 미중 간 전략적 경쟁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일본·호주·인도로 구성된 쿼드(Quad)에서 제공하는 백신과 중국의 백신 공급이 동남아에서 영향력 경쟁으로 비화되고 있다.[111] 이러한 측면은 보건 영역에서도 양국의 전략적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도 이에 의한 영향권 안에 있다는 점은 한중 협력에 일정 정도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심화에 따른 역학관계 변화에 따라 한중관계 발전을 제약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중국의 기술 굴기 및 성장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글로벌 가치사슬 문제 등 복합적 이해관계가 형성되고, 한국의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심한 가운데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비전통 안보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 내부의 중국에 대한 여론 악화는 한중 보건 협력에 제약을 가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있어 다년간의 협력과 교류가 진행되었지만,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젊은 층에서 강력한 반중 정서가 있다는 점은 향후 한중 보건 협력의 제약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112] 이러한 점은 중국과 동남아의 방역 협력에서도 제약 요소로 작

111) Victor Tay, "China and US Vaccines Diplomacy in South East Asia," *RHTLaw Asia*, 2021.9.10., 〈https://www.rhtlawasia.com/china-and-us-vaccines-diplomacy-in-south-east-asia/〉 (검색일: 2021.12.14.).

112) 조영빈, "'한국인, 日 가장 혐오' 통념 깨진다… 2030세대 '中이 더 싫다'," 『한국

동했다. 한중 간 역사, 문화 등 일련의 갈등 요인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에 대한 인식의 차이 심화에 따라 한중 협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한다.

그리고, 중국의 폐쇄적 형태의 코로나19 방역·보건 거버넌스와 '백신외교'에 대한 접근 방법 및 인식의 차이다. 코로나 위기 초기 '우한사태' 등 권위주의체제 특성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여기에 중국은 강력한 통제 거버넌스와 신속한 백신 대응을 기반으로 방역에 성공하고 백신외교를 펼치는 열린 외교적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위 권위주의, 개발도상국에 집중된 대외 관계 행태가 나타난다. 비록 감염병은 초국경 이슈지만 개별 국가의 '주권' 영역과 정치체제의 특성, 코로나19 방역·보건 수준과 여건의 차이로 인해 '동방협' 운영에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

'동방협'의 구성원 중 글로벌 수준을 지향하는 미국은 형식적인 참여자이며, 일본도 적극적이라 보기 어렵다. 러시아는 동북아 역내 행위자로서 지위가 약화된 상황이며, 몽골은 코로나19 방역에서 취약한 상태다. 결국, 이상의 상황을 보면 한국을 제외하고 중국이 가장 중요한 행위자임을 알 수 있다.

중국은 적극적으로 '동방협'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은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미중 경쟁 구도에 기인하는 한국과 중국은 긴장 상태에 있으며, 중국은 한국에게 '현상유지'를 요구하는 상황이고, 한국이 역내 변화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중국으로부터 한국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하는 '동방협'에 대한 실질적이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중국의 백신외교에

일보』, 2021.6.14.,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1311510002670〉 (검색일: 2021.12.13.).

대한 지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 백신의 효용성과 중국 정부의 백신외교의 의도에 대한 의심이 있는 상황과 미국을 위시한 서구가 중국 백신외교를 격하하고 자체적인 글로벌 백신외교를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K-방역으로 방역·보건의 모범국이자 높은 평가를 받는 한국이 이러한 외교정책을 선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반대로 중국은 이와 같은 한국의 공식적인 지지와 협력이 큰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소위 백신외교와 관련하여 최근 말레이시아와 태국, 인도 등 몇몇 국가들에서 중국 백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단계적 폐지를 발표하는 등 중국 백신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화이자나 모더나와 같은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방식의 백신이 감염 예방에는 더 효과적이지만, 중국 백신이 심각한 질병, 입원 사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게 기여했다는 데는 여전히 동의한다.[113]

3. 한중 방역·보건 협력 의미

한중 방역·보건 협력이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동북아 역내 정치, 경제, 안보 정세의 영향을 받는 구조적 문제나, 한중 내부의 여론 악화, 중국의 폐쇄적 형태의 방역·보건 거버넌스와 '백신외교'에 대한 접근 방법 및 인식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한계 등에도 불구하고, 한중 방역·보건 협력은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심화 구도 속에서 신종 감염병, 기후변화 등 비전통 안보 분야 협력 강화를 통해 역내 지정학적 갈등 요인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특히 한중 협력을 통해 북한의 '동방협' 참여를 견인하여, '동방협'이 북한을 포함한 역내 다자협력 사례로 확대 발전하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유리한 환경 및

113) Katharina Buchholz, "Where Chinese Vaccines Are Us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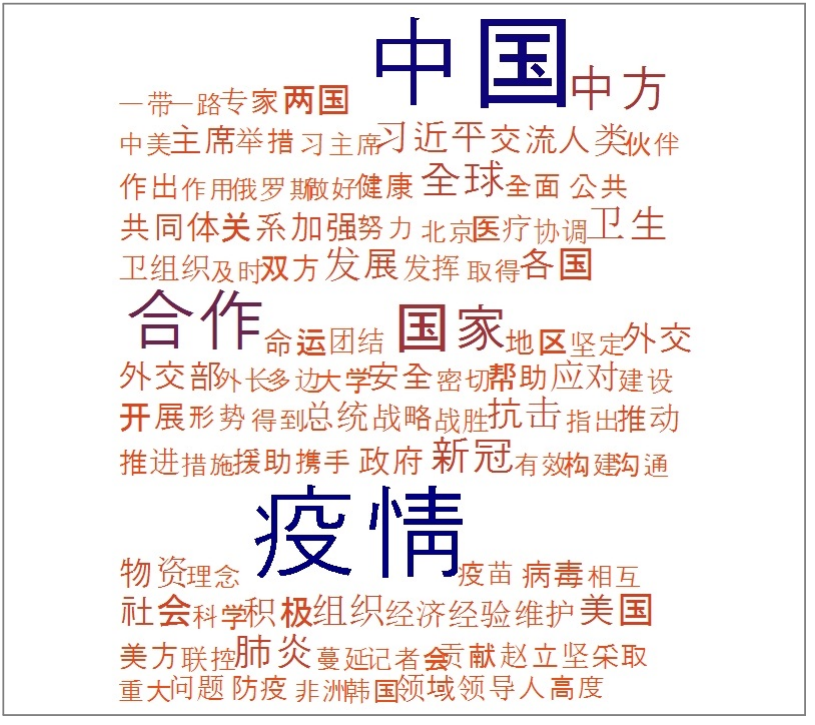
동북아 평화·안정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한중 보건 협력은 이러한 과정에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은 비전통 안보 분야에 대해 더욱 주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롭게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 한중 보건 협력과 같은 양자협력을 기반으로 '동방협'은 한국 주도의 소그룹 다자협력의 추진을 통해 능동적·선제적 외교 추진 사례로 활용이 가능하다. 동북아 지역처럼 역내 역학구조가 복잡하여 양자, 삼자, 다자협력 등의 다양한 협력모델을 시험하고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지역은 희소하다.

동북아 지역은 한중 양자협력을 확대한 동북아 역내 다자협력의 상보적 발전 가능성이 존재하며, 보건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기후, 환경 등 다양한 비전통 안보 분야의 협력모델을 제시하고 기존 비전통 안보 분야 협력체와의 연계 발전이 가능하다. 따라서 한중 방역·보건 협력과 같이 실질적인 비전통 안보 분야에 대한 양자협력을 바탕으로 다자협력체 '동방협'이 동북아 역내 초국경적 공동대응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발전 가능성은 매우 크다.

또한 한중 보건 협력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양국 간 비전통 안보 협력을 위한 새로운 모델 제시와 상호 협력 및 발전을 위한 대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림 Ⅳ-1> 중국의 코로나19 관련 단일 단어 비교분석



중국은 한국과의 보건 협력뿐만 아니라 몽골을 비롯하여 주변국에 방역물품 및 의료품, 백신 등을 지원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및 외교 관련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중국 언론보도에 나타난 관련 기사를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114] 먼저 중국의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코로나를 지칭하는 단어들, '전염병 상황(疫情)', '코로나(新冠)', '폐렴(肺炎)'의 순서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 밖에 코로나19 관련 '보건(卫

114) 단일 단어 비교분석에 쓰인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및 외교 관련 단어는 93,758개임; 〈그림 Ⅳ-1〉, 〈표 Ⅳ-4〉, 〈그림 Ⅳ-2〉의 분석방법에 대한 내용은 Ⅰ장 2절의 (2) 중국의 언론보도 빅데이터 분석 참고.

生)', '저항반격(抗击)', '물자(物资)', '의료(医疗)' 등의 단어 역시 함께 등장하고 있다. 여기서 물자, 의료 등은 중국이 주변국에게 지원한 의료물품과 의료지원을 나타내는 것으로 비교적 자주 등장한다. 즉, 앞서 Ⅲ장 2절에서 한국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특징에서 '지원'과 '협력'의 연결중심성이 높게 나타난 것처럼 이와 비슷하게 '협력(合作)', '교류(交流)', '원조(援助)' 등의 단어가 높은 빈도로 출현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주체인 자신들을 지칭하는 '중국(中国)', '중국측(中方)', '시진핑(习近平)' 단어 역시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전 세계 외교 대상 국가와 관련해서 '전 세계(全球)', '국가(国家)', '각국(各国)', '양국(两国)', '외교부(外交部)'라는 단어와 더불어 이들 대상과의 실제 교류와 연관된 '협력(合作)', '외교(外交)', '교류(交流)', '관계(关系)' 등의 단어들이 함께 많이 등장하고 있다(〈그림 Ⅳ-1〉, 〈표 Ⅳ-4〉 참고).

<표 Ⅳ-4> 중국의 코로나19 관련 상위 단어 빈도표[115]

순위	단어	N	순위	단어	N
1	전염병 상황(疫情)	959	21	물자(物资)	122
2	중국(中国)	904	22	인류(人类)	120
3	협력(合作)	540	23	대응(应对)	120
4	국가(国家)	345	24	외교부(外交部)	115
5	중국측(中方)	322	25	교류(交流)	115
6	글로벌(全球)	229	26	적극(积极)	115
7	코로나(新冠)	209	27	관계(关系)	114
8	폐렴(肺炎)	187	28	안보(安全)	111
9	보건(卫生)	185	29	공동체(共同体)	108
10	저항반격(抗击)	164	30	정부(政府)	105

115) 〈그림 Ⅳ-1〉에 나타난 단어를 빈도수에 따라 표로 나열한 것임.

순위	단어	N	순위	단어	N
11	미국(美国)	155	31	전개(开展)	104
12	시진핑(习近平)	153	32	대통령(总统)	101
13	발전(发展)	153	33	운명(命运)	98
14	각국(各国)	148	34	경험(经验)	97
15	사회(社会)	145	35	바이러스(病毒)	96
16	조직(组织)	136	36	지역(地区)	94
17	외교(外交)	136	37	추진(推动)	92
18	강화(加强)	129	38	원조(援助)	82
19	양국(两国)	128	39	의료(医疗)	82
20	주석(主席)	126	40	WHO(卫组织)	81

결국 〈그림 Ⅳ-2〉처럼 '중국(中国)'은 코로나19 '전염병 상황(疫情)'에서 관련국과의 '협력(合作)'을 강조하며 의료물품, 의료물자 및 의료 인력 지원, 코로나19 '백신(疫苗)'[116] 원조를 통해 관련국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일부 내용에서는 일대일로(一带一路)와 연계하여 관련국과의 밀접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코로나19 협력 역시 견고히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및 외교와 관련하여 중국은 주변국 및 관련국과의 협력관계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난다. 주변국과의 상호 관계 강화를 통해 전 세계 보건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과 동시에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상호 협력의 당위성을 부각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각국과의 밀접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안전을 보장하고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국의 방역·보건 협력은 전 세계의 국가들과 협력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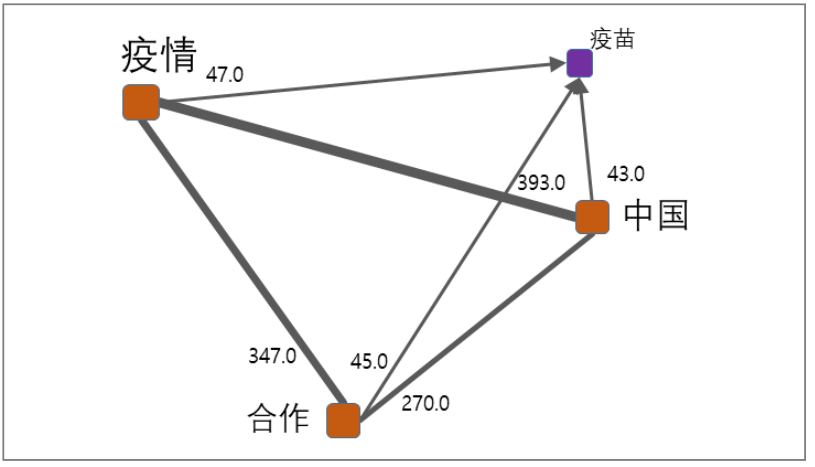
116) '백신(疫苗)'은 코로나19 관련 상위 단어 빈도 순위가 61번째(빈도 59)로 〈표 Ⅳ-4〉에 표시하지 않았지만 비교적 높은 순위에 해당함. 〈그림 Ⅳ-2〉에서도 '백신'은 중요하게 나타남.

자 하는 중국의 공공외교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동방협'과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양국의 공감대와 협력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117] 따라서 동북아 역내 다자협력체 '동방협'을 주도하기 위해 한국은 중국의 상황을 역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對)북한 코로나19 방역 관련 원조의 경우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다른 국가 지원과 비교해 특별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단순 의료물품 지원 국가 중 하나로 그려지거나 이에 대한 북한 측의 감사를 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오히려 중국은 북중 접경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의심환자들에 대한 방역 강화를 강조하며 북한에 대한 경계의 시선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계의 시선은 오히려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면 중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는 하나의 유인이 될 수 있으며, 북한과의 협력 또한 이끄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한중 보건 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117) 장영희, "한중 의료보건 협력의 가능성 및 협력체 발전 방안,"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자료, 2021.12.13.).

<그림 Ⅳ-2> 중국의 코로나19 관련 물적 교류 상호 단어 비교분석[118)]



118) 중국의 코로나19 관련 물적 교류에서 나타난 상호 단어의 분석 결과임. 그림에서 숫자는 단어의 출현 빈도를 의미하고, 화살표 방향은 '중국', '전염병 상황', '협력'이라는 키워드가 모두 '백신'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중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백신을 활용해 협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활성화 방안

1. 한중 보건 협력 개선과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강화

한중 방역·보건 협력에서 최근 양국의 상호 부정적 인식은 장차 양국 협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 중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비롯하여 미세먼지, 환경오염 등과 같은 월경성 생태환경 위험에 대한 우려가 그 기저에 존재한다. 따라서 역으로 감염병, 대기오염, 기후변화, 해양안전 등 초국경적 이슈에 대한 협력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 한국과 중국은 양국 간 논의와 협력을 강화하고 협력 분야를 확장해가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먼저 한중 방역·보건 협력은 '생명공동체'가 지향하는 공존, 공생, 공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글로벌 규범 및 가치에 기초한 협력을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가치 아래 향후 대기오염, 기후변화, 해양안전 등 환경안보 및 인간안보 영역 등으로 범위의 확대가 가능하다.

다음으로 한중 협력은 코로나19 관련 지원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정부 간 교류 활성화와 민간 협력 강화를 바탕으로 하는 상호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 한국과 중국은 그 어떤 국가보다 지방정부 간의 교류가 가장 활발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중 보건 협력을 통한 중국의 '동방협'에 대한 적극적 참여는 '동방협'을 확대 강화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중국은 소위 백신외교를 추진한 경험이 풍부하여 동북아 역내 국가들과의 의료방역 공동 비축 및 전문가 공동 교육 등 보건안보 분야의 협조가 자국 소프트파워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적극적 참여 유도가 가능하다. 중국은 주로 저발전국가를 대상으로 백신외교를 추진하고 동남아에서의 협력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이을 기준으로 동북아에서 공공재로서 자국의 백신과 의료물품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지원에 앞장설 가능성이 크다. 앞서 동남아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은 백신에 대한 공동개발 및 생산에 대한 협력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서 자국의 백신 기술의 공유에 대해 개방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은 공공재로써 백신을 만들기로 한 약속을 지키고, 자국 중심의 관용 정치를 펴고 있다는 의혹에 맞서기 위해서 코백스나 WHO와 협력해 개발도상국에 백신 생산과 유통을 가속화 할 필요성이 있었다.[119] 이러한 점은 동아시아 공동협력을 통한 백신 개발 및 생산 체인을 형성하기 위해 중국이 움직일 가능성이 이미 열려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질적인 보건 협력 프로그램으로 북한의 참여를 견인하는데 북중 우호관계를 활용하고, 비록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중국의 백신 지원이 실패하였지만, 향후 중국이나 러시아의 백신도 북한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 방안 중 하나는 북한과의 국경지역에 '공동 위생 방역 구역'을 설치하고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곳을 통해 안전한 인적, 물적 이동을 보장하고, 방역 보건 정보 교류와 코로나19 방역·의료 물품, 백신 및 치료제 등 방역·의료 물품 공동 비축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120] 나아가 이러한 협력사업을 바탕으로 남북 간, 남북중 간 보건의료협정 체결,[121] '동방협'을 통한 동북아 보건안보공동체 구축이라는 중장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공동 위생 방역 구역은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에서 감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주요 역할을 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는

119) Victor Tay, "China and US Vaccines Diplomacy in South East Asia."

120) 김수연·김지은, "「비상방역법」 제정을 통해 본 북한의 코로나-19 대응과 향후 협력 방안," 『통일과 법률』, 제48호 (2021), p. 73.

121) 중장기적으로 남북 간 지속적 보건의료 협력을 위해 남북보건의료협정을 체결한다. 남북보건의료협정은 남북 간 보건의료정보 교환 체계 및 공동 방역체계 구축, 상호 왕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보장, 상시적 의사소통 체계 구축 등 상호 협력 사안을 명시한다; 이규창·나용우·이상신·이우태·조성은,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인도협력: 코로나19를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20), p. 202.

인도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거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동방협'이 추구해야 하는 발전 방향은 다자주의 협의체의 발전 로드맵 구상과 단계적 발전을 통한 다층적 협력체계로 나아가야 한다. 한중 보건 협력을 통한 양자협력 뿐만 아니라 '동방협' 참여 국가 간의 양자, 삼자, 다자협력 등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점진적으로 제도화의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참여 국가들의 보건안보 측면에서 비교우위 검토와 첨단기술, 법률, 정책, 제도 등 보건안보에 적용하는 공동연구 및 투자 등의 강화, 각국 상황과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개발 협력이 필요하다.

'동방협'의 완성은 향후 각종 비전통 안보 영역에서의 '협력모델'로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다. 우선 보건안보 영역에서 신종 감염병, 비전염성 각종 질환, 식품, 바이오, 고령화 등에서부터 환경, 자원 등 다른 영역으로의 확대 또는 응용을 통한 활용이 가능하고, 이들을 상호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발전 가능성도 크다.

2. 북한의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참여 및 협력[122]

한반도에서 감염병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감염병의 초국경적 특성에 따라 남북 간의 긴밀한 협력뿐만 아니라 주변국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의 의료체계는 제도적으로 주민에 대한 무상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의료전문가와 의료시설뿐만 아니라 약품 공급 등이 원활해야 하나 지속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보건의료제도와 의료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어렵

122) 서상민,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 방안,"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자료, 2021.12.2.), 이철수, "한중 협력을 통한 동북아 보건안보 협력 강화 방안: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자료, 2021.11.30.)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0년 1월 발생한 코로나19는 북한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위기로 간주 되었다. 비록 김정은 집권 이후 옥류아동병원, 대성산종합병원, 류경구강병원 등 대형병원을 설립하여 의료체계를 개선하였지만,[123] 코로나19의 험난한 파고를 막아낼 수 있을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북한은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이 가시화되자 '비상설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를 통해 '위생방역체계'를 즉각 '국가비상방역체제'로 전환하고, '국경봉쇄'를 실시하는 등 전방위적 방역사업을 추진하였다.[124] 먼저 비상 방역등급 조정, 중앙인민보건지도회의 방역기구로의 전환 등 의료방역체계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제도적인 부분을 보완하는 한편, 인적·물적 교류를 전면 중단하였다.[125] 귀국자에 대한 30일 격리, 방역물품 생산 독려, 방역 관련 선전 등을 대폭 강화하였다. 특히 감염 전 예방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데, '면역 활성제', '면역 최적화제' 등에 대한 사용을 권하였다.[126] 김정은은 2020년 10월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연설에서 "한 명의 악성비루스(코로나19) 피해자도 없이 모두가 건강해...우리 인민 모두가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어...방역 안정 형세를 유지"했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127] 에드윈 살바

123) 김병기, "북한의 보건의료 분야 양자조약 등에 비추어 본 남북한 보건의료협정 체결 방안," 『법학논문집』, 제42집 제3호 (2018), p. 176.

124) 오승준·하승희, "코로나19에 대한 북한의 대응: 『로동신문』 보도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24권 2호 (2020), p. 3.

125) "국경과 해상을 비롯한 신형코로나비루스가 류입될 수 있는 모든 통로와 공간들을 철저히 차단하고 엄격히 관리하는 것은 비상방역사업에서 핵심중의 핵심이다"; 김성민, "핵심중의 핵심사항," 『로동신문』, 2020.8.2.

126) "북한 국가품질감독위 "국경 주요 지점서 화물검역 강화"," 『연합뉴스』, 2020.1.31., 〈https://www.yna.co.kr/view/AKR20200131017400504〉 (검색일: 2021.11.30.); "北 매체들, '코로나-19' 발병 계기 자체 개발 약품 연일 소개..."효과 여부는 확인 안돼"," 『SPN 서울평양뉴스』, 2020.2.15., 〈http://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098〉 (검색일: 2021.11.30.).

127) "[전문]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한 김정은 연설," 『연합뉴스』, 2020.

도르(Edwin Salbador) WHO 평양사무소장은 2020년 9월 30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이메일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 중 확진자는 없으며, 북한 내 코로나 확진자가 없음을 확인하였다.[128]

한편 〈그림 V-1〉과 같이 북한의 코로나19 관련 보도에 대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129]을 통해 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결중심성은 '북한'과 '코로나19'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방역', '중국', '지원', '미국', '백신', '김정은', '평양', '봉쇄', '협력', '경제', '한국'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에서 중심이 되는 핵심어는 앞에서부터 나열된 순서대로 높은 연결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북한의 경우는 한국의 직접적인 지원 또는 중국과 같은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지원 등이 강조되면서 '협력'이라는 단어의 연결중심성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이다. 북한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경 봉쇄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은 주변 국가들과 함께 북한에 대한 지원 및 방역·보건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협력'이라는 단어의 연결중심성을 살펴보면, 북한은 가장 순위가 낮은 일본이나 미국과 달리 11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한국이 북한과의 협력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협력의 필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원'이라는 단어가 5번째 순위를 차지하며 북한에 대한 코백스의 백신 지원과 같이 북한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앞서 Ⅲ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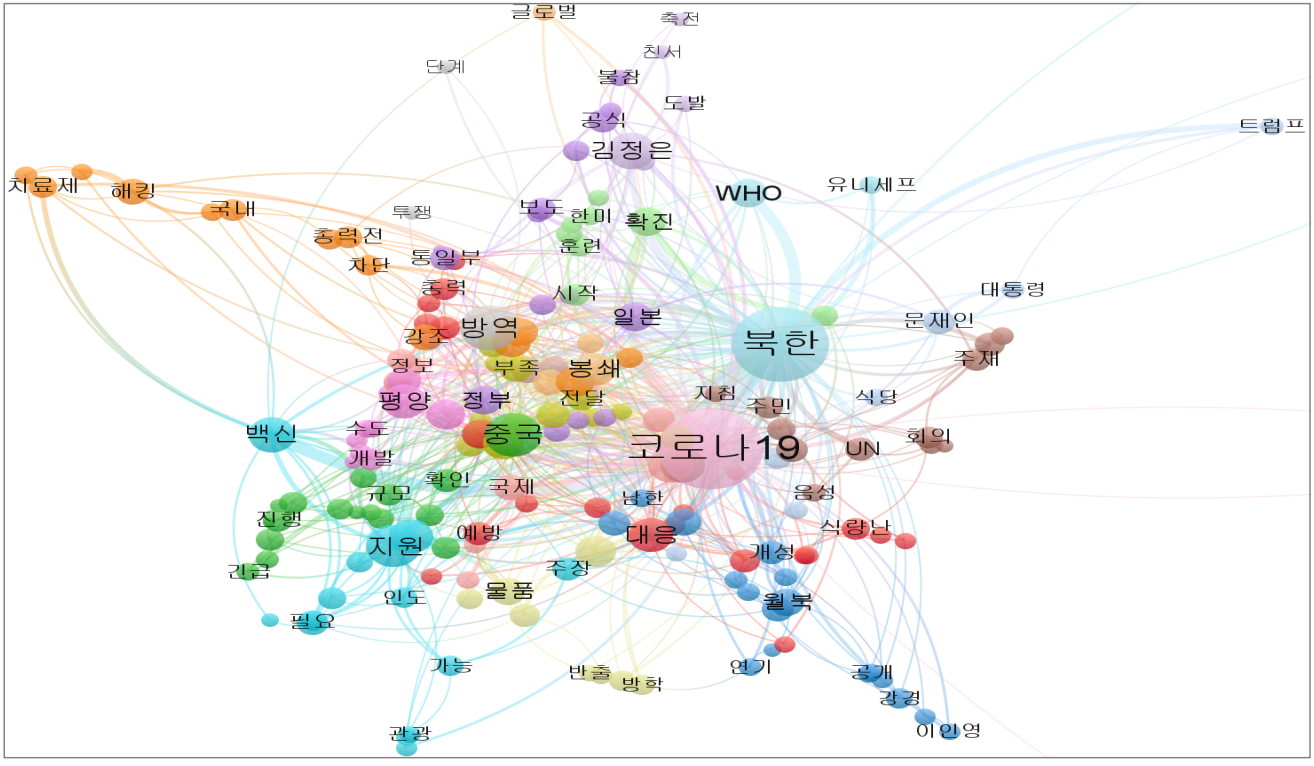
10.10.,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0053900504〉 (검색일: 2021.11.30.).

128) "WHO "북, 3374명 코로나 검사…확진자 없어"," 『RFA 자유아시아방송』, 2020.9.30., 〈https://www.rfa.org/korean/in_focus/coronavirusnk-09302020142611.html〉 (검색일: 2021.11.30.).

129) 북한과 관련된 분석 대상 뉴스는 전체 16,618건 중에서 1,000건에 해당한다.

에서는 301번째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미국에서 165번째로 출현해 매우 낮은 연결중심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61번째, 러시아는 43번째이며, 몽골에서는 5번째 순서로 나타나면서 한국의 몽골과의 협력 사항이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Ⅴ-1> 북한의 코로나19 관련 주요 키워드 네트워크



남북한 간 보건 협력 상황을 보면 문재인 정부는 2018년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한 간 보건 교류협력에 합의하였고, 이후 '남북보건의료분과회담'에서 감염병 관련 협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김정은 정권은 병원 건설, 의약품개발 등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도적으로 의료체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북한이 남한에 코로나19와 관련한 협력을 제안한 적은 없었다.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합의문 제2조 제4항에서는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고,[130] 이어 2018년 11월 7일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개최된 '보건의료 분과회담'에서는 첫째, 전염병 정보교환 및 대응체계 구축문제 협의, 둘째, 전염병 진단 및 예방치료 협력, 셋째, 포괄적 중장기적 방역 및 보건의료 협력사업 협의 추진, 넷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정례적 협의 등 전염병과 의료 협력을 위한 공동 대응체계 마련에 합의[131]함으로써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제도적 차원에서의 남북협력체계는 갖춰져 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한 간 인도적 차원에서의 남북 의료 협력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이른바 '한반도 생명공동체'나 '한반도 건강공동체' 등의 담론을 통해 "남북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모두 존엄하며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은 남북 주민의 건강한 공동체적 삶을 보장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132] 또한 의료분야에서의 남북협력이 단순히

130) 통일부, "남북보건의료분과회담 공동보도문," 〈https://www.unikorea.go.kr/unikorea/news/live/?boardId=bbs_0000000000000003&mode=view&cntId=54657&category=&pageIdx=〉 (검색일: 2021.10.30.).

131) "[전문] 남북보건의료분과회담 공동보도문," 『연합뉴스』, 2018.11.7., 〈https://www.yna.co.kr/view/AKR20181107145800017〉 (검색일: 2021.11.30.).

132) 이승우, "남북 보건의료 협력 강화.....9월 평양공동선언," 『의협신문』, 2018.09.19.,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401&sc_word=%EC%A0%84%EC%97%BC&sc_word2=〉 (검색일: 2021.12.5.).

소위 '북한 퍼주기식'의 시혜적인 차원이 아닌 통일비용의 감소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통일을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코로나19와 관련된 대북지원에 대한 이견들이 표출되었는데, 2020년 3월 11일 로버트 데스트로(Robert Destro)로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는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미국 정부가(이번 코로나19 사태 관련) 북측과 이란, 중국, 그리고 모두에게 손을 내민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하며, 이를 통해 미국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과 노력을 할 수 있고 또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을 표명한 바 있다.[133] 반면, 워싱턴 민간단체 민주주의 수호재단은 상·하의원에 발의된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과 관련해 북측이 인도적 지원 금융 혜택을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법안에 지원단체들의 활동 내역을 재무부에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134]

그동안 북한은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 및 협력을 철저히 거부하였다.[135] 한편 한국의 방역물품 지원은 2020년 3월 31일 처음으로 이루어졌는데, 한국 민간단체가 지원한 손 소독제 물품이 중국을 통해 북한에 들어갔고 이어 방호복 2억 원어치(2만 벌)도 북한에 전달되었다.[136]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몽골, 중국, 북한을 포함하는 감염병 통제 및 보건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직접적인 대북의료지원이 아닌 다자적 차원에서의 북한지원을 모색하고자 했다. 그래서 유엔총회

133) "코로나19 상황 관련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미국의 입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웹진』, 2020.3.12., 〈https://kidmac.or.kr/res/webzine/2020_06/sub06.html〉 (검색일: 2021.12.5.).

134) 위의 자료.

135) 문인철 외, 『서울-평양 보건의료 지원·협력 방안』 (서울: 서울연구원), p. 2.

136) 황인찬·박효목, "남북 코로나 방역협력 첫 성사," 『동아일보』, 2020.5.15.,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515/101053318/1〉 (검색일, 2021.10.30.).

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한 집단 보호가 북한이 국제사회와 교류함으로써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하면서, “전염병 통제와 공중 보건을 위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출범을 제안한 바 있다.[137] 그리고 최근 오스트리아에서 “북한이 동의한다면 백신 공급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 역할을 할 경우 북한도 당연히 협력대상이 된다”[138]라고 하면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직접 공급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사실 코로나19에 맞서는 북한의 전략은 외부적으로 엄격하게 국경을 봉쇄하고, 내부적으로는 제한적 방역을 실시하는 것이며, 만약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개입하고 관리한다. 공식적으로 북한에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의약품의 비공식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북한은 국제사회의 세계 백신 공동분배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에 백신 지원을 요청했고, 코백스는 백신 지원을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았다.[139] 전 세계에서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국가는 북한과 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 두 국가가 유일하다. 코백스는 아스트라제네카 199만 2천 회분을 지난 2021년 3월 북한에 배정하고 “5월까지 170만 회분을 1차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북한의 몇 가지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백신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라

137) 김현주, “북한이 동의한다면 코로나19 백신 공급 협력 적극 추진하겠다,” 『세계일보』, 2021.6.15. 〈http://m.segye.com/view/20210614515554〉 (검색일: 2021.12.2.).

138) 이완, “문 대통령 “북한 동의하면 백신 공급 추진”…남북대화 재개될까,” 『한겨레』, 2021.6.14.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99358〉 (검색일: 2021.12.2.).

139) 그 원인으로 첫째, 국제사회의 백신 공급문제(우선 국가 배분 순위), 둘째, 최근 유엔의 자발적 국가검토보고서와 배치되는 문제, 셋째, 내부의 강력한 통제에 의한 효과적인 예방에 따라 불필요하다는 판단, 넷째, 강력한 봉쇄 정책으로 인해 소극적인 접종에도 시간상 통제가 가능하다는 자체 판단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설명한다; 이철수, “한중 협력을 통한 동북아 보건안보 협력 강화 방안: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자문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고 밝혔다.[140] 북한은 추가로 배정된 중국산 시노백 백신 297만여 회분에 대해서도 다른 국가에 재배정해도 된다는 뜻을 밝혀 공급받지 못했다. 그 이후 11월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10만 800회분, 11월 말에는 추가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73만 4천 회분이 배정되었으나, 앞서 배정된 백신을 포함하여 백신 지원 관련 절차 등이 북한으로부터 이행되지 않아 아직 운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표 Ⅴ-1〉 참고).[141]

<표 Ⅴ-1> 코백스의 북한 배정 백신 현황

일시	종류	수량(회분)	비고
2021.03.	아스트라제네카(AZ)	199만 2천	공급 안됨
2021.09.	시노백	297만	타국 재배정 요청
2021.11.	아스트라제네카(AZ)	10만 800	공급 안됨
2021.11.	아스트라제네카(AZ)	473만 4천	공급 안됨

출처: "북한: 코백스, 북한에 AZ백신 473만 회분 추가 배정…이번엔 받을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앞서 Ⅳ장에서 논한 바와 같이 북한의 '동방협' 참여나 국제협력과 관련한 중국의 역할은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의 언론에서 다루는 북한 관련 기사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중국과 북한 간 코로나19 방역 및 외교 관련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중국 언론보도에 나타난 관련 기사를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142] 북한과의 코로나 방역외교와 관련해서는 자국을 나타내는 단어, '북한(朝鲜)', '북측(朝方)'과 코로나를 지칭하는 단어로 '전염병 상황(疫情)', '코로나(新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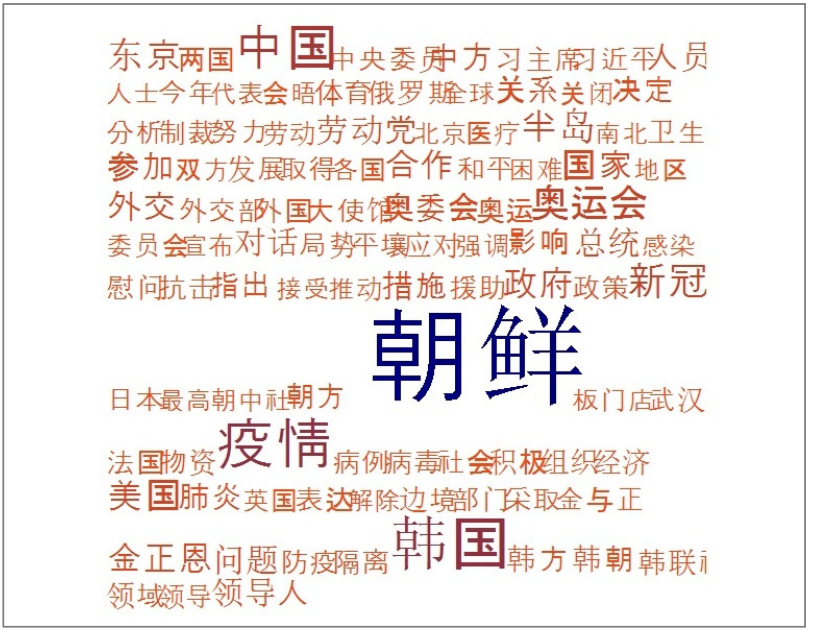
140) "G20 정상들 "내년 중반까지 전 세계 70% 백신 접종"…코백스 "대북 백신 지원 준비돼 있어"," 『VOA Korea』, 2021.11.1., 〈https://www.voakorea.com/a/6295806.html〉 (검색일: 2021.12.1.).

141) 코백스에서 북한에 이미 배정한 약 209만 회분을 포함하면 북한 전체 인구의 13.2%가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이다; "북한: 코백스, 북한에 AZ백신 473만회분 추가 배정…이번엔 받을까?" 『BBC Korean』, 2021.12.1.

142) 단일 단어 비교분석에 쓰인 중국과 북한 간 코로나19 방역 및 외교 관련 단어는 25,273개임; 〈그림 Ⅴ-2〉, 〈표 Ⅴ-2〉의 분석방법에 대한 내용은 Ⅰ장 2절의 (2) 중국의 언론보도 빅데이터 분석 참고.

‘폐렴(肺炎)’이라는 단어의 순서로 많이 등장하고 있다. 코로나19의 관련국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중국(中国)’은 물론 ‘한국(韩国)’, ‘미국(美国)’, ‘일본(日本)’이 차례로 등장하고 있어 동북아 지역의 핵심 국가임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코로나19 관련 한국과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한반도(半岛)’, ‘남북(韩朝)’, ‘한국측(韩方)’, ‘연합뉴스(韩联社)’ 등의 단어들이 바로 그것이다. 코로나19와 외교 관련 단어들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외교(外交)’, ‘협력(合作)’, ‘관계(关系)’ 등의 단어들이 대표적이다. 앞서 한국 언론 분석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협력’이라는 단어가 12번째로 많이 등장하고 있어, 중국은 북한에 대해 외교적으로 코로나19 방역·보건 협력을 비중 있게 얘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Ⅴ-2> 코로나19 관련 중국과 북한의 관계 단일 단어 비교분석



사실 중국의 대(對)북한 코로나19 방역 지원은 다른 국가와 비교하

여 큰 차별성을 확인할 수 없다. 북한의 폐쇄성을 강조하며, 오히려 이러한 문제가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을 키워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중국은 대(對)북한 코로나19 방역외교보다는 이와 연계한 한반도 평화 정착, 북한의 한국 및 미국과의 관계를 보다 중시하며, 북한이 풀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는 형태를 보인다. 무엇보다 중국의 방역과 관련해서 실질적 움직임보다는 다소 피상적 조치들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단순히 방역물품 및 의료지원에 그치고 있다. 또한 주변국과의 협력에 있어서 관련국과 방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어떻게,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나타나 있지 않다. 오히려 주변국과의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는 연대의식의 필요성처럼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으나 자국 중심의 대외선전 내용이 많아 실질적으로 동아시아 국가와의 어떠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인지와 같은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 결국 중국이 북한과의 직접적인 보건 협력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것은 한중 보건 협력을 통한 북한과의 협력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Ⅴ-2> 코로나19 관련 중국과 북한의 관계 상위 단어 빈도표[143]

순위	단어	N	순위	단어	N
1	북한(朝鲜)	308	21	참여(参加)	31
2	전염병상황(疫情)	128	22	관계(关系)	27
3	한국(韩国)	127	23	올림픽위원회(奥委会)	26
4	중국(中国)	97	24	폐렴(肺炎)	25
5	코로나(新冠)	58	25	지도자(领导人)	25
6	올림픽(奥运会)	52	26	대화(对话)	25
7	한반도(半岛)	49	27	지적(指出)	22

143) 〈그림 Ⅴ-2〉에 나타난 단어를 빈도수에 따라 표로 나열한 것임.

순위	단어	N	순위	단어	N
8	정부(政府)	45	28	북한측(朝方)	22
9	미국(美国)	44	29	결정(决定)	22
10	동경(东京)	42	30	남북(韩朝)	19
11	외교(外交)	36	31	한국측(韩方)	19
12	협력(合作)	36	32	영향(影响)	19
13	국가(国家)	36	33	일본(日本)	18
14	김정은(金正恩)	35	34	체육(体育)	18
15	중국측(中方)	33	35	정책(政策)	18
16	대통령(总统)	33	36	격리(隔离)	18
17	노동당(劳动党)	33	37	노력(努力)	18
18	인원(人员)	32	38	평양(平壤)	18
19	조치(措施)	32	39	연합뉴스(韩联社)	18
20	문제(问题)	32	40	시주석(习主席)	18

북한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국경 봉쇄 정책을 지속하는 가운데 대북 경제제재와 경제침체, 남북 교류 중단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많아 외부지원이 절실하다. 북한은 이와 같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타개책을 모색하고 실천해야 할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이 '동방협'에 참여하게 되면, 그 이후 북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동방협' 참여 국가는 북한의 '동방협' 참여가 동북아 역내 코로나19 등 초국경적 보건안보 사안에 대한 공동대응과 협력 강화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대부분 공유한다.[144]

북한의 '동방협' 참여 견인 및 방역·보건 협력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첫째,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남북한의 현 상황에서 보건의료 부문의 실천에 대해 더욱 깊은 관찰과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144) 외교부,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3차 화상회의 개최," 보도자료 21-363.

사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 실천 사례를 통해 먼저 남북 간 대화의 채널을 확보하고, 시범적인 사업을 시도한 후, 북한의 '동방협'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 교류의 경우 인권적 차원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분야는 대북제재 면제 대상이다. 장애인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연령층이 해당되고, 그 어떤 대상보다도 북한과 국제사회가 지원과 교류를 선호하고 우선시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실천적 차원에서 전략적 우선 대상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현 상황에서 가장 실현 가능한 대북 지원사업은 북한의 장애인 대상 코로나19 지원사업을 우선 고려해볼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이미 작년 초부터 장애인에 대한 비공식적인 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며, 남북한이 2018년 12월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장애인기구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탑다운(top-down) 방식 중 한 가지로 중국과 러시아를 활용하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북한과 모두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 국경지역에 '공동 위생 방역 구역'을 설치하고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다. 이것은 북한이 일정 부문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부문이고, 북한 입장에서 굳이 거부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 오히려 북한에게 매우 필요하고 뚜렷한 실익이 발생하는 부문이다. 그밖에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때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셋째, 또 하나의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북한과 직접 대화를 통해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다. 남북한은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제2조 제4항). 사실 보건의료 분야의 남북한 공동선언은 기존에도 이미 존재하였는데, 이와 같은 공동선언을 근거로 남한의 대북 코로나

19 지원사업을 시도한 후, '동방협'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남북한의 관계복원과 교류협력의 지속성이 담보되어야만 가능하고, 대북 지원사업은 인도적 차원의 개발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 북한 의료기관에 투입될 각종 의료장비나 의약품은 물론이고 병원 건설에 필요한 각종 자재와 장비의 반입에 대한 제재를 신속히 면제해주어야 한다.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대북 제재 예외나 면제 사항이지만 수월하지 않게 추진된다.[145] 북한에 단순한 인도 지원만으로 '동방협'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지만, 병원 건설이나 의료장비 지원은 김정은 '인민대중제일주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북한의 관심을 유도하기에 가능한 분야다.

넷째, 제3의 우회적 방식으로 북한이 선호하고 우호적인 국제기구를 통해 코로나19 지원사업을 추진한 이후 국제기구가 우회적으로 북한의 '동방협'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현재의 남북한 상황에서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나 국제기구가 이에 협조하고 적극적인 북한의 가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사전에 담보되어야 가능하다.

여섯째, 북한의 참여를 유도할 때 필요한 접근법으로 '보건 협력'이라는 의제에 집중하는 방식과 다르게 보건안보 이슈가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독립적인' 어젠다로 작용하기보다는, 핵협상, 제재완화 협상, 남북미중 회담 등의 다른 이슈와 연동해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면서 정책적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146]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새로운 변이바이러스가 계

145) 문인철, "비전통 안보 분야 협력 사례 및 시사점,"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자료, 2021.12.3.).

146)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OK-led "UN Group of Friends of Solidarity for Global Health Security" Discusses Delivering Joint Remarks at UN Security Council and Activity Plan for 2020," 2020.6.26., 〈https://www.mofa.go.kr/eng/brd/m_5676/view.do?seq=321143〉 (Accessed December 3, 2021).

속 출현하는 상황에서 '동방협'과 같은 지역 다자협력체는 비정치적이고 매우 필요한 분야로 국제협력 차원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지만, 합리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오히려 심각한 위기를 야기하고 동북아 평화안정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미중 관계 악화로 정치적 문제가 비정치적 문제에 대한 제약요인, 즉 비전통 안보 분야에까지 그 영향을 미쳐 양자·다자협력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바로 한중 협력의 제약요인으로 작동했던 것과 같다. 만약 '동방협'이 정치화된다면 이로 인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마저도 어렵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동방협' 참여 방식에 대한 전략 모색과 '동방협'에 참여하고 있는 개별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3.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활성화

국경을 넘어 등장한 코로나19라는 새로운 감염병의 전 세계적 유행과 오랜 지속은 전 세계가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도록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코로나19가 불러온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을 하기도 한다.[147]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국경적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동일 지역 국가들의 협력은 감염병과 같은 비전통 안보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요소가 되었다. 이와 같은 지역 다자간 협력체로 '동방협'의 활성화가 강조되는 것이다.

'동방협'을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있다고 해도 '동방협'은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대응과 조치, 예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147) 김영수, "범유행병과 국제협력: 에이즈의 사례를 통해서 본 코비드-19의 함의와 국제협력의 전망," 『평화연구』, 제28권 2호 (2020), p. 181.

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발전 과정을 거쳐 역내 주요 협력체로, 하나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동방협'의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 및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참여국의 보건의료 협력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중국의 백신외교가 제한적이지만 일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경제적·외교적 이해관계를 파악하여 참여 가능한 국가를 선정하고, 이러한 국가들과 개발과 생산과정을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동방협' 역시 명분과 담론보다는 각 국가의 경제적·외교적 이익을 존중하고 그들의 이익 실현을 위해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운영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장기적으로 '동방협'의 안정적 관리와 추진을 위해 '동방협 사무국'을 설치하고 상설기구화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을 해야 한다.[148] 현재 '동방협'은 외교부에서 관리하고 유관기관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의 협조를 얻어 추진하고 있으나, 사무국이 설치되면 좀 더 일원화되고 효율적으로 통일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 그리고 상설화된 기구는 감염병 이슈가 정치화되는 것을 오히려 방지하면서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동방협 사무국'의 설치와 운영과 함께 '동방협'의 실질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추진을 위해서는 한국이 주도하고 다른 국가들이 함께 출자하는 '동방협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 몽골과 추진했던 '동방협' 사업으로 의료물품 공동비축제도 중요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일차적으로 공동기금을 마련하여 방역·보건 물품 및 의료장비 등의 구입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면 기금을 중심으로 한 실제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148) 사무국 설치와 관련해서 2021년 11월 19일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관련 민관 세미나'에서 외교부 관계자가 '동방협' 추진 과제로 사무국 준비를 밝힌 바 있다.

이뤄질 수 있다. 그리고 기금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관리, 운용하는 상설기구인 '동방협 사무국'의 안정적 유지를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넷째, 최근 미국과 중국 간 백신외교를 통한 영향력 확대 및 우방국 관리와 같은 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양대 강대국 간의 영향력 확대 경쟁이 그대로 '동방협' 내에 반영될 경우 어떠한 협력도 쉽지 않다. 따라서 양국을 제외한 한국을 중심으로 일본, 러시아, 몽골 그리고 북한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그 힘으로 양대 강대국의 협력을 끌어내는 역발상이 필요하다.

다섯째, '동방협'은 다자주의 협력체이지만 작게는 양자협력에서부터 국제기구 및 지역협력기구와의 연계, 기후, 환경 등 기타 비전통 안보 영역의 다자협력체와의 연계 등[149] 참여국 간 협력 강화 및 다른 국가나 지역, 기구, 협력체 등과의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복합적 다자협력체로의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 협의체로 아세안+3나 동아시아정상회의 등 역내 기존 협의체와 조율·연계를 통해 상호 시너지를 창출할 필요성이 있다.[150]

여섯째, 결국 '동방협'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이상과 같은 방안들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먼저 '동방협'의 운영세칙을 채택하고, '동방협' 참석자의 지위에 있어서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된 것처럼 지위를 격상하고, 개별 국내 관련법을 마련하여 상설기구로의 발전을 위한 사무국 설치 및 '동방협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149) 지난 2021년 11월 민관 합동 세미나에서도 민간 참석자들은 '동방협'이 보건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나아가 역내 비전통 다자안보 협력체로 발전해 나갈 잠재력이 있음을 평가하고, 협력체의 발전을 위해, △양자 보건 협력과의 연계, △지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보건 제도·정책 관련 공동연구 등의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외교부,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합동 세미나 개최," 보도자료 21-942.

150) '동방협' 3차 화상회의에서도 역내 기존 협의체와의 조율·연계를 통해 상호 시너지를 창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외교부,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3차 화상회의 개최," 보도자료 21-363.

마지막으로 앞서 2절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의 참여는 '동방협'의 중요한 목표이면서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북한의 참여를 위해 한국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념과 체제의 문제를 떠나 인도적 지원과 인간안보 측면에서의 대북지원 필요성을 유엔을 비롯한 관련 국제기구에 홍보하고 설득하여 국제적 지지를 받아내야 한다. 그리고 '동방협' 내 참여 국가의 보건의료 관련 기구가 북한과의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할 필요가 있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여론의 우호적 분위기 조성이 필수적이다. 한국이 '동방협'을 운영하고 선도하는 책임 국가로서 동북아 보건의료 협력과 동북아 지역의 인간안보에 기여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지지를 얻어야 한다.

<그림 Ⅴ-3>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 활성화

출처: 저자 작성.

4. 소결

지난 코로나19의 유행 초기, WHO의 뒤늦은 팬데믹 선언과 리더십의 부재, 초기 발생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불투명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각 국가 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국가는 자국 중심의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대 강대국 간의 정치적 논쟁 속에서 코로나19는 새로운 변이바

이러스를 만들어내며 전 세계를 마비시켰다.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한 보건 협력 거버넌스는 완벽하게 부재한 것이다. 보건의료의 관점에서 코로나19 문제는 개별 인구의 건강과 보건의료의 문제로 국한해 적절한 방역대책과 보건의료서비스로 해결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일정 기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속될 경우에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의 문제, 개별 국가의 범주를 넘어서 국제사회 공동의 문제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감염병의 문제가 한 국가의 보건안보에 국한된 문제를 넘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적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지역안보적 차원에서 감염병의 초국경적 특성상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의 협력체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한국은 성공적 방역모델로서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으며 감염병 대응과 관련하여 많은 국가와 한국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이 제안한 '동방협'은 이러한 노력을 보여주는 지역 다자협력체로서 신종 감염병에 대한 공동의 도전과제 대응 과정에서 협력 관행을 축적해 역내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 양자·다자협력 제도화의 진전을 도모해야 한다. '동방협'은 감염병 대응을 시작으로 신흥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 능동적·선제적 외교 추진 사례로 활용이 가능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 미중 경쟁의 심화 구도 속에서 신종 감염병, 기후변화 등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 '동방협'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를 통해 기본적인 양자협력 및 한국 주도의 소그룹 다자협력을 통해 역내 지정학적 갈등 요인을 완화하고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동방협'을 통해 북한의 참여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의 참여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해 역내 국가들과 대화·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중 보건 협력 강화는 '동방협' 활성화의 중요한 요인

이 된다. 한중 협력을 통한 동북아 역내 초국경적 공동대응 역량 강화 및 실질적 성과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양국 간 비전통 안보 협력을 위한 새로운 모델 제시와 협력 발전을 위한 대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 한중 협력에서 북한을 포함한 역내 다자협력 사례로 확대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유리한 환경 및 동북아 평화·안정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동방협'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주도하는 한국의 노력과 역량이 더욱 중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보건안보 분야에서 K-방역이라는 상징과 구호를 넘어 실질적이고 완성된 방역모델로 방역·보건을 선도하는 트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만의 고유한 역량 강화가 더욱 절실하며 국가적 차원에서의 적극적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9월 제7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평화가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다시 평화를 굳건하게 하는, '평화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얘기하며, "'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유럽안보협력기구'가 유럽의 평화와 번영에 상호 긍정적 영향을 끼친 좋은 본보기"임을 강조했듯이,[151] 이제는 비전통 안보 영역에서 '동방협'이 이러한 선순환의 중심에서 보건 협력뿐만 아니라 경제협력, 기후변화 대응, 환경오염과 같은 전 지구적 난제를 해결하고 "인류의 평화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향한 포용성과 다자주의에 기반한 국제협력의 플랫폼으로써 대표적인 사례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151) "제7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외교부』. 2019.9.24., 〈https://www.mofa.go.kr/www/brd/m_20053/view.do?seq=368130〉 (검색일: 2021.12.5.).

참고문헌

1. 단행본

문인철 외.『서울-평양 보건의료 지원·협력 방안』. 서울: 서울연구원, 2021.
이규창·나용우·이상신·이우태·조성은.『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인도 협력: 코로나19를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20.

2. 논문

김병기. "북한의 보건의료 분야 양자조약 등에 비추어 본 남북한 보건의료협정 체결 방안."『법학논문집』. 제42집 제3호, 2018.
김수연, 김지은. "「비상방역법」 제정을 통해 본 북한의 코로나-19 대응과 향후 협력 방안."『통일과 법률』. 제48호, 2021.
김영수. "범유행병과 국제협력: 에이즈의 사례를 통해서 본 코비드-19의 함의와 국제협력의 전망,"『평화연구』. 제28권 제2호, 2020.
오승준, 하승희. "코로나19에 대한 북한의 대응:『로동신문』 보도를 중심으로."『북한연구학회보』. 제24권 제2호, 2020.
조한승. "코로나19와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그리고 미국."『민족연구』. 76호, 2020.
황태연.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대(對)중국 지방정부 국제교류 연구: 현황, 특징 그리고 국제정치적 함의."『현대중국연구』. 제19권 제3호, 2017.

3. 기타자료

가. 신문

『경향신문』.
『동아일보』.
『동아일보』.
『로동신문』.
『세계일보』.
『아주경제』.

『연합뉴스』.
『의협신문』.
『중앙일보』.
『하이몽골리아뉴스』.
『한겨레』.
『한국일보』.
『SPN 서울평양뉴스』.

New York Times.
South China Morning Post.

『观察者』.
『北京日报』.
『新华通讯』.
『人民日报』.

『РИА Новости』.
『Монцамэ』.

나. 웹사이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main.do〉.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https://www.gaok.or.kr/gaok/main/main.do〉.
대한적십자사 〈http://redcross.or.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외교부 〈http://www.mofa.go.kr〉.
외교안보연구소 〈http://www.ifans.co.kr〉.
주몽골 대한민국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
질병관리청 〈http://www.kdca.go.kr〉.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BBC 〈http://www.bbc.com〉.
Chatham House 〈http://www.chathamhouse.org〉.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http://www.cfr.org〉.
CSIS 〈http://www.csis.org〉.
Foreign Affairs 〈http://www.foreignaffairs.com〉.
Foreign Policy 〈http://www.foreignpolicy.com〉.
KFF 〈http://www.kff.org〉.
Nature 〈https://www.nature.com〉.
RFA 자유아시아방송 〈https://www.rfa.org/korean〉.
RHTLaw Asia 〈http://www.rhtlawasia.com〉.
South China Morning Post 〈https://www.scmp.com〉.
SNU Responds to COVID-19 〈http://www.snu.ac.kr〉.
Statista 〈http://http://www.statista.com〉.
VOA Korea 〈https://www.voakorea.com〉.
World Health Organization 〈https://www.who.int/〉.

外務省 〈http://www.mofa.go.jp〉.

新华网 〈http://www.xinhuanet.com〉.
人民网 〈http://www.people.cn〉.
中国新闻网 〈https://www.chinanews.com.cn〉.
中国红十字会 〈http://www.redcross.org.cn〉.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http://www.fmprc.gov.cn〉.
中华人民共和国驻新西兰大使馆. 〈http://www.chinaembassy.org.nz〉.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http://www.gov.cn〉.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комитет Содружества Независимых Государств 〈https://cis.minsk.by〉.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s://www.mid.ru〉.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http://kremlin.ru〉.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 〈https://www.rospotrebnadzor.ru〉.

Эрүүл Мэндийн Яам 〈https://covid19.mohs.mn./〉.

다. 보고서·보도자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김부겸 국무총리, 「COVAX AMC 정상회의」 참석.” 보도자료, 2021.6.2.
산업통상자원부. “(참고자료)‘K-방역모델’을 세계의 표준으로 만들 길잡이 나왔다.” 2020.6.11.
외교부.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3차 화상회의 개최.” 보도자료 21-363, 2021.5.27.
_____.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4차 화상회의 개최.” 보도자료 21-630, 2021.9.1.
_____.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2차 화상회의 개최.” 보도자료 21-207, 2021.3.30.
_____.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범정부 TF 발족.” 보도자료 21-151, 2021.3.11.
_____.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출범 민관합동[트랙1.5] 화상회의 개최,” 보도자료 20-900, 2020.12.30.
_____.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민관 합동 세미나 개최.” 보도자료 21-942, 2021.11.19.
_____. “정부, 코로나19 백신 개도국 지원에 1,000만불 공약.” 보도자료 20-648, 2020.10.28.
_____. “코로나19 공동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화상 토론회(웨비나) 개최.” 보도자료 21-807, 2021.10.19.
_____.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이하 협력체)」 협력사업 시범 가동.” 보도자료 21-588, 2021.8.17.
통일부. “남북보건의료분과회담 공동보도문.” 2018.11.7.

라. 자문 인터뷰 자료

김태경. “러시아의 방역·보건 특징과 동북아 협력 방안.”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자료, 2021.11.1.
김태종. “한국·중국의 코로나19 보건 협력 관련 뉴스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자료, 2021.11.5.
문인철. “비전통안보 분야 협력 사례 및 시사점.”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자료, 2021.12.3.

박인휘. “미국의 비전통안보 전략과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강화 방안.”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자료, 2021.11.15.
박정후. “몽골의 방역·보건 특징과 동북아 협력 방안.”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자료, 2021.11.1.
서상민.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 방안.”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자료, 2021.12.2.
_____. “한중 의료보건 협력의 가능성 및 협력체 발전 방안. ”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자료, 2021.12.13.
안주영. “일본의 방역·보건 특징과 동북아 협력 방안.”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자료, 2021.11.1.
이기현. “중국의 방역·보건 특징과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강화 방안.”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자료, 2021.11.16.
이철수.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 강화 방안.”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자료, 2021.11.30.
장영희. “한중 의료보건 협력의 가능성 및 협력체 발전 방안.”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자료, 2021.12.13.
전병율. “동아시아 보건 협력의 성과와 과제.”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자료, 2021.11.12.
주민욱. “한중 코로나19 방역·보건 협력 관련 뉴스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자료, 2021.11.5.

마. 선언문

East Asia Summit Leaders’ Statement of 2020, 2020.11.14.

연구보고서

2019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9-01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전략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망: 미국의 적대국 관계정상화 사례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이기태 외 8,000원
2019-02 남북관계 2023: 도전요인과 대북정책 추진방향 김갑식 외 17,500원
2019-03 한반도 평화협정의 법적 쟁점과 과제 도경옥, 안준형 8,500원
2019-04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이재영, 김주리 8,000원
2019-05 화해협력 이론과 사례 그리고 한반도 서보혁 외 12,000원
2019-0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중협력방안 이재영 외 11,500원
2019-07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과 젠더정치 조정아 외 11,000원
2019-08 북한 변화의 변수와 경로: '핵문제'와 '개혁·개방'의 조합을 중심으로 박영자 외 11,000원
2019-09 남북연합 연구: 이론적 논의와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이무철 외 15,000원
2019-10 뉴노멀시대 미중관계 변화와 한국의 대북·통일전략 신종호 외 18,000원
2019-11 남북한 인도협력 방안과 과제: 인도·개발·평화의 트리플 넥서스 홍석훈 외 9,000원
2019-12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류거버넌스 구축방안: 체육교류를 중심으로 이우태 외 9,000원
2019-13 분권형 대북정책 추진 전략과 실천과제: 대북교류협력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나용우 외 10,000원
2019-14 북한 외교정책: 정책패턴과 북핵외교 사례분석 김진하 외 10,000원
2019-15 김정은 정권 핵심집단 구성과 권력 동학 오경섭 외 9,500원
2019-16 북한이탈주민 가치적응 실태연구: 지역사회통합 중심으로 김수경 외 7,500원
2019-17 변화하는 통일환경에 따른 대북·통일정책 개선과제: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중심으로 조한범 외 14,500원
2019-18 남북교류협력 재개 과정에서의 신변안전 보호에 관한 연구 - 영사접견 기능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 이규창 외 11,500원
2019-19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대북 정책 이상신 외 24,000원
2019-20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 종합연구 총론: 평화·경제·화해 협력 구상 서보혁 10,000원
2019-21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쟁점과 이행방안 서보혁 외 14,000원
2019-22 2019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외 19,000원
2019-22-01 평화의식 문항별 분석 박주화 18,500원
2019-22-02 평화의식 문항별 테이블 박주화 14,500원
2019-23 평화교육의 실태와 쟁점: 통일교육과의 접점을 중심으로 조정아 외 12,000원

2019-24 북한 실태 연구: 도시경제의 네트워크와 로지스틱스 홍 민 외 10,500원
2019-25 김정은 시대 서부 주요 도시의 기업현황 및 가동률 결정요인 분석 정은이 외 14,000원
2019-26 남북경협 발전 잠재력과 정책 과제 김석진, 홍제환 10,000원
2019-27 한반도 평화·번영 실현을 위한 국경 협력 현승수 외 14,000원
2019-28 한반도 접경국과의 초국경 관광·교통 협력 최장호 외 10,000원
2019-29 주변국의 사이버 환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채재병 외 8,500원
2019 제3세대 인권과 북한 인도협력연구실 편 16,5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2019-01 한반도 평화협정문 구상과 제안 김상기 외
2019-02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신남방정책 이기태, 배정호
2019-03 국제 비교를 통해 본 북한의 생활수준 김석진, 홍제환
2019-04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가 한국인의 주요 인접국가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를 중심으로 이상신 외

▮ Study Series ▮

2019-01 North Koreans' Current Living Conditions Based on UNICEF Survey Results: With a Focus on the Status of Infant Nutrition Hong, Jea Hwan
2019-02 The Impact of Sanctions on the Enjoyment of Human Rights Do, Kyung-ok · Baek, Sangme
2019-03 South Koreans' Perception on Peace: With a Focus on Peace, War, the Way Peace is Realized, and the Attitude for Inter-Korean Reconciliation Kim, Kap-Sik · Park, Juhwa

2020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20-01 평화경제 실현방안: 국제협력을 중심으로 김석진, 홍제환 10,000원
2020-02 남북한 주민 왕래 및 이주와 혼인에 관한 법적 연구 이규창, 문선혜 10,000원
2020-03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에 관한 연구 김수암 외 9,000원
2020-04 평화-인권-발전의 트라이앵글: 이론적 검토와 분석틀 홍석훈 외 11,000원
2020-05 중·러 협력과 한반도 평화·번영 현승수 외 11,500원
2020-06 한반도 평화번영과 북일관계 연구 이기태 외 8,000원
2020-07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정치적 배경과 법적 기반 분석 민태은 외 8,500원
2020-08 남북기본협정 체결방향과 과제 도경옥 외 9,000원
2020-09 남북연합 구상과 추진방안 이무철 외 11,000원
2020-10 새로운 한반도 구상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김갑식 외 13,000원

2020-11 평화공감대 확산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박주화 외 12,500원
2020-12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정성윤 외 15,500원
2020-13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정은이 외 11,000원
2020-14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나용우 외 14,500원
2020-15 해외의 시각으로 본 신남방·신북방정책의 평가와 과제 나용우 외 17,500원
2020-16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외 14,500원
2020-16-01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문항별 분석 박주화 16,500원
2020-16-02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문항별 테이블 박주화 16,500원
2020-17 '통일에 대한 태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박주화 외 12,500원
2020-18 평화경제의 비전과 추진방향: 남북 육상·해양협력을 중심으로 서보혁 외 20,000원
2020-19 국제 평화경제 사례와 한반도 조한범 외 11,500원
2020-20 북한의 발전전략과 평화경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홍 민 외 18,000원
2020-21 강대국 경쟁과 관련국의 대응: 역사적 사례와 시사점 신종호 외 23,000원
2020-22 북한의 인구변동: 추세, 결정요인 및 전망 홍제환 외 14,000원
2020-23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인구구조 변화 연구 최장호 외 7,000원
2020-24 '지식경제시대' 북한의 대학과 고등교육 조정아 외 13,000원
2020-25 KINU 통일의식조사 2020: 주변국 인식 비교연구 이상신 외 24,500원
2020-26 김정은 정권 통치담론과 부문별 정책 변화: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담화·연설 분석 오경섭 외 14,5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2020-01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인도협력 이규창 외
2020-02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분석과 국내외 정책 전망 민태은 외

▮ Study Series ▮

2020-01 The Peace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Legal Issues and Challenges
Do, Kyung-ok · Ahn, Jun-hyeong
2020-02 Variables and Pathways of Changes in North Korea:
Focused on Different Combination of 'Nuclear Issues' and 'Reform · Opening'
Park, Young-Ja · Jeong, Eun Mee · Han, Ki Bum
2020-03 Daily Lives of North Korean Women and Gender Politics
Cho, Jeong-ah · Yee, Ji Sun · Yi, Hee Young
2020-04 2019 Annual Reports of Attitude of Koreans toward Peace and Reconciliation
Park, Juhwa et al.

2021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21-01 남북 민생협력의 효율적 추진방안: 추진체계, 사업기획 및 성과관리 김석진·홍제환 8,000원
2021-02 북한의 사회불평등 연구: 건강 및 교육 불평등과 인권 최규빈 외 9,000원
2021-03 국가상징의 문화적 형상과 북한의 브랜드 전략 이지순 외 9,000원
2021-04 남북 지식협력: 현황 및 추진방향 김수암 외 9,500원
2021-05 유네스코 공동등재를 활용한 남북 문화유산협력 이우태 외 11,000원
2021-06 미국의 평화정책과 전망: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한미관계 민태은 외 10,000원
2021-07 평화·통일 공공외교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의 역할과 개선방안: 주변 4국을 중심으로 전병곤 외 14,500원
2021-08 동아시아 평화·번영을 위한 비전통 안보 협력 이재영 외 11,500원
2021-09 국제협력 성패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 연구 정성윤 10,500원
2021-10 북한의 정보화와 주민생활 변화 정은미 외 10,500원
2021-11 김정은 지배체제 구축과 권력 안정화 오경섭 외 10,500원
2021-12 김정은 정권의 핵 외교와 대외정책 변화 김진하 외 18,000원
2021-13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경제정책, 대외무역, 주민생활 홍제환·김석진 10,000원
2021-14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정책: 복지와 통제를 중심으로 정은미 외 9,500원
2021-15 KINU 통일의식조사 2021: 통일·북한 인식의 새로운 접근 이상신 외 22,500원
2021-16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의 SDGs 소개와 지표분석 황수환 외 16,000원
2021-17 남북 재해재난 공동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추진방향 나용우 외 16,500원
2021-18 남북 접경지역 재해·재난 대응력 제고를 위한 '방재전이공간(TSDP)' 조성방안 기본 연구 김형수 외 9,500원
2021-19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Ⅰ: 여성과 섹슈얼리티 박영자 외 13,500원
2021-20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Ⅱ: 모성과 양육 이윤진 외 11,000원
2021-21 평화의 인권·발전 효과와 한반도 서보혁 외 11,000원
2021-22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대응: 역사적 사례와 시사점 신종호 외 23,500원
2021-23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주변국 협력 방안 이기태 외 13,000원
2021-24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일본의 대한국 협력 방안 최희식 외 11,000원
2021-25 세계질서의 재편과 신한반도체제 박은주 외 19,000원
2021-26 북한발전모델과 한반도 컨센서스 이재영 외 23,000원
2021-27 한반도 군비경쟁과 평화정착 장철운 외 14,000원
2021-28 한반도 생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협력 방향 모색 최지영 외 16,500원
2021-29 북한 일상생활 공동체의 변화 최지영 외 12,000원
2021-30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김갑식 외 12,000원
2021-31-01 평화공감대 확산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박주화 외 10,000원
2021-31-02 2021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외 11,500원

2021-32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이무철 외 14,000원
2021-33 한반도 신경제구상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정은이 외 14,000원
2021-34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조한범 외 16,5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2021-01 2020년 미 대선 이후 한미관계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 이상신 외
2021-02 북한의 효과적인 SDGs 이행을 위한 공간전략 탐색: 접경지역 산림특구안을 중심으로 황진태·백일순
2021-03 한중 보건 협력과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활성화 방안 황태연
2021-04 통일공공외교 수요조사 이상신·이재원

▮ Study Series ▮

2021-01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Suk-Jin Kim
2021-02 North Korea's Income-Population Puzzle
Jea Hwan Hong · Suk-Jin Kim
2021-03 North Korea's College and University and Higher Education System in an 'Era of Knowledge Economy'
Jeong-ah Cho · Choon Geun Lee · Hyun-suk Oum
2021-04 A Study on the Access to In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People
Soo-Am Kim et al.

KINU Insight

2018-01 2018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2019-01 2019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2019-02 김정은 정권의 정보화 실태와 특징: ICT 부문을 중심으로 정은미
2019-03 미국의 INF조약 탈퇴 의미와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안보 전략에 대한 함의 김주리
2019-04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문화예술적 표상과 시사점 이지순
2019-05 중국의 4차 산업혁명과 북한에 주는 함의 이재영
2019-06 한반도 국제정세의 역동성과 한국의 대응 방향 서보혁
2019-07 신한반도 체제 구상의 이해 조한범
2019-08 최근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정책 과제 김갑식 외
2020-01 북한의 제7기 제5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2020-02 평화의 경제적 가치: 2018 남북 간 주요 군사합의를 중심으로 장철운
2020-03 미국의 對적성국 관계정상화 프로세스와 대북정책 김유철
2020-04 대북제재 강화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 북중무역 감소의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최지영
2021-01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 홍 민 외

2021-02	김정은 시대 주요 전략·정책용어 분석	홍 민 외
2021-03	2014~2020년 북한시장의 소비자물가 및 환율 변동: 추세, 특징, 시사점	최지영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8	한동호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8	한동호 외 24,000원
북한인권백서 2019	김수경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9	김수경 외 24,500원
북한인권백서 2020	이규창 외 21,5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0	이규창 외 27,000원
북한인권백서 2021	오경섭 외 21,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1	오경섭 외 27,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18	2019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19	2020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20	2021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21	2022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정기간행물

통일정책연구, 제27권 1호 (2018)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7, No. 1 (201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7권 2호 (2018)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7, No. 2 (201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8권 1호 (2019)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8, No. 1 (2019)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8권 2호 (2019)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8, No. 2 (2019)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9권 1호 (2020)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9, No. 1 (2020)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9권 2호 (2020)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9, No. 2 (2020)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30권 2호 (2021)	10,000원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0, No. 2 (2021)	10,000원

기 타

2018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 관련 자료집	박주화, 윤혜령 53,500원
2018	북한의 건강권	이금순 외
2018	The Right to Health in North Korea	Lee, Keumsoon et al.
2018	미·중·일·러 한반도 정책 연구 네트워크 다이렉토리	김진하 외
2020	동서 화해사상으로 본 통일공동체의 상과 과제	김범수 외
2020	DMZ 접경지역의 비평화 실태에 관한 인문학적 연구: 전략촌을 중심으로	정근식 외
2021	국제 평화문서 번역집	서보혁·용혜민 엮음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회원 가입신청서

* 표는 필수항목입니다.

신청자 성명* (입금자가 다를 경우 별도 표기)		소 속*	
간 행 물* 받 을 주 소	(우편번호 :) **※ 도로명 주소 기입必**		
연 락 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메일 서비스	수신 ( ) 수신거부 ( )		
회 원 구 분*	학생회원 ( ) 일반회원 ( ) 기관회원 (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일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위탁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도서회원 서비스 제공**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 회원구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금일로부터 1년 (회원자격 갱신 시 보유기간은 1년 연장)**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5. **개인정보 취급업무 위탁 내역(고지사항)**

위탁 받는 업체(수탁업체)	업무내용
㈜ 코리아디엠	발간물 발송 업무 처리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도서 회원 가입 및 발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보내주십시오.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앞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8, E-Mail: books@kinu.or.kr

※ 온라인 신한은행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www.kinu.or.kr

한중 보건 협력과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활성화 방안

비매품/무료
93340
9 791165 890896
ISBN 979-11-6589-089-6

KINU 통일연구원